

I .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1. 1920년대 국내 민족주의 세력의 동향

2. 조선공산당의 성립과 활동

I. 국내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

1. 1920년대 국내 민족주의 세력의 동향

1) 1920년대 전반의 ‘문화운동’

(1) 신문화건설, 실력양성론의 대두

3·1운동의 열기가 과도처럼 한차례 지나가고, 총독부 당국은 소위 ‘문화정치’를 표방하면서 최소한의 출판의 자유를 허용하였다. 이에 따라 간행되기 시작한 여러 잡지와 신문의 초기 지면은 이른바 ‘개조론’과 ‘신문화건설론’으로 장식되었다.

개조론이란 제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전 세계는 정의와 인도, 자유와 평등, 민중분위와 노동분위의 세계로 개조되고 있으니, 이 개조의 시대를 맞이하여 조선민족도 개조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그 골자였다. 개조론자들은 조선의 문화는 너무나 시대에 뒤떨어져 있으며, 따라서 조선민족이 세계개조의 시대적 기운에 부응하여 살아남기 위해서는 ‘조선사회의 개조’가 필요하다고 보았던 것이다.¹⁾ 그리고 이같은 개조를 위해 신문화의 건설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신문화건설론 내부에는 이같은 정의와 인도, 민중분위와 노동분위의 세계를 지향하는 개조론의 입장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다수의 조선 지식인들은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일시나마 정의·인도의 세계가 올 것을 기대했으나 그 기대는 곧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여기서 낙관론적인 입장에서

1) 張道斌, 〈希望과 批評〉(《서울》 3, 1920. 4), 3~4쪽.

본주의를 지향하는 사회주의운동론이 나오게 되었다.

1920년대 초 실력양성론의 입장에서 신문화건설론을 가장 먼저 제창한 것은 《동아일보》였다. 1920년 4월 창간된 《동아일보》는 창간사에서 ‘문화운동’으로서의 민족운동을 제창하고, 그 사회적 방법으로서 ① 조선사람은 한 덩어리가 될 것, ② 널리 세계에 눈을 떠서 문명을 수입하고 완고함을 버릴 것, ③ 경제의 발달을 도모하고, 교육을 확장하며, 악습을 개량할 것 등을 제기하였다.²⁾ 잡지 《개벽》도 1920년 6월호에 실린 이돈화의 글 〈朝鮮新文化建設에 대한 圖案〉에서 우승열패의 법칙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劣者가 된 조선인이 기사회생의 유일한 방법은 실력을 기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실력양성을 위한 신문화건설을 제창하였다. 이 글은 신문화건설의 방법으로서 지식열의 제고, 신교육의 보급, 농촌개량, 도시의 발달, 전문가의 육성, 사상의 통일 등을 제시하였다.³⁾ 물론 일부에서는 정의·인도·노동본위의 세상을 지향하는 신문화건설론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현대적 문명’의 수립이라고 막연하게 표현된 ‘근대사회로의 개조’를 지향하는 신문화건설론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러한 현대적 문명, 신문화의 건설 방법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① 신사상·신지식의 수용과 보급(신교육의 보급), ② 구습의 개혁, 즉 풍속개량, ③ 산업의 진흥 등이 주로 제기되었다. 결국 신문화건설론의 핵심은 실력양성론이었다. 실력양성론은 이미 한말 자강운동기(계몽운동기)부터 제기되어 1910년대에도 신지식층에 의해 주로 주장되어온 국권회복운동론이었다. 이같은 실력양성론이 1919년 3·1운동을 전후한 시기 일시적으로 잠복하였다가 다시 등장한 것이었다.

실력양성론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것은 《동아일보》였다. 《동아일보》는 1920년 8월 미국 하원의원단이 방한한 이후 본격적으로 실력양성론을 제기하였다. 미국 하원의원단은 내한하여 “학술과 공업에 노력하여 모든 것을 향상하라”는 말을 남기고 떠났는데, 이후 이 신문은 이 말을 받아 “세계가 변화한다 하더라도 실력이 없으면 개인이나 민족이나 그 존재를 유지하기 어

2) 《동아일보》, 1920년 4월 7일, 〈세계개조의 벽두를 당하여 조선의 민족운동을 논하노라〉(4).

3) 이돈화, 〈朝鮮新文化建設에 대한 圖案〉(《개벽》 4, 1920. 9).

럽다”면서 실력양성론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하였다. 이어서 1921년 미국에서 열린 워싱턴회의(일명 태평양회의)에서도 한국문제가 전혀 거론되지 않아 “조선독립은 당분간 절망적이므로 우리들 조선인은 힘써 교육·산업과 문화적 시설에 열중하여 실력양성에 주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하게 되었다.⁴⁾ 결국 1922년경에 이르러 실력양성론은 더욱 세력을 얻어 나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시 모든 사람들이 실력양성론을 추종한 것은 아니었다. 워싱턴회의의 결과는 한편으로는 당시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던 사회주의자들의 세력도 강화시켜 주었고, 이는 결국 1921년 말에서 1922년 초 사이의 이른바 ‘사기공산당사건’, ‘김윤식사회장 사건’ 등을 빌미로 한 1922년 4월의 조선청년회연합회의 분열로 이어졌다. 1920년 이래의 문화운동 진영은 이제 그 이념에 따른 분화과정에 들어간 것이다. 이는 기존의 문화운동을 주도해온 민족주의계열에는 큰 충격이었다. 따라서 민족주의자들은 “일면은 내부의 단결을 튼튼히 하여 실력을 양성함에 전력해야 하고, 일면에서는 세계대세의 추향을 경솔히 실패의 편으로 해석하지 말고 더욱 전도의 광명을 기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⁵⁾ 즉 민족운동 진영의 단결을 강조하는 한편, 일부 운동가들의 사회주의로의 경사에 대해 경계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가 하면 3·1운동에 참가하여 구속되었다가 출소한 민족주의자들 가운데에서도 실력양성론에 본래부터 관심이 없었거나 혹은 그 한계를 인식한 이들은 실력양성론을 추종하지 않고, 대신 일제에 대한 비타협적 정치투쟁을 고집하는 이들도 있었다. 이러한 이들에 대해 실력양성론자들은 그냥 기회를 기다리거나 혹은 기회가 올 때마다 시위운동을 통하여 독립을 주장하는 것보다는 기회를 만들고 기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실력을 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즉 직접적인 독립운동보다는 ‘기회에 대비한 준비’로서의 실력양성운동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기회에 대비한 실력양성론’이라 할만한 것이었다.⁶⁾ 그러면 그들은 그 기회가 어떻게 온다고 생각하

4) <太平洋會議ニ對スル金東成所感>(《朝鮮治安狀況》, 1922), 333쪽.

5) 이돈화, <人類相對主義와 朝鮮人>(《開闢》25, 1922), 6쪽.

6) 《동아일보》, 1924년 9월 10일, 사설 <自覺과 準備—오는 時代에 대하여—>.

였을까. 그 기회는 물론 국제정세의 변화, 특히 미일간의 전쟁으로 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한말 이래 신지식층의 일관된 생각이었다. 물론 워싱턴회의는 이들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지만, 조선의 민족주의자들은 미국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었다. 1925년경 宋鎮禹는 “앞으로 4·5년 내에 태평양을 중심으로 한 풍운이 야기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이같이 미일간의 전쟁을 기대하면서도 그들은 “吾人は 外세의 脅迫보다 他力の 援手보다 중심세력의 확립과 자체세력의 해결을 절규”한다고 말하고 있었던 점이다. 즉 국제정세의 변화에 기대를 하면서도 이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나름대로 자체세력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⁷⁾

이와 유사한 논리는 李光洙의 〈민족개조론〉에서도 전개되고 있었다. 그는 조선의 독립은 국제회의에서 조선인에게 선물하듯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조선인의 실력양성에 의하여 조선인이 독립할만한 자격을 가지게 된 연후에 국제적으로 승인받는 절차를 통하여 얻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외교운동만을 통하여 독립을 얻으려는 것은 무모한 일로서 우선은 독립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문명한 생활을 경영할만한 실력을 기르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⁸⁾ “외세의존보다는 自力을 기르면서 독립의 기회를 준비한다”는 것이 1922년경 실력양성론자들이 내세운 슬로건이었다.

이광수의 논리는 실력양성론자들 가운데에서도 가장 철저하게 ‘先실력양성後독립’을 주장하는 것이었는데, 이즈음 다른 실력양성론자들의 주장도 그 기본구조는 마찬가지였다. 그런데 ‘先실력양성 후독립론’은 결국 독립운동의 유보와 실력양성을 위한 문화운동의 우선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는 일제에 대한 저항과 투쟁의 논리는 아니었다. 그것은 결국 일제가 허용한 범위내에서 합법적인 실력양성운동을 펴자는 논리가 되었던 것이다. 또 과연 식민지하에서 실력양성운동이 가능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7) 《동아일보》, 1925년 8월 26일~9월 6일, 사설 〈世界大勢와 朝鮮의 將來〉.

古下先生傳記編纂委員會 편, 《古下宋鎮禹先生傳》(동아일보사, 1965), 190~212쪽.

8) 李光洙, 〈民族改造論〉(《開闢》 23, 1922. 5), 46~47쪽.

있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신문》의 논설이나 申采浩의 논설 등은 바로 이러한 점들을 지적하면서 문화운동을 격렬히 비판하였다. 신채호는 “강도의 비위에 거스르지 아니할만한 언론이나 주창하여 이것을 문화발전의 과정으로 본다면 그 문화발전이 도리어 조선의 불행”이라고 지적하고, 문화운동자를 “강도정치하에서 기생하려는 주의를 가진 자”라고 비판하였다.⁹⁾ 《독립신문》에 실린 글은 “금일 한국의 內地에서 어디 가서 한국인 如意의 殖産을 장려할 수 있으며 지금 한국 천지에 어디 가서 한국인 자유적 문화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만일 있다 하면 그것은 부스르기뿐이요, 농락적 이해타산적으로 許하는 것일 뿐일 것이다”라고 비판하였다.¹⁰⁾ 이들은 일제 지배하의 국내에서 실력양성, 문화향상을 내세우는 문화운동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2) 청년회 운동

앞서 본 것처럼 1920년의 초기 문화운동은 ‘신문화건설’을 주창하였다. 그리고 신문화건설의 방법론으로서 제시된 것은 신교육보급·수양·풍속개량·농촌개량의 네 가지였다. 이러한 주장들은 1921년 경부터 본격 대두한 실력양성론과 함께 이후 ‘문화운동’의 주요 슬로건이 되었다. 여기서 수양이 강조된 것은 사회의 개조를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개인의 개조, 즉 수양이 필요하다는 논리 위에서였다. 풍속개량은 구관습개혁으로 표현되기도 했는데, 여기서 구관습은 관혼상제, 반상의 관습과 의식, 조혼, 의복, 지방관념, 무조건적인 노인숭배관념, 가족주의, 노동천시풍조 등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농촌개량은 농촌에서의 교육·산업·도덕·관습 등 모든 분야에 걸친 개량을 의미했다.

이와 같은 문화운동의 주된 실행기관으로 설정된 것은 청년회였다. 청년회는 3·1운동 이전에도 비록 소수이지만 존재했었다. 그러나 1919년 말부터 1921년 사이 전국 각지에서 청년회 설립 붐이 일어나 청년회는 엄청난 수로 증가하였다. <표 1>은 전체 사회단체 가운데 청년회가 차지한 비중과 그 급격한 증가추세를 잘 보여준다.

9) 申采浩, 〈朝鮮革命宣言〉(《개정판 丹齋申采浩全集》下), 38~40쪽.

10) K. H., 〈獨立運動〉(《獨立新聞》, 1922년 10월 30일).

〈표 1〉 1920년대 초 각종 사회단체 현황

연 도	정 치 사회	노 동	소 작 인 회	청년회	종 교 청년회	금 주	수 양	사 교	부인회	산 업	교 육
1920	11	33	0	251	98	46	25	1	12	83	19
1921	18	90	3	446	226	71	126	201	15	189	64
1922	19	81	23	488	271	75	84	146	29	195	114

* 〈조선인단체조사비교표〉(《조선치안상황》, 1922년), 179~180쪽.

〈표 1〉에서 보는 청년회 외에도 수양·사교·금주 등의 단체도 사실은 청년회와 성격을 거의 같이하는 단체였다. 당시 청년회는 ‘청년구락부’·‘청년수양회’ 등의 각종 명칭으로 조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 종교단체 안에도 엠윗청년회 등 청년회에 포함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았다. 종교계의 청년회를 제외하더라도 이 시기 설립된 청년회는 약 500~600개에 달하였다.

각 도별 청년회의 분포는 〈표 2〉와 같다. 여기서 보면 황해도와 전남·경남북의 청년회 수가 다른 도에 비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표 2〉 각 도별 청년회 분포상황

연 도	경기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황해	평북	평남	강원	함북	함남	계
1920	2	10	13	24	28	20	29	44	21	28	15	11	6	251
1921	22	10	17	30	44	49	58	78	14	33	15	57	19	446
1922	14	12	22	13	84	54	66	91	13	39	24	28	28	488

* 《조선치안상황》(1922), 179쪽.

이 시기 조직된 청년회는 대체로 이른바 ‘유지청년’들에 의해 주도되었지만, 일부 청년회는 3·1운동에 참여한 청년들이 주도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이들 청년회 가운데 일부는 겉으로는 ‘수양’을 내걸고 속으로는 대중들의 민족의식을 고취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예를 들어 평안남도 지사는 1921년 4월 도지사회의에서 “작년 3·4월 경부터 종교에 관계된 청년회 및 보통청년회가 앞을 다투어 각지에서 설립되어 작년 말 즈음에는 본도 내에 124개 단체, 회원 1만 3,088명을 헤아리게 되었다. 그 가운데 온건한 단체는 겨우 27

개에 지나지 않고 대개 걸으로는 청년의 품성향상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하고 있으나 이면은 모두 불온한 것이다. 그 단체의 牛耳를 잡고 있는 자 가운데 다수는 위험인물 혹은 전과자들로서 자주 강연회 등을 열어 기교한 연사를 농하여 인심을 미혹하게 하였다. 그런데 근래는 민심이 안정됨에 따라서 불온분자의 청년회는 점차 해산하고 지금은 선량한 것이 남아있는 실정이다”고 말하였다.¹¹⁾ 또 일부 청년회는 독립운동을 위해 상해의 대한민국임시정부와 연락을 취하려 하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평안북도 회천군 신평면의 청년회가 그러한 예였다.¹²⁾

당시의 청년회들이 내면적으로는 민족의식 고취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외면적으로는 대부분 ‘문화운동’의 취지에 따라 수양·농촌개량·풍속개량 등을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였다. 즉 ① 수양을 위한 지·덕·체의 함양, ② 풍기의 개선, 즉 교풍, ③ 실업의 장려, ④ 공공사업의 지원 등을 설립목적으로 내걸고 있었다. 특히 ‘유지청년’들이 주도하던 청년회는 ‘민족의식’ 고취보다는 ‘문화운동’에 더 관심이 많았다. 당시 청년회를 적극 후원, 지도하고 있던 《동아일보》도 청년회의 목적이 신사회의 건설(사회의 혁신), 지식을 천하에 구함, 일치단결, 德·義의 존중, 신체건강, 산업의 진흥, 세계문화에의 공헌 등에 두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¹³⁾

이같은 취지에 따라 당시 청년회는 주요 사업으로서 지·덕·체의 함양을 위한 신문·잡지의 구독 열람, 강연회·토론회·야학의 개최, 運動會·遠足會 등의 개최, 민풍개선 사업, 농촌개량사업 등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사업 가운데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진 사업은 강연회·토론회·야학·운동회 등이었다. 강연회와 토론회는 ‘문화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대중들의 의식을 깨우치려는 가장 중요한 장으로서 활용되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민족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장으로도 활용되었을 것이다.

전국 각지에서 청년회가 우후죽순처럼 설립되기 시작하자 《동아일보》는

11) 朝鮮總督府, 《道知事會議速記錄》(1921. 4), 44쪽.

12) 《동아일보》, 1921년 5월 26일, 〈독립을 목적인 청년회원〉.

13) 《동아일보》, 1920년 7월 9일, 논설 〈청년회연합에 대하여 각지 同會에 更告 하노라〉.

곧 각지 청년회의 연합을 제창하고 나섰고, 1920년 6월 28일 서울에서 각계 인사 53인이 모인 가운데 ‘전조선청년회연합회’가 발기되었다. 청년회연합회는 그 주의로써 “吾人은 세계개조의 기운에 순응하여 各人의 天賦한 생명을 창달하며 민족의 고유한 生榮을 발휘”할 것을 목표로 내걸었다. 그리고 7가지 강령을 내놓았는데 그것은 사회를 혁신함, 지식을 널리 구함, 건전한 사상으로 단결함, 德義를 존중함, 건강을 증진함, 산업을 진흥함, 세계문화에 공헌함 등이었다.¹⁴⁾ 청년회연합회는 뒷날 이에 대해 설명하면서 위의 ‘사회를 혁신함’이란 구습·폐습의 개혁을 의미하며, ‘건전한 사상으로 단결함’이란 인격수양·지식교환·문화발전주의를 중심으로 단결하며, 정치적 의미는 추후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¹⁵⁾

1920년 12월 2일 조선청년회연합회는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창립 당시 이 회에는 모두 224개 청년회가 회원단체로 참여하였다. 창립대회 직후의 간담회에서 安廓·張德秀·李秉祚 등이 “우리 청년회는 오직 수양을 목적하는 것이 제일주의이니 신중하야 他에 간여치 않는 범위 내에서 인격을 自成하기를 노력”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연합회의 수양단체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였다.¹⁶⁾

그러나 청년회운동은 1921년 초에 들어서면서 주춤하기 시작하여 점차 그 활동이 침체상태로 들어갔다. 각 단체는 통상회가 열리는 날 출석자가 전 회원의 3분의 1도 되지 않아 개회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늘어났고, 회비 수납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 이같은 활동 부진에는 여러 이유가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주도층에 있었다. 당시 청년회를 이끈 주도층은 이른바 ‘유지청년’들로서 그들은 청년운동에 대한 확고한 전망이나 의지도 없이 분위기에 휩쓸린 지식청년들이거나, 아니면 청년회장 등 명예를 탐낸 지방유지들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假志士 假紳士’로 비판받기도 하였다.

이러한 청년회가 다시 활성화된 것은 1923년 봄 각지의 청년회에서 혁신운동이 일어나고, 그들이 그해 3월 말 서울청년회의 주도하에 열린 조선청년

14) 《동아일보》, 1920년 7월 16일.

15) 吳祥根, 〈聯合會와 主義 綱領〉(《我聲》 1, 1921. 3), 16~21쪽.

16) 〈聯合會 彙報〉, 위의 책, 98쪽.

당대회의 깃발 아래 모이면서부터였다. 조선청년당대회에 참여한 청년회는 모두 94개 단체였는데, 이들은 이 대회 이후 점차 청년회의 운동방향을 사회주의운동쪽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그해 4월 초에 열린 조선청년회연합회의 4회 총회에 참여한 청년회가 겨우 35개 단체에 지나지 않았던 것은 당시 청년회운동의 추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같은 청년회운동의 방향 전환은 이 시기 전개되고 있던 민립대학기성운동과 물산장려운동의 지방조직이 무너진 것을 의미하였다. 청년회운동은 이제 실력양성·수양·구급개발 등의 ‘문화운동’에서 벗어나 사상운동, 노동·농민운동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었다.

(3) 학교설립운동

가. 학교설립운동의 배경

1920년대 초 문화운동론자들은 신교육을 보급하기 위한 학교설립운동을 제창하였다. 신교육보급론은 우선 앞서 살핀 실력양성론과 연관되어 일어났다. 당시 실력양성의 구체적 방법으로 제시된 것이 신교육의 보급과 산업의 진흥이었다. 이 가운데 신교육보급이 실력양성의 주요 수단으로 거론된 것은 “교육은 국가와 민족의 부강을 가져오는 근본적인 힘”이라는 인식과 관련되어 있었다. 즉 민족의 사활·흥망의 문제는 교육에 달려있다는 것으로, 그러한 실례로서 흔히 독일·프랑스·일본과 인도·중국의 경우가 대비되어 설명되었다.¹⁷⁾ 신교육보급론은 또 ‘신문화건설론’과도 관련되어 있었다. 즉 세계개조의 시대적 기운에 부응한 ‘조선사회의 개조’와 이를 위한 신문화건설이 제창되면서 신문화건설, 즉 현대적 문명의 수립을 위한 신교육보급론이 절실하게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당시 한 논자는 산업발달에도 지식이 필요하고, 사회제도의 개선에도 지식이 필요하고, 자연개척과 이용에도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목하 조선인이 신시대를 당하여 신사회를 건설코자 함에 가장 필요한 것은 각 방면의 전문지식이요, 또한 보통학문”이라고 주장하였다.¹⁸⁾ 그러면 전문지식과 보통학문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17) 朴達成, 〈時急히 解決할 朝鮮의 二大問題〉(《개벽》 1, 1920), 24쪽.

18) 《동아일보》, 1922년 9월 28일, 사설 〈평남교육협회에 대하여—文運의 促進〉.

‘교육’을 통해서였다. 즉 ‘교육’은 신문화건설의 관건이었던 것이다.

1920년대 초 신문화건설론과 함께 시작된 ‘문화운동’을 통해 교육의 중요성이 점차 대중들에게 인식되기 시작하여 이른바 ‘향학열’이 거세게 일어났다. 당시 총독부 당국자에 의하면 “소요(3·1운동) 이전에는 면장과 경찰서장이 극력 취학을 권유해도 정해진 수의 취학아동을 얻는 것이 극히 어려웠는데, 소요 이후 일변하여 학교는 문전성시가 되었다”고 놀라움을 표시하였다.¹⁹⁾ 당시 한 논자는 향학열이 일어나게 된 원인에 대해 “목하 과학지식에 낙오된 우리, 생존경쟁의 劣敗者된 우리로서 장차 막연한 우리의 생활 前路를 개척하여 남과 같이 살자면 반드시 남과 같이 알아야 할 것이며, 남과 같이 배워야 하겠다는 것이 금일 우리 조선인의 향학열을 도발케 한 원동력”이라고 설명하였다.²⁰⁾

이러한 향학열의 급격한 고조는 결국 학교수의 부족으로 입학난을 초래하였다. 1922년 공사립보통학교의 경우 7만 4,891명 모집에 입학지원자가 13만 4,437명이 몰려들었다. 이러한 입학난은 서울의 경우 더욱 심각하여 1,184명 모집에 4,485명이 지원하여 경쟁률은 4대 1에 달하였다.²¹⁾ 고등보통학교의 경우에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1922년 사립고등보통학교의 경우 1,396명 모집에 4,883명이 지원하였던 것이다.²²⁾ 이같이 입학난이 극심하게 된 것은 학교수가 근본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1919년 현재 관공립 보통학교는 6개 면에 1개교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며, 다소 늘어난 1923년에도 공립보통학교는 전국에 1,059개교로 2~3개 면에 1개교에 지나지 않았다. 고등보통학교는 관립 12개교, 사립 8개교에 지나지 않았으며, 수용학생은 모두 10,300명에 불과하였다.²³⁾ 이외에도 ‘각종학교’라는 이름으로 사립학교들이 있었지만 역시 입학자를 수용하기에는 태부족이었다. 여기에서 각종 학교설립운동 혹은 학교교육을 대신해줄 수 있는 각종 강습소와 야학 설립운동이 크게 일어났 것이었다.

19) 松村松盛, 〈變り行く朝鮮の姿〉(《朝鮮統治の回顧と批判》1, 1936), 199~200쪽.

20) 金秉濬, 〈新學期 入學難과 우리의 覺醒〉(《개벽》23, 1922), 98~99쪽.

21) 《동아일보》, 1922년 4월 3일, 〈數字가 證하는 入學難〉.

22) 萩原彦三, 〈朝鮮の教育に就いて〉(《第3回 地方改良講習會講演集》, 1923), 270쪽.

23) 萩原彦三, 위의 글, 270~271쪽.

전문학교와 대학교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였다. 1923년 현재 전문학교는 관립 5개교, 사립 3개교가 있을 뿐이었다.²⁴⁾ 이들 전문학교는 고등교육기관이라기보다는 전문기술인력 양성소였다. 따라서 고등교육을 원하는 학생들은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로 유학을 떠나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1921년에 일본에 유학중인 학생은 모두 1,200명에 달하였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중등학교에 유학한 경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영국·독일 등지로 유학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났다. 이처럼 유학생이 격증하자 국내에서는 ‘민립대학’을 만들자는 논의가 일어난 것이다.

나. 각종 학교 설립운동

1920년대 초 총독부측은 높아진 향학열에 응하여 공립학교 증설을 발표하였지만 3면 1개교를 원칙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늘어나는 입학지원자를 감당할 수 없었다. 이에 각 지방의 유지들은 사립보통학교 설립운동을 시작하였다. 예를 들어 전북 고창에서는 기존의 각종학교로 되어 있던 사립학교를 몇몇 유지들이 기금을 보태어 사립보통학교로 바꾸어 놓았다.²⁵⁾ 충남 대전에서는 대전교육회가 기금을 모아 사립보통학교를 세웠으며, 금산군 부귀면 등에서도 역시 민간유지들이 기금을 모아 사립보통학교를 설립하였다.²⁶⁾ 하지만 각 지방의 면단위에서 사립보통학교를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다고 해서 각종학교로 분류되어 불이익을 받게 되는 사립학교는 학생들이 기피하였기 때문에 한말과 같은 대대적인 사립학교 설립운동도 일어나기 어려웠다.

여기서 당시 학교 설립운동의 중심이 된 것이 사립고등보통학교 설립운동이었다. 그것은 고등보통학교의 입학난이 다른 어느 학교의 경우보다 심각했기 때문이었다. 통영·부산·공주·천안·진주·재령·강릉 등지에서 사립고등보통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기성회가 설립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사립고보

24) 관립전문학교로는 법학전문학교·고등상업학교·의학전문학교·고등농림학교가 있었고, 사립전문학교로는 세브란스의학전문학교·연희전문학교·보성전문학교가 있었다.

25) 《동아일보》, 1921년 3월 22일, 〈高敞 有志의 教育熱〉.

26) 《동아일보》, 1922년 7월 12일.

설립운동은 거의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것은 각도 당국에서 고보설립 기성회가 낸 기부금 모집에 관한 허가원을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총독부 당국은 “기부금을 대규모로 모집하면 정세에 영향이 크다”는 각종 구실을 붙여 고보설립운동을 방해하였다. 따라서 1923년까지도 사립고보는 전국적으로 8개교(여자고보는 5개교)에 지나지 않았다.²⁷⁾

각급학교 설립운동은 마침내 1923년 민립대학기성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민립대학기성운동은 1920년 6월 조선교육회 발기회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문리과·농과·상공과·의과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립대학을 설립한다”고 결의한 것이 그 발단이 되었다.²⁸⁾ 이후 《동아일보》는 1922년 2월 〈신교육령〉의 발표에 즈음한 논설 〈민립대학의 필요를 제창하노라〉에서 〈신교육령〉에 조선에서의 대학교육은 일본의 〈대학령〉에 의거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조선에서도 대학교육이 가능하게 되었다면서 민립대학의 설립을 제창하였다.²⁹⁾

민립대학기성준비회는 1922년 11월 23일 李商在·玄相允·崔奎東 등에 의해 구성되었다. 민립대학기성준비회는 각 군별로 2~5인의 발기인을 선발하기로 하고, 그 선발은 각 군의 민간단체의 협의에 일임하였다. 이에 따라 각 군에서는 주로 청년회가 중심이 되어 긴급회의를 열어 군내 유지들을 초청·협의하여 발기인을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전국에서 선출된 발기인은 모두 1,170명에 달하였고, 그 가운데 462명이 모여 1923년 3월 29일 발기총회를 가졌다. 기성회는 발기총회에서 사업계획을 확정하였는데, 그것은 제1기 사업으로 기금 400만원을 모아 학교터 5만 평을 사서 교실 10채와 대강당을 짓고 법과·문과·경제과·이과 등 4과를 설치하며, 제2기에는 300만원으로 공과를 신설하고, 제3기에는 300만원으로 의과·농과를 설치한다는 것이었다.³⁰⁾ 또 총회에서는 6가지 사항을 결의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회원은 會金 납부자로 하며, 경성과 지방에는 각각 중앙부와 지방부를 두고, 중앙부와 지방부는 각기 집행위원을 두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방에서는 발기

27) 朝鮮毎日新聞社, 《朝鮮始政十五年史》(1925), 262쪽.

28) 《동아일보》, 1923년 6월 23일.

29) 《동아일보》, 1922년 2월 3일, 사설 〈민립대학의 필요를 제창하노라—富豪의 一考를 促함〉.

30) 《동아일보》, 1923년 3월 30일, 〈개회된 民大總會〉.

인들을 확장 모집하여 지방부를 결성하게 되었다. 예를 들어 안성군의 경우 발기인들을 더 모아 12개 면의 유지 120여 명을 발기인으로 하여 5월 6일 안성군 지방부를 창립하였다.³¹⁾ 각 지방부에서는 강연회 등을 통하여 이 운동의 취지를 설명하고 회원과 기금을 모집하는 일에 열중하였다. 기금 모집 방법은 대체로 지방유지와 부호로 구성된 지방부의 집행위원들이 상당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액수를 전 군민이 호당 얼마씩 차등을 두어 부담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러나 이 운동은 예상보다 성과가 크지 않았다. 우선 지방부가 조직된 군도 예상보다 훨씬 적었다. 또 각 지방부의 활동도 1923년 6월 경까지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지만 9월 이후에는 그 기세가 크게 꺾였다. 그것은 1923년 봄 이후 조선청년당 대회에 참석한 각 지방의 청년회들이 실력양성운동 노선을 버리고 사회주의운동 노선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조선청년당대회에 참석한 일부 청년회들은 물산장려운동과 민립대학기성운동 ‘타도’를 결의하고 있었다. 이로써 민립대학기성운동은 사실상 지방 조직을 상실한 셈이었다.

또 이 운동은 부호들의 후원에 크게 의지하고 있었는데, 이 즈음 각 지방의 부호들은 지방자치 실시 등으로 점차 친일화하는 경향이 있었다. 따라서 부분적이거나 민족적 색채를 띠고 있는 이 운동에 그들이 열성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당시 각 지방에서 알게 모르게 가해진 관헌의 방해공작도 모금활동에 큰 지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부호들이 이에 적극 참여하는 것을 견제하였다. 그리고 총독부측은 1923년 관립대학 설립 방침을 발표하고, 11월 대학창설준비위원회를 만들었다. 1924년 봄에는 일본 추밀원회의에서 <경성제국대학령>이 통과되었고, 1925년 6월에는 개교를 보기에 이른다. 총독부측의 경성제국대학 설립이 민립대학설립에 대한 견제로부터 시작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었다. 여기에 덧붙여 1923년 9월 관동대지진과 1924·1925년 계속된 旱災와 홍수는 모금활동을 사실상 더 이상 계속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결국 이 운동은 1924년 여름 이후 중단상태에 빠졌다.

31) 《동아일보》, 1923년 5월 12일, 〈民大安城郡部〉.

다. 야학과 강습소의 개설

1920년대 초반 교육진흥운동은 한편으로는 학교설립운동으로 진행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서당개량운동, 야학과 강습소의 개설운동이 전개되었다.

서당의 개량이란 구래의 서당에서 한문만이 아니라 일본어·조선어·산술·지리·역사 등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하였다. 개량서당은 이미 1910년대 사립학교가 탄압을 받으면서 등장한 것이었는데, 1920년대 초 문화운동론자들은 교육열의 고조와 그에 따른 입학난과 관련하여 서당개량론을 활발히 개진하였다. 당시 서당의 실정을 보면, 1911년 16,540개에서 1915년 2만 3,441개, 1920년 2만 5,492개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었다. 서당에 수용되는 학생수도 1920년에는 29만 2,625명으로 각종 초등학교 학생 총수 15만 7,851명의 2배 가까운 수를 기록하고 있었다.³²⁾ 이를 볼 때 당시 서당이 초등 수준의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 당시 서당교육은 1918년에 만들어진 <서당규칙>에 의해 교과내용과 교과서 등에서 관의 감독을 받게 되어 있었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는 교사의 자격이 없었다. 도 장관은 유해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당을 폐쇄할 수 있게 되어 있었다. 따라서 개량서당의 교육 내용도 부분적으로는 자율적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일제의 식민지 교육방침의 통제하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주야학강습소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 하나는 입학난 혹은 가정형편 등으로 인해 학교교육을 받기 어렵게 된 아동을 상대로 한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노동자·농민을 상대로 한 것이었다. 주야학강습소는 주간의 경우에는 ‘강습소’(혹은 강습회)라 불렸고, 야간의 경우에는 야학이라 불렸다. 1920년대 초의 강습소는 대체로 각 지방의 유지·청년회·개량적 노동운동단체·종교단체에 의해 설치되었으며, 특히 각 지방청년회는 대부분 강습소 설치를 주요 사업으로 설정하고 있었다.

이들 강습소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1922년 5월 현재 경남지방에서만 223개소의 강습소가 14,155명의 학생을 수용하고 있었다. 이는 당시 경

32) 노영택, 《일제하 민중교육운동사》(탐구당, 1979), 98~101쪽.

남의 각종 초중등학교 재학생 3만 1,990명과 1,567개 서당의 학생 1만 9,274명의 수와 비교할 때 결코 적은 것이 아니었다.³³⁾ 그런데 이들 사설 강습소는 1913년의 <사설학술강습회에 관한 건>에 의해 설치 자체가 허가제(도지사의 인가제)로 되어 있었고, 강습 기간도 1년으로 되어 있었다. 따라서 강습소의 학기는 1년의 단기로 될 수밖에 없었으며, 교사도 초등학교 졸업자가 다 수여서 교육의 질은 높아질래야 높아질 수 없었다.³⁴⁾ 물론 교과목은 보통학교의 그것과 별다름 없이 조선어·일본어·한문·산술 등으로 되어 있었으나, 이 강습회가 흔히 ‘통속교육’이라 불렸던 데에서 드러나듯이 그 수준은 낮은 것이었다. 하지만 주야학강습소는 당시 학교가 부족한 상황에서 주로 노동자·농민과 그들의 자녀들에게 최소한의 신교육을 보급하는 구실을 한 것은 틀림없다고 할 것이다.

(4) 물산장려운동

가. 물산장려운동의 배경

1923년 한때 크게 일어났던 物産獎勵運動의 배경에는 당시 조선인 토착자본이 처해있던 급박한 상황과 당시 문화운동의 핵심적 논리의 하나였던 경제적 실력양성론이 놓여 있었다. 먼저 당시 조선인 토착자본이 놓여 있었던 상황을 살펴보자. 일본 자본주의는 호황기였던 제1차 세계대전이 종료된 이후 공황기에 빠져들었다. 이에 일본 자본주의는 ‘과잉생산에 따른 공황’을 돌파하기 위해 식민지 조선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즉 그동안 식량과 원료의 공급기지로 주로 활용해오던 식민지 조선을 한편으로는 이제 과잉생산된 상품의 수출시장으로서, 다른 한편으로는 과잉축적된 자본의 수출시장으로서 그 용도를 확장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여기서 일본정부는 1910년 ‘한일병합’ 때 서구열강에 1920년까지 유보하기로 약속하였던 조선에 대한 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일본의 자본가들은 일본과 조선과의 관세가 일본과 조선의 경제권을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만드는 요인이라

33) <조선문화의 기본조사>(《개벽》 34, 1923. 4), 5~10쪽.

34) 노영택, 앞의 책, 156~157쪽.

면서 ‘일선융화’를 해치는 관세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었다.³⁵⁾ 그러나 당시 총독부의 재정수입에서 관세는 지세수입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전면 철폐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일본정부와 총독부는 1923년 4월 관세 수입의 약 반을 남기는 선에서 기존의 관세를 조정하였다. 이 때 관세가 그대로 유지된 것은 주류와 직물류였다. 1920년 8월 이후 관세 철폐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동아일보》 등 조선의 각 언론매체는 이 관세의 철폐가 일본산 상품이 조선에 물밀듯 밀려와 한국시장을 독점하여 자본과 기술에서 열세에 놓여 있는 조선의 공업을 형적도 없게 만들 것이며, 총독부 수입을 감소시켜 조선인들의 조세부담을 증가시키게 될 것이라면서 강력히 반대하였다.³⁶⁾

한편 일본자본의 조선진출도 본격화되고 있었다. 1920년의 〈회사령〉 철폐는 일본 자본의 조선 진출에서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후 일본자본의 조선진출이 활발해졌다. 제조공업의 신설 회사의 경우 1917년 5개사, 1918년 7개사에서 1919년에는 17개사, 1920년에는 16개사로 늘어났다. 상업회사의 경우에도 1917년 5개사, 1918년 8개사에서 1919년 23개사, 1920년 56개사로 신설회사가 늘어났다. 반면에 조선인 토착자본의 수는 그리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 제조공업의 경우, 1919년 1개사, 1920년 5개사, 1921년 1개사가 신설되었고, 상업부문에서는 1919년 17개사, 1920년 18개사, 1920년 8개사가 늘어났을 뿐이었다.³⁷⁾ 1921년 2월 현재 각종 회사의 상황을 살펴보면 조선인설립회사는 63개사에 공칭자본 23,404,700원, 불입자본 11,403,615원인 반면, 일본인설립회사는 280개사에 공칭자본 157,225,400원, 불입자본 83,375,962원이었다. 즉 한국인 설립회사는 숫자상으로 일본인 설립회사의 22.5%에 지나지 않았으며, 불입자본금에서는 13.7%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³⁸⁾ 그리고 조선인 회사는 대부분 영세한 것으로서, 1930년의 통계에 의하면 전체 2,093개 공장 가운데 노동자 5~49명을 고용한 공장은 2,031개로 전체의 97%를 차지

35) 有吉忠一, 〈思ひ出のまゝ〉(《朝鮮統治の回顧と批判》, 朝鮮新聞社, 1936), 71쪽.

36) 《동아일보》, 1920년 7월 10~12일, 사설 〈關稅撤廢와 朝鮮産業〉.

37) 《朝鮮銀行會社要錄》(1921).

38) 《동아일보》, 1921년 2월 26일, 〈各種 會社の 近況〉.

하였다. 반면에 50~99명 고용은 42개, 100~199명 고용은 12개, 200명 고용은 8개에 지나지 않았다.³⁹⁾

이처럼 영세한 처지에 놓여 있던 조선의 토착자본은 밀려오는 일본자본과 일본상품 앞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토착자본은 우선 총독부권력에 구원의 손길을 내밀었다. 하지만 당시 총독부측은 식민지 조선을 일본 자본주의의 식량과 원료의 공급지·상품의 소비시장·자본진출지로서 재편하기 위한 정책을 세우고 있었고, 이를 위해 1921년 9월 산업조사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총독부측에서 조선의 산업정책을 세우기 위해 산업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소식이 있자, 조선인들도 이에 대응하여 ‘조선산업대회’(위원장 박영효)를 창립하여 총독부측에 조선인 본위의 산업정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다.⁴⁰⁾ 당시 《동아일보》도 수차에 걸친 사설을 통해 조선인산업은 정치·사회적으로 보호·장려를 받지 않으면 진보·발전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⁴¹⁾ 조선인들의 이같은 요구와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해 9월 열린 총독부의 산업조사위원회는 조선에서의 산업정책의 기본방침은 일본제국의 산업정책에 순응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이렇게 되자 조선인 실업가들은 크게 실망하였고, 그들을 대변하던 《동아일보》는 산업조사위원회의 결의안에 대해 맹렬히 비난을 퍼부었다. 즉 산업조사위원회의 결의안은 결국 한국의 경제를 일본에 완전히 예측시키는 일본인 본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었다.⁴²⁾ 이로써 조선인 토착자본의 기대는 완전히 무너졌고, 《동아일보》는 이제 일본인과 조선인 사이에는 ‘경제적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조선인 자본가들의 분발을 촉구하였다. 이 신문은 한국인들은 ‘경제적 戰場’에 섰으며,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근면·단결·선진제국의 경험 흡수 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⁴³⁾ 그러나 이러한 대책들은

39) 정진상, 〈일제하 한국인 토착자본의 성격〉(《한국근대농촌사회와 일본제국주의》, 문학과 지성사, 1986), 209쪽.

40) 《동아일보》, 1921년 8월 1일, 〈조선인산업대회 창립경과〉·9월 14일, 〈산업대회 결의안〉.

41) 《동아일보》, 1921년 6월 10일, 사설 〈産業調査會의 설치—文化政治의 表徵乎〉.

42) 《동아일보》, 1921년 9월 23일, 사설 〈産業調査會의 決議案—朝鮮人 本位の 本대로 日本人 本位の 政策〉.

43) 《동아일보》, 1921년 9월 24일, 사설 〈産業發達에 대하여 朝鮮人에게 警告하노

매우 원칙적인 것으로 조선인 토착자본은 사실상 속수무책의 상황에 처해 있었다. 여기서 토착자본측은 1922년부터 ‘토산품 애용’이라는 슬로건을 들고 나오면서 자구책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다음 1920년대 초 문화운동의 핵심적 논리는 실력양성론이었고, 실력양성론의 핵심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실력양성론’이었다. 경제적 실력양성론자들은 정치적 권리의 요구에 앞서 경제적 실력을 양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정치는 결국 실력의 관계이며, 권리는 결국 실력의 표현”이라면서, “현대의 정치적 중심은 … 유산계급 즉 자본가에 있다. 이와 같은 시대에 처하여 경제적 능력이 없이 정치적 권리를 요구한들 그 하등의 소용이 있으며 설혹 정치상 권리를 획득한들 경제적 능력이 없으면 또한 하등의 소용이 있으리오”라고 하여,⁴⁴⁾ 경제적인 실력의 양성이 정치적 권리의 주장에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도모하려면 정치적 방면의 활로도 있고, 기타 각 방면으로도 활로가 있겠지만 가장 긴요한 것은 경제적 방면의 활로”라고 주장하였다.⁴⁵⁾ 경제적 실력양성론자들은 이처럼 경제문제가 정치적 문제, 즉 ‘독립’의 관건이 된다고 보고 있었다. 여기서 경제적 실력양성을 위한 ‘물산장려운동론’이 대두하였던 것이다.

물산장려운동이 처음 시작된 곳은 1920년 8월의 평양이었다. 曹晩植 등 70명의 평양 유지들은 ‘조선물산장려회’를 발기하고 ‘자작자급’, 즉 조선물산의 장려를 위한 운동을 펼칠 것을 제창하였다. 그들은 조선이 이렇게 빈약하게 된 近因은 자작자급을 하지 않은 데 있다고 주장하고 부득이한 물품 이외에는 철저히 자작자급을 실행하고, 일보 나아가 상공업에 착수하여 직접으로 실업계의 진흥을 꾀하고 간접으로 사회의 발전과 진보를 기한다는 취지를 내걸었다. 하지만 조선물산장려회는 2년 가까이 창립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1922년 6월 22일에야 창립을 보았다.

그런 가운데 앞서 본 경제적 실력양성론은 계속 제기되었고, 1922년 초 《동

라一産調會 決議案에 대하여>.

44) 《동아일보》, 1921년 8월 16일, 사설 〈경제적 능력과 정치상 권리—경제는 정치의 기초〉.

45) 《동아일보》, 1922년 12월 26일, 사설 〈내살림은 내것으로〉.

아일보》는 ‘자작자급운동’을 펼 것을 제창하였다. 이 신문은 “조선민중이 힘을 갱신하여 理想을 달성하는 제일의 방법은 富力의 증진”에 있다고 주장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해 ① 조선인은 조선인 상점에서 물건을 사고 조선인 상인을 통하여 팔고, ② 조선인은 조선인이 만든 물품을 사용하며 조선인의 편익을 도모하고, ③ 이같이 하여 경제적 자립을 기하되 근면·검소·저축·협동을 하고, 경제적 지식을 획득하며, 과학적 경영방법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⁴⁶⁾ 이는 자작자급운동의 방침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었다. 또 1922년 4월에 열린 조선청년회연합회 제3회 정기총회는 조선인은 산업발달에 대한 기본권을 소유한다는 것을 선언하고, 실행사항으로서 ① 조선인은 근면 노력하여 산업상 기술과 지식을 修得하여 산업적 권리의 확충을 기할 것, ② 조선인은 생산과 소비를 일치단결하기 위하여 소비조합·생산조합·소작인조합의 조직 발달을 기할 것, ③ 조선인은 조선인의 제조품을 사용하며 조선인 상인을 통하여 매매할 것 등을 의결하였다.⁴⁷⁾

하지만 물산장려운동은 1922년 여름까지도 아직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못하였다. 물산장려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만든 것은 그해 10월 총독부와 일본 대장성이 1923년 4월부터 일본과 조선 사이의 관세를 대부분 철폐하는 안을 협의하여 곧 일본의회에 상정할 것이라는 보도였다. 이러한 보도는 조선인 토착자본가들의 위기의식을 크게 고조시켰다. 이에 따라 각 신문과 잡지에는 본격적으로 자작자급운동을 호소하는 글이 실리기 시작했다. 예를 들어 《東明》에는 薛泰熙가 “자작자급 이것만이 오직 우리의 진로”라고 강조하면서, “가가호호가 물레와 벼를 다시 사용하라. 무엇보다도 먼저 社會奉公의 生産財團을 일으키라”고 주장하는 글이 실렸다.⁴⁸⁾ 또 《개벽》에도 조선인의 살 길은 토지보존, 농업부흥, 외국상품 거부, 토산장려, 근검 절약뿐이라고 주장하는 朴達成의 글이 실렸다.⁴⁹⁾ 조선청년회연합회는 12월 1일 조선물산장려의 표어를 현상모집하여, 12월 25일 ‘내살림 내것으로’, ‘조선

46) 《동아일보》, 1922년 1월 4일, 사설 〈經濟的 覺醒을 促하노라—今年에 決行할 綱領〉.

47) 《동아일보》, 1922년 4월 8일, 〈青年聯合 總會〉.

48) 薛泰熙, 〈自作自給의 人이 되어라〉(《東明》 14, 1922).

49) 朴達成, 〈有耶無耶 朝鮮人の 生道〉(《개벽》 29, 1922).

사람 조선 것' 등의 표어를 당선작으로 발표하여 물산장려운동의 분위기를 돋구었으며, 물산장려를 위한 지방순회강연단을 조직하여 북한 지방을 순회하였다.⁵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서울에서 처음 물산장려운동을 실행에 옮긴 것은 그해 12월 연희전문학교 학생 廉台鎭 등 50여 명이 결성한 自作會였다. 자작회는 조선물산을 장려하여 자작자급의 정신을 기르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여 경제적 위기를 구한다는 목적으로 구성되었다. 그들이 운동방책으로 내놓은 것은 조선인은 일치하여 조선품만 쓰고 수입품은 쓰지 말 것, 조선인의 所用品은 급히 조선인의 손으로 제조하도록 할 것, 조선인은 일치하여 토지를 전당하거나 매도하지 말고 매입하기를 힘쓸 것 등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운동의 구체적 목표의 하나로서 “조선인이 먹고 입고 쓸 조선품을 생산 공급할만한 영국의 길드식 대산업조합을 만들어 전조선적 생산소비기관으로 만들 것”을 제시하였다.⁵¹⁾ 자작회의 발기에 대해 당시 《동아일보》는 이를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일본인의 자본주의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조선인이 소비에 동맹함으로써 생산의 발달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⁵²⁾

나. 물산장려운동의 전개

위에서 본 것처럼 물산장려운동이 지방과 학생층으로부터 시작되자 이에 자극받은 서울의 사회운동 인사들도 1923년 1월 9일 ‘조선물산장려회’의 발기준비회를 구성하였다. 20일에는 발기총회가 있었고, 25일에는 창립총회가 조선청년회연합회 건물에서 열렸다. 이는 물산장려운동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리는 것이었다. 조선물산장려회는 그 취지문에서 “조선사람의 물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조선물산장려회를 조직하고, 첫째 조선사람은 조선사람이 지은 것을 사서 쓰고, 둘째 조선 사람은 단결하여 그 쓰는 물건을 스스로 제작하여 공급하기를 목적으로 하노라”라고 그 목적을 밝혔다.⁵³⁾

50) 《동아일보》, 1922년 12월 1·13·14·25일.

51) 《동아일보》, 1922년 12월 17일, 〈自作會 發起〉.

52) 《동아일보》, 1922년 12월 8일, 논설 〈自作會—경제적 자립의 정신〉.

53) 《동아일보》, 1922년 1월 11·27일.

물산장려회를 주도한 인물은 당시 이사진을 통해 확인된다. 창립총회에서 선출된 초대 이사와 4월 총회시 추가로 선출된 이사진 30명을 보면 다음과 같다.

창립총회시 이사: 兪星濬(이사장) · 薛泰熙 · 鄭魯植 · 金喆壽 · 金潤秀 · 白寬洙 · 羅景錫 · 金東赫 · 李順鐸 · 朴鵬緒 · 金德昌 · 李鍾麟 · 李甲成 · 朴東完 · 李得季 · 韓仁鳳 · 李時琬 · 林敬鎬 · 高龍煥 · 吳玄洲 (이상 20명).

4월 총회시 추가 선임된 이사: 李東植 · 朱翼 · 沈宜成 · 金秉濬 · 崔元淳 · 宋鍾愚 · 吳尙俊 · 辛泰嶽 · 李璜珪 · 玄僖運 · 高裕相 · 張斗鉉 (12명, 金東赫 吳玄洲는 사임).

이들 물산장려운동의 주도층 가운데에는 일본 유학을 하고 돌아온 신지식층이 많았다. 그 가운데 鄭魯植은 1922년 4월 이후 서울청년회 등이 탈퇴한 조선청년회연합회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金喆壽 · 高龍煥 · 李時琬 등은 3대 집행위원, 辛泰嶽은 4대 집행위원이었다. 성향별로 보아서는 부르주아민족주의자가 다수를 차지했지만, 사회주의경제학을 공부한 李順鐸과 羅景錫, 그리고 길드사회주의적 성향을 지닌 설태희 등도 끼어 있었다. 실업인으로서 金德昌(동양염직) · 張斗鉉(동양물산) · 金潤秀(경성상회) · 高裕相(경성 안동서관) 등이 끼어 있었다. 김덕창은 1910년대에도 조선산직장려회에 참여한 바 있었고, 한말부터 조선의 토착 면직업을 이끌어 온 인물이었다. 김윤수와 장두현은 종로의 대표적인 포목상 혹은 무역업자들이었다. 물산장려회에는 친일적인 인사는 거의 없었지만, 이사장 兪星濬은 당시 경기도 참여관으로 있는 인물이었다.

서울에서 조선물산장려회가 조직되자 지방에서도 이와 관련된 많은 단체들이 조직되었다. 전국 각지에서 물산장려회 · 자조회 · 토산장려회 등의 이름으로 관련 단체들이 조직되었는데, 그 조직을 주도한 것은 각 지방의 청년회들이었다. 청년회가 조직된 군 단위의 지역은 대부분 관련 단체가 조직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기할 것은 각 지방의 관련단체들이 서울의 조선물산장려회의 지부의 형식을 따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그러면 물산장려운동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을까. 서울의 조선물산

장려회는 창립시 만든 〈헌칙〉 제3조에서 “본 회는 조선물산을 장려하며 조선인의 산업을 진흥하여 조선인의 경제상 자립을 꾀함을 목적함”이라고 천명하였다.⁵⁴⁾ 그리고 會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세칙 2조에서는 産業獎勵・愛用獎勵・經濟的 指導를 그 구체적 방안으로 제시하였다.⁵⁵⁾ 물산장려회는 또 창립 후 곧 제1기 실행조건을 정하였는데, 그것은 의복의 경우 남자는 周衣, 여자는 치마를 음력 정월 1일부터 조선인 산품 또는 가공품을 염색하여 착용할 것, 음식물에 대해서는 식염・설탕・과일・청량음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조선물산을 사용할 것, 일용품 가운데 조선인 제품으로 대응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이를 사용할 것 등이었다.⁵⁶⁾ 즉 제1기의 운동방침은 ‘애용장려’, 즉 토산애용의 대중 계몽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당시 물산장려운동의 방향을 둘러싸고 두 가지 견해가 있었다. 하나는 애용장려를 먼저 선행하고 뒤에 생산장려(산업장려)를 병행하자는 견해였고, 다른 하나는 애용장려보다 생산장려에 더 비중을 두자는 견해였다. 전자의 견해는 “순서로 보면 생산이 있어야 소비가 있을 것이지만,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공장을 경영해야 하고, 이에 상당한 자금과 실력, 용기가 필요하므로 현재 상황에서는 어렵다고 보고, 먼저 소비를 장려하여 일반인에게 자작자급의 관념을 유발하는 데에 중점을 두자”는 것이었다. 즉 애용을 장려하면 자연 생산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견해였다.⁵⁷⁾ 한편 후자의 견해는 “생산물은 여전한데 소비에만 주력하면 경제학 원칙을 들 것도 없이 물가만 등귀할 것이므로 생산을 장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애용장려운동을 위해서는 먼저 생산장려, 즉 기존 공장의 기술과 품질의 개선, 그리고 신규 공

54) 〈조선물산장려회 憲則〉(《조선물산장려회보 : 이하 《회보》》1-3).

55) 〈조선물산장려회 세칙〉(《회보》1-3).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산업장려란 조선인의 산업적 지능을 계발, 단련하여 실업에 종사케 하는 것, 애용장려란 조선인의 產品을 愛用撫育하여 조선인의 산업을 융성케 하는 것, 경제적 지도란 조선인의 생활 및 기타에 관하여 경제적으로 건설 또는 개선할 바를 조사하여 그 실현을 지도 관철하는 것이었다.

56) 李鍾麟, 〈本會의 제2회 총회를 경과하고서〉(《산업계》4, 1924).

조기준, 〈조선물산장려운동의 전개과정과 그 역사적 성격〉(《역사학보》41, 1969), 91쪽 참조.

57) 이종린, 위의 글.

장의 설립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다.⁵⁸⁾ 1923년 조선물산장려회 창립 초기의 운동방침은 대체로 볼 때 애용장려를 기본으로 하고 생산장려를 병행한다는 입장으로 정해졌고, 이는 그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⁵⁹⁾

물산장려회측은 애용장려를 위한 대중계몽운동으로서 1923년 2월 16일 설날의 전국적인 시가행렬을 계획하였다. 이에 따라 각 지방에서도 이미 창립된 물산장려단체들과 각 지방청년회들이 설날의 물산장려행렬에 대중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대대적으로 선전하였다. 그러나 2월 14일 서울의 종로경찰서는 물산장려의 선전행렬을 금지한다는 통첩을 보내 선전행렬 계획은 중지되었다. 다만 평양에서는 당일 경찰의 감시하에 간단한 선전행렬이 있었고, 충북 영동에서는 2월 9일, 전남 고흥에서는 3월 1일 각각 선전행렬이 있었다. 선전행렬이 좌절되자 각 단체들은 주로 강연회를 통한 선전계몽운동에 나섰다. 서울에서는 물산장려회 주최로 2월 16일 천도교강당에서 강연회가 열렸으며, 각 지방에서도 강연회가 잇따라 열렸다.

물산장려운동에는 ‘물산장려회’·‘토산장려회’ 등의 이름을 내건 단체만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조선청년회연합회는 이미 1922년 4월 제3회 총회 때부터 산업운동의 실행을 선전하고 있었고, 12월에는 물산장려의 표어를 현상 모집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조선청년회연합회의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중요 인물들이 물산장려회의 이사로 참여할만큼 조선청년회연합회는 이 운동에 적극적이었다. 또 각 지방의 청년회들도 물산장려회의 조직을 주도하기도 하였고, 청년회가 직접 물산장려를 위한 각종 선전활동을 펴기도 하였다. 한편 당시 전국 각지에서는 ‘금주·단연·저축’을 구호로 한 소비절약운동이 일어나 이와 관련된 각종 단체가 만들어져 물산장려운동을 측면에서 지원하였다.

이같은 계몽운동의 성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었을까. 비록 일시적이긴 하였지만 ‘토산장려’·‘자작자급’ 등의 구호는 조선 물산의 소비를 크게 자극하

58) 윤영남, 〈自滅인가 圖生인가—물산장려운동에 대하여 曰可曰否의 論難을 보고〉(《동아일보》, 1923년 4월 26일). 이에 대해서는 오미일, 〈1920년대 부르주아 민족주의 계열의 물산장려운동론〉(《한국사 연구》 112, 2001).

59) 방기중, 〈1920·30년대 조선물산장려회 연구—재건과정과 주도층 분석을 중심으로—〉(《국사관논총》 67, 국사편찬위원회, 1996), 131~132쪽.

였다. 예를 들어 帽子的 경우 일본·중국·구미산보다 조선 토산이 크게 유행하여 경성 공평동의 한 모자공장은 음력 정월 이튿날부터 40일 동안 3,800여 개의 모자를 팔았고, 4월 초에는 하루 100개씩의 모자를 만들어야 하였다. 그것은 각 지방 청년단체로부터 단체 주문이 많았기 때문이었다.⁶⁰⁾ 가장 호황을 누린 것은 직물산업이었다. 양복이나 비단옷보다 무명 周衣가 크게 유행하여 무명과 광목을 생산하는 공장과, 특히 이를 취급하는 상인들은 큰 호황을 누렸다. 3월 초 무명 가격은 이전에 매필 2원 20전 전후였으나, 나중에는 4원 10전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던 것이다. 유통과정에서의 이같은 폭리로 조선상인들은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조선인 직물업 생산업자들도 이 호황을 놓치지 않기 위해 自社의 상품을 선전하는 데 온갖 힘을 기울였다. 경성방직은 잡지 《동명》에 실린 광고에서 “조선을 사랑하시는 동포는 옷감부터 조선산을 쓰십시오. 처음으로 조선 사람의 자본과 기술로 된 광목은 삼성표 삼각산표 광목”이라고 선전하였다.⁶¹⁾ 김덕창의 동양염직도 잡지 《개벽》에 실린 광고에서 “外貨를 배척함보다 국산을 장려하여야, 신 발명술을 공부함보다 모방성을 길러야 함이 우리의 백년대계”라고 주장하고, 새로이 셔츠부를 신설하고 일본에서 조선인기술자를 초빙하여 메리야쓰와 자켓트를 최신 編造法으로 생산하고 있음을 선전하였다.⁶²⁾

그러나 당시 조선인자본의 직물업은 극히 취약하였다. 우선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공장은 경성방직(김성수)·조선견직(민규식)·대창직물(백낙원)·동양염직(김덕창) 등이 있을 뿐이었다. 또 1년간 전 조선의 무명·삼베·모시의 소비액 1억 1,414만 7,621원 가운데 조선산(이 가운데에는 일본인 공장의 생산액도 포함)은 4,465만 6,442원을 차지하는 데에 지나지 않았다.⁶³⁾ 따라서 설사 조선의 대중들이 모두 조선물산만 사용하겠다고 나선다 해도 그 수요를 감당할만한 생산능력은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때문에 일시적인 수요 폭발은 조선인 공장에서 생산된 직물의 시장가격만 올려놓았고, 그로 인

60) 《동아일보》, 1923년 4월 2일, 〈帽子로 본 土產運動〉.

61) 《동명》 2-20(1923), 3쪽.

62) 《개벽》 31(1923).

63) 《동아일보》, 1923년 2월 9일, 〈物產獎勵와 織物界現況〉.

한 이득은 대부분 상인들에게 돌아가고 말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물산장려회측이 제시한 것이 소비조합 운동이었다. 물산장려회는 창립시부터 소비조합의 설립을 논의하고 이를 추진하였다. 당시 발기회는 도시와 각 군의 면단위까지 소비조합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2월 13일 열린 이사회는 조선물산경성소비조합을 조직하기로 결정하고, 설계위원으로서 김철수·이순탁·나경석을 선출하고, 3월 2일의 이사회에서는 본회 이사 전부를 소비조합 창립준비위원으로 하고 창립준비위원은 1股 5원씩 출자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5월 3일의 이사회는 소비조합설립준비위원으로서 나경석 외 4명을 선출하였다. 그러나 기금 마련은 쉽지 않았고, 결국 6월 16일의 이사회는 소비조합 설립안을 보류하기로 결정하고 말았다. 소비조합 설립준비위원의 한 사람이었던 설태희는 물산장려회를 경성총연합-도연합기관-군연합기관-면단위기관 순으로 단계적으로 조직하고 각 면에는 생산조합과 소비조합을 각기 설립하여 매출과 매입을 공동으로 할 것을 제안하기도 하였다.⁶⁴⁾ 하지만 소비조합과 생산조합 설립운동은 실패하고 물건가격의 폭등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또 1923년 봄 물산장려운동의 결과 일시적이거나 조선산 상품의 수요가 폭발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공장의 생산도 뒤따르지 않았다. 그것은 조선인들의 조선물산 소비운동이 과연 얼마나 지속되어 당시 일본에서 대량으로 수입되고 있던 일본상품들과의 경쟁에서 승리를 보장해 줄 것인가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구나 1921년 경부터는 조선에도 불경기여파가 몰아닥쳐 1919년과 1920년에 설립된 조선인 회사들도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이었다.

한편 조선의 방직업은 당시 조선내에 방직회사가 없어 綿絲나 紬絲 등 원료를 모두 일본에서 수입해서 쓰고 있는 형편이었다. 따라서 설사 조선인 자본의 공장에서 생산되는 직물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것이 순수한 조선물산 장려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일본 원료를 소비하

64) 梧村, 〈物産獎勵에 關하여〉(《동아일보》, 1923년 3월 10·12일).

는 것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또 이처럼 조선 직물업이 원료를 거의 일본에 의지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제 지배자측에서는 물산장려운동을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었다. 따라서 총독부 당국자들은 이 운동이 적극적인 일본상품 배척운동으로 진전되어 정치적 성격을 띠지만 않는다면 별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총독부측에서 보았을 때 적극적으로 일본상품을 배척한다든가 배일을 표방한다든가 하지만 않는다면 물산장려운동은 단순한 하나의 산업운동에 그치는 것이라고 보았고, 따라서 총독부측은 굳이 이 운동을 가로막고 나설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다.⁶⁵⁾

그런데 당시 물산장려운동론자들 가운데에는 절대로 外貨(외국상품)를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급진론자와 점진적으로 외화를 사용하는 대신 토산품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진론자가 있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아예 이 운동이 외화배척운동이 아님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었으며, 절대적인 외화배척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점진적인 토산장려운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위기였다. 예를 들어 물산장려운동의 주요 논자 중의 하나인 鮮于全은 “물산장려회가 표방하는 물산장려는 절대적 의미의 물산장려가 아니요, 상대적인 의미의 물산장려, 즉 우리가 사용하고 소비하는 온갖 필요 용품에 대하여 사용효과와 향수이익에 다소 희생이 따르더라도 절대로 없으면 안 될 물품 이외에는 토산품으로써 이에 적용하자는 의미의 물산장려”라고 말하였다.⁶⁶⁾ 또 《동아일보》도 “吾人이 물산장려를 계획한다 함은 일체 외화를 배척하여 철두철미 원시산업을 복구하자는 것은 아닐 것이니 이 점에 있어서 오인은 점진적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지 못할 것은 多言을 不要할 바”라고 말하였다.⁶⁷⁾ 위의 선우전은 또 “경제운동을 절대로 다른 운동과 혼합하지 아니할 것”, 즉 “경제문제의 연구는 어디까지나 경제의 원칙에 준하여 독립한 범위 내에서 연구할 것”을 주장하고, 이 운동이 결코 배일운동이 아님을 강조하였다.⁶⁸⁾

65) 丸山鶴吉, 〈朝鮮現下病弊〉(《在鮮四年有餘半》, 1923), 294쪽.

66) 鮮于全, 〈當然히 起할 吾人의 經濟運動〉(《개벽》 33, 1923), 42쪽.

67) 《동아일보》, 1923년 1월 24일, 사설 〈조선물산장려운동의 단서—이론에서 실재운동으로〉.

68) 鮮于全, 〈經濟思想과 經濟運動의 發現 如何〉(《개벽》 30, 1922), 18쪽.

조선의 물산장려운동은 인도의 스와데시(토산장려)운동을 모델로 한 것이었지만, 인도의 경우에는 스와데시운동과 함께 강력한 외화배척운동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조선의 물산장려운동은 외화배척을 구호로 내걸지 않았다. 조선의 물산장려운동론자들은 외화배척은 조선에서는 현실성이 없는 것이며, 또 외화배척의 구호를 내세우는 것은 공연히 총독부측의 경계심만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이 운동이 외화배척운동이 아니라는 점을 누누히 강조하였고, 또 정치적 성격이 개입되어서는 안된다는 점도 누누히 강조하였다.

결국 이같은 성격을 띤 물산장려운동은 1923년 여름이 지나면서 그 열기가 급격히 식어버리고 말았다. 물론 이후에도 물산장려회는 계속 존속하여 그 이름은 1937년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물산장려운동은 1924년 초 물산장려회 창립 1주년 기념강연을 끝으로 사실상 정돈상태에 들어갔다. 앞서도 본 것처럼 물산장려운동은 일차적으로는 조선물산의 소비를 장려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그런데 생산기관의 확장이라는 궁극 목적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한 채 조선물산의 소비운동조차도 불과 반년여 만에 가라앉고 만 것이다. 이 운동이 이렇게 끝나버린 원인은 어디에 있었을까.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 원인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본과 기술의 부족으로 인한 일본자본과의 경쟁력 부족이다. 이는 식민지 조선의 토착자본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한계로서 그들은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권력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때 조선산업대회 등을 조직하여 총독부 권력에도 기대를 가져보았으나 그러한 기대는 좌절되었다. 이제 그들은 조선민중에 호소하여 ‘토산장려’로써 정치권력의 보호를 대신해보려 하였으나, 토산장려만으로는 자본과 기술의 부족이라는 문제까지 해결할 수는 없었다. 그것은 자본가계급 스스로, 혹은 국가권력의 지원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였다. 그러나 당장 이 문제의 해결방안은 보이지 않았다. 결국 취약한 토착자본이 충분한 자본주의적 생산을 통해 토산소비운동을 뒷받침하지 못할 때, 이미 자본제적 상품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생활할 수 없었던 조선민중들은 더 이상 토산소비운동을 지속할 수 없었던 것이다.

둘째, 조직력의 취약이다. 우선 서울의 물산장려회는 서울만의 조직이었을 뿐 지방의 물산장려운동 단체들과는 거의 조직적인 연결을 갖지 못했다. 즉 각 지방의 단체들을 중앙의 물산장려회의 지부로 끌어들이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각 지방의 운동은 모두 개별 분산적으로 일어났다가 가라앉아버리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각 지방에서 이 운동을 뒷받침하고 있던 청년회의 다수가 이 시기 사회주의운동으로 노선을 전환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산장려운동은 사실상 하부조직을 상실한 셈이었다. 1923년 초의 시점은 바로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의 분화가 뚜렷해진 시기로서, 3월 말에 열린 조선청년당대회는 물산장려운동 타도를 결의하는 등 당시 사회주의자들은 물산장려운동을 맹렬히 비난하고 있었다. 따라서 물산장려운동은 조직력에서 극히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⁶⁹⁾

이러한 요인들 외에도 일제 관헌의 방해, 상인들의 농간에 의한 물가양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근본적인 요인으로서 식민지 지배하에 놓인 조선에서 실력을 길러 국권회복운동의 발판으로 삼자는 구상, 그리고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실력 양성에 중점을 두자는 실현 불가능한 구상을 들어야 할 것이다. 식민지 지배하에서, 특히 일제 지배하에서 그러한 구상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물산장려운동의 좌절은 그러한 구상이 현실성이 없음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 것이었다. 일제 지배당국은 조선인 토착자본이 비록 민족적 성격이 아닌 예속적 성격을 띠더라도 극히 한정된 범위 내에서 성장만을 허용하고 있었다.

1923년 하반기를 기해 조선물산장려운동은 한계를 뚜렷이 드러낸 채 사실상 막을 내렸다. 이후 조선의 토착자본가들은 어떤 길을 걸어갔을까. 조선민중에 의지하여 자본축적의 기회를 얻어보려 하던 그들은 그 기대가 좌절되자 두 가지 방향으로 나아갔다. 그 하나는 자력갱생의 길을 계속 모색하면서 자기 존립을 꾀해 나가는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총독부 권력에 본

69)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의 물산장려운동 찬반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이 참고된다.

박찬승, 《한국근대정치사상사연구》(역사비평사, 1992), 277~289쪽.

이애숙, 〈물산장려운동과 민족주의, 사회주의〉(《논쟁으로 본 한국사회 100년》, 역사비평사, 2000).

격적으로 접근하여 보호를 구걸하는 길이었다. 조선의 토착자본 가운데 영세자본과 그들을 지원하는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전자의 길을 택하였다. 그들은 이후에도 여전히 물산장려회를 지키면서 1937년까지 물산장려운동을 계속하였다. 반면 토착자본 가운데 비교적 규모가 큰 자본과 그들을 대변하던 일부 민족주의자들은 후자의 길을 택하였다. 《동아일보》는 1923년 말 총독부측에 보호관세의 설치, 보조금의 지급, 기술인력의 양성 등 ‘보다 철저한 보호와 장려’를 요구하였다.⁷⁰⁾ 그리고 거의 같은 시기 총독부측은 위의 신문과 뿌리를 같이하는 토착자본인 경성방직에 거액의 보조금을 지급하기 시작하였다.⁷¹⁾ 이처럼 총독부로부터 ‘보다 철저한 보호와 장려’를 받을 수 있게 된 경성방직의 자본은 이제 정치적으로 일제와 보다 접근하지 않을 수 없었고, 여기서 1924년 1월 초 《동아일보》는 〈민족적 경륜〉이라는 글을 통해 ‘법률이 허하는 범위 내에서의 합법적 정치운동’을 제창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세인들은 이를 자치운동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독립운동에서 한 단계 후퇴한 타협적인 운동으로서의 자치운동의 제안은 조선사회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게 된다.

2) 1920년대 중후반 자치운동의 전개와 민족주의 세력의 분화

(1) 자치운동론 대두의 배경

자치운동론이란 한마디로 한국의 독립 대신 우선 자치권을 얻어 독립을 위한 실력을 먼저 양성하자는 주장이다. 이같은 주장은 이미 3·1운동 이전 1910년대에도 국내외에서 등장한 바 있었다. 일부 유학생들이 이를 주장하기도 하였지만, 다른 유학생들에 의해 반박을 당하기도 하였다. 또 3·1운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천도교측에서도 한때 자치운동을 고려하기도 하였다. 이 같이 국내외 일부 논자들이 자치론을 제기한 것은 한국의 독립 능력에 대한

70) 《동아일보》, 1923년 12월 16일, 논설 〈更히 朝鮮의 産業政策에 대하여〉.

71) 경성방직은 제5기(1923. 4~1924. 2)의 시기에 총독부로부터 당시 순이익의 1,088%에 해당하는 16,042원의 보조금을 받았다(권태억, 《韓國近代綿業史研究》, 일조각, 1989, 266쪽).

확고한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한국의 독립 능력에 대한 자신감의 결여는 특히 한말과 1910년대에 일본에 유학한 경험이 있는 신지식층에게는 일반적이었다. 그들은 그만큼 일본의 근대문명에 압도되어 있었으며, 국제사회에서의 약육강식의 법칙을 강조하는 사회진화론에 매몰되어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자력에 의한 독립쟁취는 물론, 자력에 의한 독립의 유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⁷²⁾

자치론이 본격적으로 대두한 것은 3·1운동의 여진이 채 가시지 않은 1919년 여름이었다. 그해 8월 高元勳 등 6명은 자치론을 주장하는 〈의견서〉를 총독부에 제출하였는데, 그 안에서 그들은 ① 조선은 조선인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할 것, ② 빠른 시일 안에 조선에 조선의회를 설치할 것, ③ 일본인 총독의 감독하에 조선정부를 설치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⁷³⁾ 이들은 그해 7월 동경에 건너가 《국민신보》 기자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를 만나 자치운동에 대해 협의하고, 타나카(田中) 육군대신, 우사미 카쓰오(宇佐美勝夫) 조선총독부 내무부장관 등을 만나 조선의회의 개설 등을 주장하는 의견을 제시하였다.⁷⁴⁾ 또 1921년에는 일본 우익단체인 黑龍會 계열의 조직인 同光會의 조선총지부가 결성되어 총지부장 李喜侃이 이른바 〈내정독립청원서〉라는 것을 일본의회에 제출하려는 운동을 벌였다가 총독부로부터 시정방참에 위배된 다하여 단체가 강제해산당한 일이 있었다. 이때 그들이 주장한 내정독립이란 일본천황의 통치하에 외교·군사를 제외한 일체의 내정을 독립시켜달라는 것이었다.⁷⁵⁾ 이같은 자치론은 주로 친일적 성향이 농후한 이들에 의해 제기된 것이었다. 하지만 1920년대 전반 ‘문화운동’을 전개하고 있던 이들도 이들의 자치운동에 대해 특별히 찬성이나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동아일보》는 동광회 조선지부의 내정독립운동에 대한 총독부의 탄압에 대해 그것은 독립운동도 아닌데 왜 탄압하는가 하는 비판을 던지고 있었다.⁷⁶⁾

72) 이에 대해서는 박찬승, 앞의 책, 306~308쪽.

73) 近藤劔一編, 《万歳騒擾事件》 2 (1964), 116~123쪽. 고원훈은 1910년 명치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1911~1913년 총독부 경부, 1913년 이후 보성전문학교 교수, 1920년 보성전문학교 교장, 1924년 중추원 참의 등을 지낸 인물이다.

74) 박경식 편, 《在日朝鮮人關係資料集成》 1, 113쪽.

75) 近藤劔一編, 앞의 책, 144~155쪽.

1920년대 중반에 자치론이 대두한 또 하나의 배경은 물산장려운동과 민립 대학기성운동 등 ‘문화운동’의 좌절이었다. 앞서 본 것처럼 이들 운동은 1923년 여름 이후 급격히 침체상태에 빠졌고, 이러한 운동을 추진해온 민족주의자들은 크게 당황하게 되었다. 물산장려운동을 뒷받침해온 조선인 자본가, 특히 중급 이상의 자본가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여기에서 이들이 모색한 길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총독부측에 대해 다시 조선인 자본의 보호·육성을 호소하는 길이고, 다른 하나는 정치적으로 일제와 타협하여 자치권과 같은 일정한 정치권력을 얻어 조선인 자본을 보호·육성하는 길이었다. 그들이 이렇게 일제의 권력에 의지하거나 아니면 스스로 최소한의 권력이라도 가져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경제적 실력양성’에는 ‘정치권력의 보호’가 필수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⁷⁶⁾

이 시기 자치운동론이 대두하게 된 또 하나의 배경으로서 총독부측의 자치론에 대한 내면적인 검토라는 사실을 들 수 있다. 3·1운동 직후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조선자치의 문제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당시 일본인들 사이에서 조선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서는 ① 일시동인주의와 내지연장주의에 입각한 참정권부여론, ② 자치제 실시론, ③ 식민지 방기론 등이 거론되고 있었다.⁷⁸⁾ 첫번째 참정권부여론은 조선인들에게도 장차 일본인들과 똑같이 지방자치, 혹은 일본의회의 참정권을 부여한다는 것으로서 일본정부와 총독부측의 공식입장이면서 동시에 호소이 하지메(細井肇)·나카노 세이고(中野正剛) 등 관련 언론인들의 어용이론이기도 했다. 국민협회의 関元植이 일본의회를 상대로 벌인 참정권 청원운동은 이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었다. 두번째 자치제 실시론은 무단정책과 동화정책을 폐기하고 조선에 자치의회를 설치하자는 주장이다. 이는 당시 大正デモクラシー의 민본주의자인 요시노 사쿠조(吉野作造) 등 黎明會 회원들과 동경제대 교수 수에히로 시게오(末廣重雄) 등이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식민지 방기론은 조선을 식민지로부터 독립시키라는 주

76) 《동아일보》, 1922년 10월 30일, 논설 〈내정독립도 독립인가—당국의 기괴한 해석〉.

77) 《동아일보》, 1924년 12월 26·27일, 사설 〈정치운동에 대하여〉(상·하).

78) 松尾尊兌, 《大正デモクラシー》(岩波書店, 1974), 278~310쪽.

장으로, 극히 소수지만 당시 《東洋經濟新聞》 간부 이시바시 탄잔(石橋湛山) 등이 이를 주장하고 있었다.⁷⁹⁾

3·1운동 이후 일본정부는 참정권부여론을 공식 입장으로 표명하고 있었다. 그런데 1925년 11월 돌연 총독부의 어용지인 《경성일보》에 사장 소에지마 미치마사(副島道正)가 〈총독정치의 根本義〉라는 글을 써서 자치론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 글이 나오자 일본인 단체인 갑자구락부, 한국인 친일단체인 각파유지연맹·보천교·국민협회 등에서는 이를 맹렬히 비판하고 나왔다. 이에 총독부 당국은 그것은 소에지마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경성일보》는 다시 사설 〈副島伯의 조선통치론〉을 실어 한편으로는 소에지마의 자치론이 총독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해명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시 자치론이 조선을 영원히 통치하기 위한 가장 타당한 통치방식이라고 주장하였다.⁸⁰⁾ 이에 《朝鮮及滿洲》의 발행인 사쿠오 토요(釋尾東邦)는 자기 잡지에 자치론을 격렬히 비판하는 논설을 실었고, 이에 마치다 운민(町田耘民)이 다시 자치론을 찬성하는 글을 실음으로써 한때 일본인들 사이에서 자치론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⁸¹⁾

당시 총독부는 소에지마의 자치론이 총독부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성일보》측의 자치론 개진이 총독부측과의 사전협의 내지는 양해없이 이루어졌으리라고는 볼 수 없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것은 당시 총독부의 고위관료 가운데에도 이미 자치론자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내무국장 오오쓰카 쓰네사부로(大塚常二郎)는 총독에게 私案으로서 〈朝鮮議會要綱〉을 만들어 제출하였는데, 이는 참정권론에 반대를 표시하면서 조선의회 설치를 주장한 것이었다.⁸²⁾ 또 하나 주목되는 것은 이 사설에 관해 《경성일보》측과 《동아일보》측 사이에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사실이다. 즉 총독 사이토 마코토(齋藤實)가 소에지마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에 “전번 《경성일보》에 논

79) 松尾尊兌, 위의 책, 303~310쪽.

80) 두 편의 논설은 副島道正編, 《朝鮮統治に就いて》에 전문이 실려있다.

81) 釋尾東邦, 〈自治論者に與へて朝鮮統治の根本方針を論ず〉(《朝鮮及滿洲》 1월호, 1926).

町田耘民, 〈朝鮮統治論と言論界の奇觀〉(李種植 편, 《朝鮮統治策に關する學說》).

82) 《齋藤實文書》 2(고려서림 영인본)에 수록됨.

설을 신기 전에 《동아일보》의 간부에게 의논했던 것인데, 반대론(일본인들의 반대론)이 일어난 것을 보고 그들은 냉소하고 있다”는 구절이 있는 것이다.⁸³⁾ 즉 당시 총독의 정치참모였던 소에지마와 아베(阿部充家) 등은 총독으로부터 어느 정도 자치론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얻은 후, 《동아일보》측과 천도교측의 최린에게 이를 귀띔하고 이어서 여론의 반응을 떠보기 위해 《경성일보》에 문제의 사실을 실은 것이다. 뒤에 보게 될 1925년 말 이후의 《동아일보》와 최린의 자치운동은 이같은 총독부의 자치론 검토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이었다.

사이토 총독은 일본정부의 분위기를 더 살피다가 1927년 2월 조선인들의 자치운동이 여론에 밀리고, 대신 신간회 결성의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총독부 관료에게 자치론 문제를 본격 연구하도록 지시하였다. 즉 사이토는 자치론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선지배에 자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이었다. 총독은 총독부 관료들이 만든 자치제 초안을 들고 본국과 협의에 나서서 수상에게 구두로 의견을 전했다. 4월 일본 내각의 교체, 그리고 총독 자신의 제네바회의 대표 파견, 그리고 그에 이은 12월의 총독 경질로 인해 자치제 검토는 유보되고 말았다.⁸⁴⁾

사이토 총독의 경질로 주춤했던 자치론은 1929년 8월 그가 다시 총독으로 부임해오면서 활성화되었다. 아베의 활동이 재개되면서 최린 등과의 접촉이 본격화되었고, 총독부도 연래의 숙제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를 거듭하였다. 총독부측은 그 동안의 연구를 토대로 <조선에 있어서의 參政에 관한 제도의 방안>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본국 정부에 제출하였다. 총독부가 제시한 안은 조선인 칙선의원이 귀족원에 참여할 수 있게 하며, 조선에 지방 의회를 설치한다는 것이었다.⁸⁵⁾ 당시 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여 추진한 사람은 코다바(児玉) 정무총감으로서 그는 조선의회에서 교육·위생·토목·산업 등의 예산을 다루도록 한다는 구상이었다고 한다. 그는 朝鮮在住者の 이해에

83) 강동진, 《日本の 韓國侵略政策史》(한길사, 1980), 350쪽.

84) 강동진, 위의 책, 365~368쪽.

85) <朝鮮に於ける參政權制度の方案>・<朝鮮に於ける參政に關する制度の方案>(《齋藤實文書》2), 541~661쪽.

관계가 깊은 문제를 조선재주자의 의원선거권이 없는 본국의 조선의회에서 다루도록 하는 것보다는 조선재주자가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는 조선의회에서 총독의 설명을 듣고 직접 심의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안은 이쿠다(生田) 내무국장 이하 여러 명의 소위원회에서 만든 것이었으며, 사이토 총독은 이 안을 들고 동경에 가서 본국 정부와 협의에 나섰다고 한다.⁸⁶⁾ 여기서 조선의회는 형식상으로는 일정한 의결권을 갖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총독에 의해 의결의 취소 및 재의의 명령을 받을 수 있는 등 사실상의 자문기관의 성격을 띤 매우 한정적인 권한을 갖고 있었다.

일본정부는 이러한 안에 대해서도 조선인들에게 자치의회나 참정권을 주는 것은 모두 위험요소를 안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또 기본적으로 ‘내지연장주의’를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결국 1930년 12월 일본 정부와 총독부는 이 문제를 단순한 지방제도 개정으로 매듭지었다. 즉 기존의 자문기관의 성격만을 지닌 도평의회·부협의회·면협의회 등을 형식적인 의결기관으로서의 道會·府會·面會로 바꾸는 지방제도 개혁을 통해 조선인의 참정권·자치권이 크게 신장된 것처럼 선전하고자 했던 것이다.⁸⁷⁾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1925년 이후의 자치운동론의 대두와 자치운동의 전개는 총독부측의 자치의회 검토와 밀접한 연결을 갖고 진행된 것이었다. 총독부측은 장기적으로는 자치제 실시를 통해 독립운동의 기세를 꺾고, 단기적으로는 한국인들의 자치운동을 지원하여 민족운동을 분열시킨다는 이중의 목적으로 갖고 ‘자치제 실시 검토’라는 카드를 활용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밖에도 당시 자치운동의 국제적 배경으로 1922년 에이레가 영국으로부터 자치권을 인정받는 에이레자유국을 성립시켰던 것, 인도에서 1919년 이후 간디가 스와라지(자치)운동을 본격화한 것 등을 들 수 있다.

(2) 자치운동의 전개

1920년대 국내에서 자치운동에 관한 첫 문제제기는 1922년 《동아일보》의

86) 萩原彦三, 《私の朝鮮記録》(榮光社印刷所, 1960), 59~60쪽.

87) 강동진, 앞의 책, 368~371쪽.

사설 〈정치적 중심세력〉이라는 글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글은 자치론을 직접 개진하지는 않았지만 에이레와 인도의 예를 들면서 “중심세력이 없으면 정치운동도 할 수 없다”고 하여, 간접적으로 한국에서의 정치적 중심세력의 결성을 제창하였다.⁸⁸⁾ 1923년에 들어서도 《동아일보》는 계속해서 ‘민족적 기치하의 대단결’, ‘민족적 중심세력의 결집’, ‘중심세력이 될만한 단체의 결성’을 주장하였다. 이 때 그들이 내세운 주장은 대체로 ‘인민의 생명·재산의 보호’, ‘폐정의 개혁’ 등 조선민족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치상의 유력한 발언권’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⁸⁹⁾ 이는 비록 명확한 표현은 아니었지만 일정한 정치적 권력의 확보를 위해 그것을 담당할 정치적 중심세력의 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이었다. 그리고 정치적 발언권의 확보란 자치권의 확보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주목되는 것은 이러한 주장이 1923년 11월 이후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는 점이다. 이 시기는 물산장려운동과 민립대학기성운동이 침체상태에 빠진 시기였다.

자치론자들의 입장이 보다 명확히 드러난 것은 《동아일보》 1924년 1월 1~4일자 사설 〈민족적 경륜〉이었다. 이 글은 정치·경제·교육의 중심단체 결성과 함께 “조선 내에서 허하는 범위 내에서 일대 정치적 결사를 조직하여 이 결사로 하여금 당면한 민족적 권리와 이익을 옹호하고 장래 구원한 정치운동의 기초를 만들게 할 것”을 제창하였다. 이 글은 1922년 이후 《동아일보》가 주장해온 ‘당면한 민족적 권리와 이익’의 옹호, 혹은 ‘정치상의 발언권의 획득’이라는 이름하에 합법적 정치결사를 조직, 비타협적 독립운동이 아니라 타협적인 자치운동을 펴자고 주장한 것에 틀림없었다. 당시 《동아일보》는 참정권 획득운동에는 일관하여 반대해왔기 때문에 여기서의 ‘정치상의 발언권의 획득’은 자치권 획득이며, ‘조선내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의 정치운동’은 자치운동을 가리킴이 분명했다.

이같은 사설이 나온 직후인 1월 중순 천도교의 최린, 《동아일보》의 김성

88) 《동아일보》, 1922년 7월 6일, 사설 〈정치와 중심세력〉.

89) 《동아일보》, 1923년 4월 16일, 사설 〈대동단결의 필요—생활의 비명에 대하여〉· 10월 27일, 사설 〈민족적 해체의 위기—조선인은 다 맹성하라〉· 11월 17일, 〈대동단결의 기운—형제여 맹진하라〉.

수·송진우·최원순, 천도교의 이종린, 변호사 박승빈, 기독교계 이승훈, 대구의 서상일, 평양의 조만식, 그리고 신석우·안재홍 등 16~17명이 회합하여 정치결사의 조직문제를 협의하였다. 이 모임은 이미 1923년 가을부터 신석우·김성수·송진우·최원 등이 누차 회합하여 ‘유력한 민족단체’의 조직에 대해 협의한 뒤에 성사된 것이었다.⁹⁰⁾ 이 모임은 이후 ‘연정회’ 준비모임이라 불리게 되는데, 1월 중순의 모임에 참석한 이들이 모두 자치운동에 찬성하여 참석한 것은 아니었다. 신석우나 안재홍은 그보다는 순수한 의미의 민족운동 대단체의 결성에 관심을 갖고 있었다.

《동아일보》의 〈민족적경륜〉은 일반대중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혔다. 《동아일보》는 이 사실 이후에도 1월에 두 차례 더 민족적 단결을 주장하는 글을 실었으나 반발이 거세게 일자 1월 29일에는 해명문을 내지 않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동아일보》는 〈정치적 결사와 운동에 대하여〉라는 이 해명문에서 자신들의 주장은 민립대학운동이나 물산장려운동을 통일적·조직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민족적 일대단결을 이루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주장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하였다. 그러나 이 글은 ‘합법적 정치운동’이 자치운동이 아니라는 해명은 하지 않았다. 《동아일보》가 이같이 애매한 태도를 견지하자 4월에 열린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청년총동맹의 임시대회에서는 《동아일보》 불매운동과 ‘타협적 민족운동’ 반대의 결의를 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4월 20일에 열린 노동총동맹에서 김종범 등은 《동아일보》 문제를 조사한 결과를 보고하였는데,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송진우·김성수와 몇몇 인사들은 1923년 12월 24일 명월관에서 모여 소위 ‘연정회’라는 것을 조직하기로 하고, 그 비용으로 2만원을 거두고, 동시에 마루야마 쓰루기치(丸山鶴去) 경무국장 휘하의 고관을 방문하고 상호협조의 양해를 얻어 그 취지를 선전하기 위하여 《동아일보》의 지상에 〈민족적 경륜〉을 발표하였다는 것이었다. 또 그들은 연정회 주도자들이 이광수를 중국에 있는 안창호에게 보내 연정회 가입을 간구하였으며, 설태희가 만주동포 위문을 다녀온 것도 이 일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하였다.⁹¹⁾ 이에 《동아일보》는 4월 23일 지면을 통한 해명에 나섰

90) 〈民族運動梗概〉, 《齋藤實文書》 10, 233쪽.

91) 《조선일보》, 1924년 4월 22일, 〈노동총동맹 임시대회〉.

다. 이에 따르면 〈민족적 경륜〉은 세상에서 오해하는 것과 같은 주장을 한 것이 아니며, 만일 그러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면 그것은 문구의 착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연정회건은 연구와 논의 수준에서 그친 것이며, 이광수와 설태희 건은 오해라고 해명하였다.⁹²⁾ 이로써 자치론은 다시 잠복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1924년 초의 자치론은 《동아일보》의 송진우 등과 천도교의 최린이 중심이 되어 여론을 떠보고, 연정회와 같은 조직을 만들려 하다가 강한 반발여론에 부딪쳐 미수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자치론이 다시 수면에 떠오른 것은 1925년의 일이었다. 1925년 들어 〈치안유지법〉의 실시로 사회주의운동이 잠시 주춤하고 민족주의운동이 다시 대두하였다. 이해 9월에는 장래 민족운동의 지도기관을 목표로 한 조선사정연구회가 결성되었고, 11월에는 하와이범태평양회의의 대표 파견을 위해 태평양문제연구회가 결성되었다. 그런 가운데 조선총독부는 소에지마 등 《경성일보》 간부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자치제 실시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이는 곧 한국인 자치론자들에게 전해졌다. 당시 총독부측과 한국인 자치론자들 간의 교섭을 담당한 것은 일본으로부터 온 중의원 의원 이노우에 준노스케(井上準之助)와 《경성일보》 사장 소에지마였다. 송진우·최린 등 한국인 자치론자들은 이들로부터 총독부측의 움직임을 전해듣고 1925년 말 경부터 누차 회합을 갖고 조선 현하의 상태에서 독립운동은 절대 불가능하니 차라리 자치운동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나누었다고 한다.⁹³⁾ 그리하여 그들은 자치제가 실시될 때에 대비한 준비를 시작하였는데, 《동아일보》와 수양동우회, 그리고 천도교신파와 조선농민사 등이 자치운동에 대비한 잠재적 기반으로 간주되고 있었다.⁹⁴⁾ 그리고 일본인 자치론자들은 1926년 1월 일본에서 중앙조선협회라는 단체를 만들었다. 공작 야마카타 이사부로(山縣伊三郎)가 회장을 맡고 기요우라 케이코(清浦奎吾)·시부사와 에이이치(澁澤榮一)·우사미 카쓰오(宇佐美勝夫)·세키야 데이자부로(關屋貞三郎)·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 등이 이사와 고문을 맡았으며, 동경에 본부를 오사카와 경성

92) 《동아일보》, 1924년 4월 23일, 〈兩問題의 真相〉.

93) 〈民族運動梗概〉(《齊藤實文書》10), 237쪽.

94)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편, 《한국공산주의운동사(자료편)》 2, 120쪽.

에 지부를 두었다. 이들은 대부분 전직 총독부 관리나 현직 정치인, 어용언론인 등이었다. 이 단체는 “조선에 관한 제 방책을 조사하고 그 방책을 강구하여 조선의 건전한 발달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내걸었는데, 그 이면의 실질적인 목적은 조선의 자치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다.⁹⁵⁾

이같이 일본인들에 의해 자치론이 본격적으로 검토되고, 이에 일부 조선인 민족주의자들이 호응하는 가운데 1926년 3월 강달영·유억겸·안재홍·박동완·이종린·신석우·오상준·권동진 등이 회합을 갖고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 간의 연합전선 결성에 합의하였다. 그런데 이 회합에서 이종린은 최린 등이 추진하고 있는 자치운동에 대해 폭로함으로써 최린 등의 자치운동 계획은 세간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사회주의자들과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은 자치운동을 막고 협동전선을 추구하기 위해 중국의 국민당과 같은 결사를 조직하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하였다. 그러나 순종이 갑자기 서거하고, 6·10만세운동을 준비하는 등의 사정으로 새로운 결사의 조직은 잠시 유보되었다. 그런 가운데 자치론자들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여 10월 초순 자치운동을 위해 최린 등이 박희도·김준연·조병옥 등 각계 인사와의 접촉에 나섰다. 자치운동에 반대하고 있던 안재홍과 김준연은 이 사실을 민흥회에 알렸다. 이에 민흥회의 명제세는 최린을 찾아가 그를 힐난하고 만일 자치운동 단체의 조직을 강행하면 이를 극력 방해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최린 등은 10월 14일 시사간담회라는 이름으로 회합을 명월관에서 가질 계획이었는데, 실제로 민흥회와 전진회 회원들이 회합 장소에 미리 나타나 진을 치는 바람에 회합은 무산되었다.⁹⁶⁾

자치운동 단체 조직은 일단 실패로 돌아갔지만 최린은 10월 말 일본에 건너가는 등 자치운동은 물밑에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사회주의자들과 자치운동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좌파의 협동전선 결성 움직임도 활발해져 11월 15일 <정우회 선언>이 나왔고, 이는 사회주의사상단체들의 해

95) 《조선일보》, 1926년 2월 6일, 사설 <統治群의 유혹—中央朝鮮協會의 성립을 듣고>.

96) <民族運動梗概> (《齊藤實文書》10), 237쪽.

산과 1927년 2월 신간회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한편 일본에 건너간 최린은 동경에서 아베와 만나 자치운동 추진에 관해 협의하였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시기 총독부는 신간회 등장 등에 자극되어 본격적으로 자치제 실시안을 만들어 본국 정부와의 협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곧 이은 일본 내각의 교체, 사이토의 제네바회의 대표 파견으로 인한 총독 경질 등으로 자치제 실시는 그 추진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최린은 아베의 권유에 따라 이승만·안창호와 의 접촉과 약소민족운동 시찰을 위해 1927년 6월 미국과 유럽으로 여행을 떠났다.⁹⁷⁾ 그는 미국과 유럽 각국을 돌아보고 1928년 4월 귀국하였는데, 그는 여행 도중 이승만·안창호와 접촉하였으나 자치운동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신간회 결성과 최린의 외유로 인해 국내에서는 일시 자치운동의 움직임이 소강상태에 빠졌다. 그러나 신간회 결성에 참여하지 못했던 민족주의 우파의 수양동우회와 《동아일보》 세력은 신간회에 참여하여 이를 활용할 구상을 세우게 된다. 이에 따라 수양동우회 세력은 신간회 평양지회를 만들었고, 《동아일보》의 송진우는 1928년 1월 신간회 경성지회에 가입하였다. 이들 가운데 특히 송진우는 여전히 자치운동에 대한 집념을 갖고 신간회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된다.⁹⁸⁾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주의자들은 1927년 말 신간회 내부에서의 해계모니 전취론 등을 제기하고 나왔다. 이로써 신간회 본부의 주도권을 갖고 있던 민족주의 좌파는 민족주의 우파와 사회주의자들에게 신간회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 여기서 이들은 1928년 5월 회합을 갖고 민족주의 좌파 중심의 ‘신간그룹’을 조직하고, 만일 자치당이 출현하게 되면 이에 항쟁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그리고 그해 11월 이들은 다시 모임을 갖고 만일 자치당이 등장하면 신간그룹은 신간당을 조직하여 이에 맞설 것 등을 결의하였다.⁹⁹⁾

1928년 봄 귀국한 최린은 밖으로는 이렇다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으나 천도교 신파의 중심세력인 천도교 청년당원들에게 자치론을 고취시키면서

97) 《동아일보》, 1927년 6월 11일.

98) 東邦生, 〈東亞日報社長宋鎮禹君と語る〉(《朝鮮及滿洲》1928년 2월호), 35쪽.

99) 姜德相 編, 《現代史資料》29·95쪽.

신파의 결속을 도모하고 있었다. 그런 가운데 1929년 8월 사이토가 다시 조선총독으로 부임해 왔다. 그리고 그는 앞서 본 것처럼 〈조선자치의회안〉을 만들어 일본 정부와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이로써 조선인들의 자치운동도 다시 활발하게 전개되기 시작했다. 1930년 들어 최린은 송진우 등과 자치운동에 대해 협의하였고, 천도교 신파 교도들에게 자신의 자치운동 결심을 피력하였다. 이에 구파의 이종린은 ‘절대 반대’를 표명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최린은 천도교청년당·조선농민사 등에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는 천도교 구파에게도 합동을 제안하여, 구파를 설득하여 천도교 신구파의 합동을 성사시키는 등 자치운동의 터를 닦아나갔다.¹⁰⁰⁾

《동아일보》도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서 1930년 여름 각 지국 주최로 지방발전간담회를 갖고 자치제 실시에 대비하여 각 지방사회에서의 유력자 포섭에 들어갔다. 그리고 자치운동과 관련한 움직임은 신간회 내부에까지 파급되었다. 1929년 말부터 신간회 내부에서도 이른바 ‘합법운동의 탈을 쓴 자치운동’의 움직임이 있다 하여 신간회 내부가 소란하게 된 것이다. 1929년 말 신간회는 광우학생운동 진상보고대회를 겸한 민중대회를 계획하였다가 중앙집행위원장 許憲을 비롯하여 다수의 간부들이 구속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재정부장이던 金炳魯가 중앙집행위원장 대리를 맡게 되었다. 김병로는 이후 그동안 신간회가 취해왔던 관헌과의 대립 방식의 운동을 지양하고, 합법적인 방향으로 신간회를 끌고 가려 하였다. 그런 가운데 신간회 중앙집행위원의 한 사람인 朴文燾는 《대중공론》이라는 잡지에 자치문제에 관한 원고를 보내 게재를 요구하고 친구에게 자치운동에 참여할 것을 권하는 서한을 보내 물의를 빚게 되었다. 신간회 경성지회는 이러한 사실을 조사·확인하였고, 박문회의 처벌을 본부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신간회 본부측은 “내사하였지만 我會의 지도정신을 위반한 점이 없다”고 통고하고 견책처분을 하는 데 그쳤다. 이러한 신간회 본부측의 ‘우경화’는 경성지회를 비롯하여 다른 지회 회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그런 가운데 1930년 11월에 열린 중앙집행위원회에서 김병로가 중앙집행

100) 〈치안상황〉, 《朝鮮問題資料叢書》6, 503쪽.

위원장으로 선출되고, 다른 집행위원도 대부분 온건파가 차지하였다.¹⁰¹⁾ 김병로는 12월 23일 각 지회에 보낸 〈운동정세에 대한 지시의 건〉에서 “대중의 당면이익을 대표하여 건전한 투쟁을 전개함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본부의 움직임에 대해 가장 크게 반발한 것은 천도교 구파의 이종린이 지회장으로 있던 신간회 경성지회였다. 경성지회와 본부 사이의 갈등은 결국 이종린 등 경성지회 회원 31명에 대한 본부의 停權처분으로 이어졌고, 이에 경성지회측도 각 지회에 〈통의문〉을 발송하여 본부의 합법주의 노선, 당면이익획득운동 노선에 대해 격렬히 비난하였다. 이들은 당면이익획득운동 노선에 대해서는 “아회는 결코 당면 이익을 위해 투쟁하는 단체가 아니다”고 반박하고, 또 ‘투쟁이 가능한 한도의 전략’에 대해서는 “아회는 아회의 목표를 향해 돌진할 뿐이지 가능·불가능을 표준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¹⁰²⁾ 신간회 본부측의 합법운동, 당면이익획득운동은 문면상으로는 자치운동을 지칭하고 있지는 않았다. 하지만 본부측이 자치론을 공공연히 주장한 박문회를 감싸고 돌았던 것은 합법운동이 단순한 합법운동이 아니라 자치운동의 가능성까지도 염두에 둔 것임을 짐작케 한다. 당시 청년운동의 중심이던 청년총동맹의 경우에도 중앙간부였던 김재한·이항발 등이 허일의 지도하에 합법운동으로의 방향전환을 모색하고 있었는데, 이항발은 바로 신간회 본부의 김병로파의 인물이었다. 1930년 10월 《별건곤》에 실린 청년총동맹의 중앙위원 KH생의 글은 명백하게 “언론·집회·결사의 자유 획득운동의 전제적 투쟁으로서 공민권 획득운동의 전개”를 제창하였다.

민족운동 진영의 이같은 움직임들은 앞서 본 같은 시기 조선총독부의 자치제 실시 모색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이었다. 당시 아베는 사이토 총독에게 보낸 편지에서 조금히 자치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만일 조선의회를 세우려 한다면 지명인사인 최린·허헌·박영철 등을 포섭해서 끌어 들여 ‘어용적인 대정당’을 만들어 ‘주머니 속의 도장’처럼 마음대로 꺼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하고 있었다.¹⁰³⁾ 그러나 앞서 본 것처럼 사이트

101) 위와 같음.

102) 위와 같음.

103) 강동진, 앞의 책, 363~364쪽.

의 자치의회안은 본국 정부에 의해 거부되고 대신 지방제도 개정의 선에서 이 문제는 낙착을 보고 말았다. 이로써 1930년 말을 고비로 자치운동은 사라지게 되었고, 권력의 부스러기라도 줍고자 하는 이들은 도회·부회·면협의회 등에 참여하는 길을 찾게 되었다. 하지만 최린 등은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않고 지방제도 개정이 자치의회로 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신간회 해소라는 새로운 정세를 이용하여 자치운동을 계속해보려 했다. 그러나 1931년 6월 우가키 카즈시케(宇垣一成)총독의 부임, 9월 일본군의 만주침략 등으로 전반적인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자치운동은 종언을 고하였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정세하에서 자치론자들은 최린을 선두로 하여 친일적 성향을 노골화하면서 일제의 추종세력으로 되어갔다.

(3) 자치론과 반자치론

일부 민족주의 진영의 자치운동 추진은 민족주의자들 내부에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고, 마침내는 찬반을 둘러싸고 민족주의 진영의 좌우파 분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뒤에 보듯이 반자치론자들은 스스로를 민족주의 좌파로 불렀고, 이에 따라 자치론자들은 이후 민족주의 우파로 불리게 되었다.

그러면 당시 자치운동을 추진한 민족주의 우파는 어떤 논리를 갖고 있었을까. 자치론은 두 가지 논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 하나는 “현재로서는 독립이 불가능하므로 독립의 기회에 대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준비론, 다른 하나는 “독립에 도달하는 한 단계로서 자치권을 획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단계적 운동론이었다. 준비론자들은 준비가 있어야만 독립의 때가 왔을 때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국제정세의 변화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준비로서의 정치운동’으로서 자치운동론이 제기되었던 것이다.¹⁰⁴⁾ 단계적 운동론은 독립에 도달하는 한 계층으로서 자치권 획득을 구상하는 것이었다. 서상일은 자치회의의 개설을 통해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등 정치적 자유를 얻어, 이를 통해 대중의 정치적 훈련을 쌓고 그 경험으로 독립운동의 단계로 나아가자는 구상을 갖

104) 주 7)의 송진우의 주장 참조.

고 있었다. 이러한 단계적 운동론은 총독부와 일본정부 당국이 자치권 부여를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었다. 그들은 자치권을 부여하는 것이 결국은 다음 단계인 독립운동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것이 되지 않을까 우려한 것이다. 당시 총독부의 밀정이던 노정일은 자치론을 “내정독립을 획득하고 다음에 합법적·조직적으로 조국을 회복하려는 사상”이라고 보고 있었다.¹⁰⁵⁾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자치론은 준비론, 단계적 운동론으로서 제기된 것이었다. 이는 결국 정치적 측면에서의 실력양성론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은 1910년대 이후의 실력양성론의 연장선 위에서 나온 것이었다. 그러나 자치론은 경제적·문화적 실력양성론과 비교할 때 그 타협성이 훨씬 강화된 것이며, 현실적으로는 민족운동의 목표를 독립이 아닌 자치로 하향 조정할 것을 의미하였다.

그러면 당시 같은 민족주의 진영 내부에서 자치운동에 반대한 민족주의 좌파의 논리는 무엇이였을까. 당시 반자치운동 진영에서는 자치운동의 움직임에 일제통치군이 간여하고 있다고 보고 있었다. 안재홍은 《조선일보》의 사설에서 자치운동을 ‘官制的 妥協運動’이라고 규정하고, “조선인의 타협운동은 통치군의 조선인에 대한 회유적 양보로 나타날 것”, 또는 “타협적 운동은 반드시 통치군들과 연락되고 호응함이 아니고서는 용이하게 나타나지 못할 것”이라 하여, 자치운동을 ‘관계적 타협운동’이라고 규정하였다.¹⁰⁶⁾ 그는 또 1926년 말 최린이 渡日하여 자치운동을 펴고 있는 동안 “조선인의 공리론적 점진주의자와 저들 통치군들과의 호응에 의하여 조선 대중의 돌진적 또는 좌경적 기세를 줄이고자 타협운동이 출현할 것은 분명하고, 이러한 내외의 사태는 그로 하여금 금후 2·3년을 넘지 않는 동안에 반드시 출현할 것을 예단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자치운동이 일제 지배자들과 조선인 ‘功利論的 漸進主義者’의 야합에 의해 조선 민중의 돌진적 좌경적 기세를 꺾기 위한 목적으로 출현할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그는 “이러한 관계적 타협운동이 생긴다 하면 우선 출발점부터 그릇된 것이라 할 것이요, 그 전도는 일층 불

105) 〈華峰報告書〉 1930년 11월 26일, 《齋藤實文書》 16, 225쪽.

106) 《조선일보》, 1926년 12월 16~19일, 사설 〈조선금후의 정치적 추세〉.

신임을 받을 것”이라 하여, 자치운동이 결코 민중의 호응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¹⁰⁷⁾

한편 안재홍은 총독부측이 자치제 실시설을 흘리고 있음을 주목하고, 이는 민족운동의 보조를 교란하는 데 근본 목적이 있다고 보았다. 즉 소예지마가 〈朝鮮統治의 根本義〉에서 한편으로는 자치제 실시를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 자치고 무엇이요 말할 경우가 아니다”라고 한 것은, 그 역시 진정한 의미를 갖고 한국에서 자치제 실시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한국인들의 민족운동의 보조를 교란시키기 위해 자치론을 펴고 있는 측면이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하였다.¹⁰⁸⁾

그러면서 1927년 초 《조선일보》는 아직 자치운동이 소문으로만 나돌 뿐 구체적으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지만, 언젠가는 자치운동을 위한 타협적인 ‘우익민족단체’가 결성되리라 전망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해 미리 ‘민족좌익전선’을 결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¹⁰⁹⁾ 물론 이때 ‘민족좌익전선’이란 ‘기회주의’와 ‘우경적인 타협운동’에 반대하는 ‘비타협적인 민족주의’에 동조하는 이들의 연합전선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때의 ‘비타협적인 민족주의’란 사회주의자들도 자치운동에 반대한다면 모두 이에 포괄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¹¹⁰⁾ 여기서 민족주의 좌파와 사회주의자들 간의 협동전선론이 대두하게 되었다. 1925년 7월 25일자 《조선일보》 사설은 당시의 조선에서는 계급문제보다는 민족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즉 구미와 일본제국주의와 아시아·아프리카 약소민족간의 문제는 계급 문제라기보다는 민족 문제라 할 수 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전세계적으로 동요가 계속되고 있는 바 이는 계급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중요하게는 민족문제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던 것이다.¹¹¹⁾

107) 위와 같음.

108) 《조선일보》, 1925년 12월 4~5일, 사설 〈소위 ‘副島伯의 언론’문제－통치군의 보조교란책〉.

109) 《조선일보》, 1927년 2월 9일, 사설 〈민족좌익전선의 의의 및 사명〉.

110) 위와 같음.

111) 《조선일보》, 1925년 6월 28일, 사설 〈東方 諸國民의 覺醒－侵略國家의 深長한 煩悶－〉.

《조선일보》는 더 나아가 민족해방을 목표로 하는 민족운동과 계급해방을 목표로 하는 사회운동은 공동전선을 형성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그 이유를 “제국주의와 항쟁하는 것이 민족운동의 임무도 되고 또한 사회운동의 임무도 되는 것을 알 수 있나니 제국주의는 자본주의의 최신계단으로서 자본주의가 필연적으로 도달할 계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 제국주의를 공동의 목표로 하고 사회운동과 민족운동이 서로 악수해야 할 터”라고 주장하였다.¹¹²⁾ 제국주의는 조선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의 공동의 적이기 때문에 연합전선을 펼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 글은 “노동계급의 해방은 약소민족의 해방운동과 서로 악수하고 나아가는 것이 현하의 世界相”이라고 주장하였다.¹¹³⁾ 그러면서 사회주의자와 민족주의자는 비록 민족해방 이후 어떠한 체제의 국가를 건설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민족해방을 선차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므로 민족해방의 단계까지는 보조를 같이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¹¹⁴⁾ 결국 당시 자치운동에 반대하는 민족주의 좌파는 사회주의자들에 대해 아직은 계급해방에 중점을 두는 운동보다는 민족해방에 중점을 두는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하면서, 민족협동전선의 결성을 제의하고 있었던 것이다.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의 민족협동전선 결성 주장은 1925년 초부터 시작되어 1926년 한편에서는 이론적으로 더 세련화되고, 다른 한편에서는 제2차 조선공산당의 강달영과의 협의, 조선민흥회 결성 등의 움직임을 거쳐 1927년 마침내 신간회의 결성으로 열매맺게 되었다.

〈朴贊勝〉

112) 《조선일보》, 1926년 4월 14일, 사설 〈社會運動과 民族運動의 相關〉.

113) 《조선일보》, 1926년 6월 14일, 사설 〈계급의식과 민족의식〉.

114) 위와 같음.

2. 조선공산당의 성립과 활동

1) 사회주의사상의 도입

(1) 사회주의사상의 국내 도입과 수용

1919년 식민지 조선에서 일본제국주의에 항거하는 전민족적·혁명적 항일 봉기였던 3·1운동이 일어난 이후, 국내에서는 민족주의의 사상적 무기력함이 드러나면서 식민지 민중들에게 사회주의사상이 보급되기 시작했다.

특히 1917년 10월 러시아혁명의 물결은 중국과 일본 그리고 식민지 조선에서도 거센 파도처럼 밀려들어와 식민지 지식인들에게 민족해방운동의 한 이념적 무기로서 자리잡게 되었다.

조선 공산주의운동의 독특함은 그것이 국내보다 국외, 즉 러시아에서 직접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러시아에 존재했던 두 개의 고려공산당은 코민테른(Comintern)과 직접적인 관련 속에서 활동하였고, 이러한 조건 속에서 국내에서 사회주의 분파들이 형성되었다. 따라서 국내 사회주의 분파의 형성은 그 성립 초기부터 단지 마르크스주의 이론의 선전의 차원이 아니라, 일본제국주의의 독점적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정치적 실천활동과 국외 전위당과의 긴밀한 연관 속에서 형성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실천활동에 대한 전략·전술의 차이는 국내에 다양한 스펙트럼의 사회주의 분파를 형성시켰다.

사회주의사상의 형성·발전과정은 자본주의의 형성과 더불어 성장했던 노동자운동과 마르크스주의의 융합의 과정이었다. 그러나 서구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라는 특수한 조건 속에서 성립한 식민지 자본주의 하에서 사회주의사상이 유입되었고 이것은 곧바로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동시에 추구하는 목적을 갖게 되었다.

1919년 3·1운동은 식민지 민중에게 일본제국주의의 폭압성과 대중적인 정치의식을 각인시키는 거대한 역사적 경험이었다. 조선인 혁명가 金山(본명 장지락)의 일대기를 그린 님 웨일즈(Nim Wales)의 《아리랑》은 3·1운동 당시

김산의 역사적 경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이것이 나로서는 처음으로 정치의식에 눈을 뜨게 된 계기였다. 대중운동의 힘이 내 존재를 뿌리로부터 뒤흔들어 놓았다. 나는 하루종일 거리를 뛰어다녔고 아무 시위이나 가담하여 목이 터져라 외쳐댔다. ... 나는 힘의 의미와 무저항의 공허함을 깨달았다. ... 전국에서 도합 200만 명 이상이 시위에 참가하였다. 재산도, 농사일도, 일신상의 안전도 애국열의 물결 속에서 모조리 잊어버렸다. 이것은 인류역사가 시작된 이래 가장 특이한 운동이었을 것이다(남 웨일즈, 조우화 옮김, 《아리랑》, 동녘, 1992, 63~65쪽).

3·1운동에 영향을 준 사상적 배경으로 우리는 흔히 윌슨(Thomas Woodrow Wilson)의 민족자결주의를 거론한다. 그러나 1917년 10월 러시아혁명과 레닌(Lenin)의 〈민족자결권테제〉는 이에 앞서 식민지 민중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3·1운동 직전 동경 유학생들의 〈2·8독립선언서〉에 “이미 군국주의적 야심을 포기하고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러시아는 신국가의 건설에 종사하는 중이며 ... 정의와 자유를 기초로 한 민주주의 상에 선진국의 모범에 따라 신국가를 건설 ... ”이라고 하며 러시아혁명의 결과에 따른 세계사의 새로운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 또 3·1운동 직후 韓龍雲은 〈조선독립의 서〉에서 “정의·인도, 즉 평화의 신은 독일 인민들의 손을 빌어 세계의 군국주의를 타파함이니, 곧 전쟁 중의 독일혁명이 이것이다. 독일혁명은 사회당의 손에서 일어난 즉, 그 유래가 오래되고 또한 러시아의 자극을 받은 바 있나니...”라고 하여 러시아혁명의 영향을 받은 1918년 독일혁명의 의의를 언급하고 있다.

朴殷植은 1920년 《獨立運動之血史》에서 다음과 같이 러시아혁명에 대한 벽찬 감격과 기대를 서술하고 있다.

러시아 공산당은 서두에 적기를 내걸고 전체정치를 타도하여 민중에게 자유와 평등을 가져오고 제민족의 자유와 자결을 선포하였다. 과거에 극단적인 침략주의자가 극단적인 공화주의자로 바뀌었다. 이것은 세계개조의 최초의 신호탄이 되었다.

식민지하에서 사회주의사상은 1910년대 말 러시아혁명의 영향과 제1차 세계대전 직후 고양된 국제혁명운동의 영향, 민족자결주의론에 대한 자각 등의 국제적 조건과 일제의 가혹한 식민통치에 따른 민족적·계급적 모순의 첨예화, 3·1운동 이후 정치의식의 고양 등을 계기로 국내 신문·잡지 등의 언론매체를 통해 수용되었다.

이 무렵 일간지와 정기 간행물은 유물사관, 소비에트 혁명정부와 레닌에 관한 기사를 종종 다루고 있었다. 1921년 6월 3일부터 8월 31일까지 무려 73회에 걸쳐 <니콜라이 레닌은 어떠한 사람인가>라는 표제하에 《동아일보》는 그의 일생과 활동 및 볼셰비키혁명 등을 연재하였다.

국내에서 3·1운동을 거치면서 일부 민족주의자와 식민지 지식인들은 자신의 이론적·실천적 무기력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무정부주의·사회주의·마르크스-레닌주의 등 다양한 사회사상을 소개하면서 민족해방운동의 이념적 무기로서 수용하게 되었다.

그들은 지역적 관계·학맥·친소관계로 맺어져 동지적 관계를 형성하였고 대중적 실천을 경험하면서 점차 성장해갔다. 예컨대 ‘서울파’의 리더인 金思國은 3·1운동 시기인 1919년 4월 23일 ‘국민대회사건’으로 체포되어 2년형을 선고받고 1920년 10월 말에 석방되었다.¹⁾

출옥 후부터 김사국은 서울청년회 안팎의 자신의 동지들과 마르크스주의 학습을 계속해 왔던 것 같다. 그가 1922년 중반 이후 ‘서울파’의 가장 탁월한 지도자로 부상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사실을 반증해주는 것이다. 1921년 초부터 1922년 4월 무렵 김사국의 활동²⁾은 민족에 대한 뜨거운 애정을 지닌

1) 김사국은 1892년 11월 9일 충남의 빈한한 가정에서 출생하여 10살 때 부친을 잃고 편모슬하에서 동생 金思民과 모친을 따라 금강산 楡岾寺에 들어가 한학을 배우다가 그후 서울에 올라와 보성학교에서 수학하다가 중도에 퇴학하였다. 1910년 한일합병이 되자 불만을 품고 만주와 시베리아로 유랑하며 동지의 결속에 노력하다가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국내로 들어와 ‘국민대회’사건으로 체포되었다.

2) 그는 1920년에 출감한 후 노동운동의 필요를 절실히 느끼고 노동대회에 간부가 되어 활동하였고, 1921년 봄에 청년연합회의 편집부 위원으로 선출되는 동시에 서울청년회를 조직하였다. 1921년 11월에 동경에 건너가 《5·1신보》를 발기하였다. 김사국은 1921년 11월 29일 동경에서 黑壽會 창립에 참여하였다.

한 개인이 급속히 사회주의자로 변모하게 되는 과정을 응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아마 식민지 조선의 민족적·계급적 해방을 동시에 열망했던 대다수 사회주의자들이 형성되는 과정이었을 것이다.

또한 1916년 가을 동경에서 金綴洙 등이 신아동맹단을 결성하고 “아세아에 있어서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고 새 아세아를 세우는데 전력을 다할 것”을 선언하였다. 이후 신아동맹단은 3·1운동의 대중적 열기에 고무되어 1920년 6월 서울에서 5차대회를 열고 명칭을 사회혁명당으로 바꾸었다. 이들은 “계급타파와 사유제도의 타파, 무산계급 전제정치와 전국인구의 10분의 7되는 무산자들과 함께 혁명운동을 실행할 것” 등을 주장하였다. 1921년 5월 중국 상해에서 고려공산당(상해파) 창립대회에 8명의 대표를 파견하면서 상해파 국내지부로 위상을 갖게 되었다.³⁾

1920~1922년 무렵 국내에서 발간된 《개벽》·《공제》·《아성》·《신생활》 등 잡지에는 크로포트킨(Kropotkin) 등의 무정부주의에 대한 글이 빈번하게 소개되는 등 민족주의·무정부주의·사회주의 등이 혼재되면서 그 내부에 분화과정이 일어나는 시기였다.

‘민중문화의 제창, 자유사상의 고취’를 내걸고 1922년 3월 창간된 《신생활》 6호에서 鄭栢은 〈노동로서아의 문화시설〉이란 글을 통해 1917년 10월 혁명 이후 건설된 노동정부는 미술·연극·문학·교육·정치경제학·사회과학 등 각 부분에서 새로운 민중적 문화를 성장시키고 있음을 소개하고 있다. 또 辛日鎔은 〈마르크스사상의 연구—계급쟁투설—〉에서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의 계급·계급의식·프롤레타리아독재에 대한 사상 등을 소개하였다.

박열·김약수 등이 주도하여 흑도회가 창립되었을 무렵 일본 사상계는 생디칼리즘·아나키즘이 풍미하였던 시기였다. 일본의 저명한 무정부주의자인 大杉榮·岩佐作太郎과 사회주의자인 堺利彦·高津正道 등의 후원하에 흑도회는 창립되었다. 이후 흑도회는 1922년 9월 내부의 사상적 대립으로 공산주의 분파와 아나키스트 분파로 분화되어 해체되었다.

- 3) 이현주, 《국내 임시정부 수립운동과 사회주의세력의 형성(1919~1923)—서울파, 상해파를 중심으로—》(인하대 박사학위논문, 1999), 132~144쪽.

이애숙, 《1922~1924년 국내의 민족통일전선운동》(《역사와 현실》 28, 한국역사연구회, 1998), 94쪽.

그는 ‘노동운동의 사명과 무산계급의 독재’라는 절에서 다음과 같이 프롤레타리아독재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노동조합운동 일반이 국가나 사회에 대하여 국민적 요구를 제출하는 것인 이상에는 노동당은 노동조합운동 전체의 정치적 표현이다. 그 기초된 노동조합운동이 확실하고 강고함에 따라서 노동당은 더욱 유력한 활동을 하고 능히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더욱 결과가 진지한 의의를 가지게 될 것이다. 노동조합은 단순히 현재 다소의 사업으로써 만족할 것이 아니요, 사회변혁의 과정에서 발생한 자본주의○○○(의 변혁)를 위하여 활동하는 무산계급의 포부의 중력의 초점 및 중심이 될 것은 물론이다. 이 목적의 성취에 가장 유력한 근간은 정권장악이다. 그 원조에 의하여 무산계급은 의식적으로 자본주의의 사회를 ○○○○○(사회주의의)사회로 변혁할 수 있다는 견해다. 이 변혁시대에는 일종의 정치적 과도시대가 부수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 상태를 무산계급독재라고 명칭하는 것이다(辛日鎔, 〈마르크스 思想의 研究—階級鬭爭說—〉, 《新生活》6, 1922년 6월, 40~41쪽).

즉, 그는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고타강령비판〉에서 형성되고 레닌의 《국가와 혁명》에서 정식화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의 이행기로서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 독재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또 김산의 다음의 언급에서 당시 사회주의자들이 마르크스의 〈공산당선언〉, 레닌의 《국가와 혁명》 등을 필수적으로 학습하였음과 무정부주의자에서 사회주의자로의 이론적·정치적 변화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1921년 북경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마르크스주의 문헌을 읽기 시작하였다. 우선 〈공산당선언〉을 공부한 후, 레닌의 《국가와 혁명》을, 그 다음엔 《사회발전사》라는 논문집을 읽었다. 나는 과학적 대중투쟁의 중요성과 쿠데타와 테러행위의 무익함을 금방 깨닫게 되었다. 나는 아직도 테러리스트들의 영웅적인 희생에 찬탄을 금할 수 없으며 내 무정부주의자 친구들 사이에 만연한 동지들의 자유로운 정신을 좋아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들이 실패할 운명에 놓여 있다는 것을 분명히 느꼈다(님 웨일즈, 조우화 옮김, 《아리랑》, 동녘, 1992, 121쪽).

이와 같이 러시아혁명과 1919년 3·1운동을 커다란 분수령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식민지 지식인들은 사회주의를 수용, 소개하면서 사상단체·비밀 공

산주의그룹들을 조직하여 민족해방과 계급해방을 위해 투쟁하였다.

(2) 국외 전위정당의 결성과 활동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사상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특이한 점은 1917년 러시아혁명으로 성립된 최초의 사회주의 국가인 러시아와 지리적으로 인접하다는 점이다. 국내에서 사회주의사상의 유입과 동시에 사회주의단체가 조직되기 시작했던 이유는 바로 이러한 특수성에 있었다. 즉 러시아지역에서 한인사회주의단체의 존재와 밀접한 연관이 있었다.

1919년 국내에 사회주의사상이 본격적으로 도입·수용되기 이전 러시아 지역에 이주해간 조선인들은 러시아혁명을 직접 경험하고 참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사회주의를 수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들은 사회주의사상 수용과정에서 일반적으로 경험하는 다른 사상적 조류와의 갈등을 겪지 않고 곧바로 전위당을 창립하게 되었다.

1919년 3·1운동의 정치적 세례와 1920~1921년 내전시기에 조선인 공산주의 그룹은 활발히 출현하였다. 1920년 말에는 소비에트 러시아의 극동과 시베리아 지역에 16개 이상의 조선인 당 조직이 존재하고 당원 및 후보자수는 2,305인이었다. 조선인 사회주의자들은 각지에서 대규모 선전활동과 군사·조직 활동을 수행했다. 조선어 전단과 소책자가 발행되고 조선인 적군 부대가 편성되어 일본 점령군과 백위군에 항거하여 투쟁했다.

조선인 사회주의자는 전위당 창립에 노력하여 1918년 4월 李東輝 등이 중심이 되어 韓人社會黨을 결성했다. 1919년 3월 국내에서 대규모 민중운동이 일어나는 정세 속에서 1919년 4월 한인사회당은 블라디보스톡에서 2차당대회를 열고 新民會 ‘좌파’세력을 포함하여 당조직을 확대하였다. 이 대회에서 한인사회당은 조선혁명에 대한 전술문제, 코민테른 가입문제, 코민테른에 한인사회당 대표를 파견하는 문제 등을 논의하여 朴鎭淳 등이 모스크바에 파견되었다.⁴⁾ 이후 한인사회당은 이동휘가 상해 임시정부의 국무총리로 부임

4) 엠.아.베르시즈, <ロシアにおける東方の國際主義者と民族解放運動の若干の問題 (1918~1920년 7월)>(國際勞動運動研究所 編, 國際關係研究所 譯, 《コミンテルンと東方》, 1971), 62쪽.

하면서 활동무대를 상해로 옮기게 된다. 이들은 1921년 5월 고려공산당(상해파)을 창립하였다.

한편 1920년 1월 러시아의 이르쿠츠크(Irkutsk)에서 러시아공산당 이르쿠츠크현 위원회 산하에 한인공산당이 창립되었고 이들도 1921년 5월 고려공산당을 창립하였다.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라는 두 개의 고려공산당이 동시에 결성된 것이다. 이들은 국내의 정세에 끊임없이 관심을 기울이면서 국내에 전위정당을 조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상해파 고려공산당은 <강령>에서 “민족적 해방이 사회혁명의 전제”요, “이 역시 곧 세계혁명의 달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상해파는 러시아와 중국에서 주로 활동하였지만 그들의 목적은 국내 식민지 조선을 일본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키고 동시에 사회주의국가를 세워야겠다는 것이었다. 고려공산당 <선언서>는 마르크스-엥겔스(Friedrich Engels)의 <공산당선언>에 입각하여 민족해방운동과 무산대중의 해방을 토로하였고 고려공산당 <강령>은 “우리는 무산계급의 執政을 자본주의의 폭위로부터 인류를 해방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또 보편적 절대 자치의 소비에트정치를 무산계급 집정의 유일의 政體”라고 하였다. 이와 같이 상해파 고려공산당은 <강령>에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의한 소비에트 정부의 수립을 최대 강령으로 선명하게 밝히고 있었다.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의 대립은 강령이나 노선 상의 차이보다는 통일전선의 대상과 관련된다. 첫번째 대립은 상해의 임시정부 참여 문제였다. 상해파는 고심 끝에 임시정부 참여를 결정하지만 이르쿠츠크파는 이에 반대하고 대한국민의회 계열과 상해임정과의 ‘타협’을 거부했다. 또 상해파는 베르흐네 우진스크(Верхне-Учинск)의 통합대회에서 통일전선의 대상으로 민족주의진영내의 점진적 문화운동론자를 포함하였으나 이르쿠츠크파는 이들에 대해 고립화 정책을 취했다.

임정석, 《고려공산당연구》(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3), 38~50쪽.

전명혁, <1920년대 공산주의운동의 기원과 조선공산당>(역사학연구소 편, 《한국공산주의운동사연구-현황과 전망-》, 아세아문화사), 75쪽.

2) 국내 무산계급 운동의 성장

(1) 사회주의 분파의 형성

러시아에서 한인사회당 그리고 고려공산당은 코민테른과 긴밀한 연관 속에서 국내에 전위당을 건설하려는 노력을 끊임없이 견지하였다. 그러나 코민테른의 자금을 둘러싼 문제와 전위당 건설에 대한 견해의 차이는 이들 사이에 최초의 대립을 초래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국내의 사회주의자들에게 신뢰를 상실케 했다.

이 무렵 국내 각지에서는 합법적인 모습으로 수많은 운동단체들이 조직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조선청년회연합회기성회와 조선노동공제회 등이 전국에 존재하는 노동·농민·청년단체를 망라하는 위상을 가지고 조직되었다. 이들 내부에는 민족주의자·무정부주의자·사회주의자 등 다양한 사상적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이 혼재되어 있었다.

1921년 서울靑年會, 1923년 北星會(1924년 북풍회), 1923년 新思想研究會(1924년 화요회), 1924년 조선노동당 등은 제각기 그 이면에 비합법적 공산주의 그룹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후 합법적인 표면단체인 사상단체라는 이름을 내걸었다.

서울청년회 내부의 비합법적 조직은 고려공산동맹이 북풍회 내부에는 카엔당이 그리고 조선노동당 내부에는 스파르타쿠스당이 존재하였다. 화요회는 코민테른과 직접적으로 조직적 관계를 맺으면서 주로 러시아의 이르쿠츠크파 계열의 사회주의자들과 긴밀한 연관을 가지면서 활동하였다. 이들은 1924년 초부터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청년총동맹 등 전국적인 대중운동체를 조직한 이후 본격적으로 국내에 전위당을 결성하려고 하였다.

이무렵 사회주의 분파들이 독자적인 모습을 띠고 등장하게 되는 데에는 ‘金允植사회장사건’과 ‘사기공산당사건’이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1922년 1월 ‘김윤식사회장사건’은 한말 대제학을 지냈고 한일합방 후 일제로부터 작위를 수여받았던 김윤식의 장례를 둘러싸고 상해파 국내부와 국내 사회주의 세력

사이에 의견 대립으로 일어났다. 상해파 국내세력이 주도하고 《동아일보》 계열의 민족주의세력이 참가한 ‘김윤식사회장 장의위원회’에 대하여 무산자동지회·조선노동공제회 등에서는 ‘김윤식사회장반대회’를 결성하여 적극적인 반대투쟁을 벌여 마침내 사회장은 취소되었다. 당시 무산자동지회의 김한은 김윤식사회장반대운동은 “귀족사회를 파괴하고 자본가계급 타파와 사회개량가의 매장”을 위한 투쟁이었다고 규정하였다.

1922년 4월에는 ‘사기공산당사건’이 일어났다. 이는 상해파 고려공산당의 국내간부가 코민테른으로부터 받은 자금의 일부를 사적으로 남용하였다고 하여 이들을 주요 대중단체인 조선청년회연합회·노동공제회·서울청년회에서 축출하는 사건이었다. 이 과정에서 서울청년회는 내부 분화를 겪으면서 김사국을 비롯한 서울파가 출현하였다. 화요파의 배성룡은 〈조선사회운동소사〉에서 “사기공산당사건관계자의 제명을 역설한 서울청년회는 그 존재가 세상에 드러나는 동시에 그 자체가 아주 무산청년운동의 색채를 띠게”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1921년 1월에 조직된 서울청년회는 ‘김윤식사회장사건’, ‘사기공산당사건’을 겪으면서 그들 내부에 존재했던 이론적 경향들이 대립을 보이게 되었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적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후 김사국·李英을 비롯한 서울청년회 인물들은 1922년 10월 ‘공산주의 그룹’을 조직하게 되었다. 그들은 독자적인 강령과 조직체계를 갖춘 전위당을 지향하는 그룹이었다. 사회주의 분파로서 서울파가 형성되었던 것이다.

그들은 1922년 10월 자유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중운동에 본격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여 공업지역과 항만지역 등 산업 중심지에 조직적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1923년 2월 ‘공산주의 그룹’은 고려공산동맹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김사국을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코민테른집행위원회 원동부에 파견하여 코민테른으로부터 조선공산당으로 승인받기를 원했으나, 그들의 희망은 좌절되었다. 고려공산동맹은 1923년 3월 전조선청년당대회를 열었다.⁵⁾

5) 전명혁, 《1920년대 국내사회주의운동 연구-서울파를 중심으로-》(성균관대

서울파가 사회주의 분파로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때에 金若水 등을 중심으로 하는 북성회 그룹도 까엔당(К.Н.Дан)이라는 비합법 전위조직을 창립하여 활발한 대중사업을 전개하기 시작했다.⁶⁾ 그들은 1924년 11월에 北風會라는 표면적 사상단체를 통하여 자신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1920년 5월 조선노동공제회 내부의 마르크스주의 학습씨클에서부터 시작하여 1921년 10월 ‘꿈그룹’을 형성한 북풍파는 주로 일본 등지에서 재일 조선인 유학생들을 조직하여 노동운동과 결합하면서 조직을 확장시켜 나갔다.

김약수를 비롯하여 정태신·김종범·송봉우·李憲 등은 일본에서 1923년 1월 15일 北星會라는 합법 사상단체를 조직하여 《척후대》·《전진》·《해방운동》 등 기관지를 발행하면서 사회주의 조직으로서의 성격을 드러내었다.

1923년 8월 무렵부터 그들은 국내에 들어와 전국을 순회하면서 선전사업을 수행하면서 조직화 사업을 벌여나갔다. 1924년 1월부터는 경남노동운동자간친회·남선노동동맹·전라도노동연맹 등을 조직하고 마침내 1924년 4월 조선노동총동맹을 결성하는데 하나의 축을 형성하여 일제 식민지하 노동자·농민운동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그들은 1924년 4월 17일 까엔당이라는 비합법 조직과 합법단체 건설사를 조직하고, 1924년 11월 25일 까엔당의 표면단체였던 建設社와 焰群社 그리고 개별 사회주의자들을 망라하여 마침내 북풍회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조선노동공제회 내부에서 비롯하여 일본의 북성회로 이어지면서 국내 유력한 사회주의 분파로서 자리잡게 되는 ‘북풍파’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한편 1923년 12월 무렵 일본·러시아 등지에서 활동했던 20여 명이 모여 공산주의단체인 스파르타쿠스당을 조직했다. 이들은 1924년 8월 17일 전일·이남두·이정수·이충모·이극광·김연희 등 7명의 발기로 스파르타쿠

박사학위논문, 1998), 72~74쪽.

——, 〈서울청년회의 분화와 서울파의 형성〉(《외대사학》 9, 1999), 153~164쪽.

6) 전명혁, 〈1920년대 전반기 까엔당과 북풍회의 성립과 활동〉(《성대사림》 12·13합집, 1997).

박철하, 〈북풍과 공산주의 그룹의 형성〉(《역사와 현실》 28, 1998).

스당의 표면단체로서 조선노동당이라는 사상단체를 결성하고 노동학원을 설치하여 계급의식과 사회주의사상을 선전하는 활동을 하였다. 이들은 출판 및 정치교양사업에 주력하기 위해 프롤레타리아사를 두고 기관지 《무산계급》을 발행하려 했지만 일제에 의해 압수당하고 발행금지를 당했다.⁷⁾

(2) 꼬르뷰로 국내부와 화요파의 성립

1921년 6월 ‘자유시사변’으로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의 대립이 무력충돌로까지 확대되자 코민테른 검사위원회의 벨라쿤(Bella Kun)·쿠시넨(O. kuusinen)·사파로프(G. Safarov)는 1921년 11월 15일 〈코민테른 검사위원회 결정서〉를 통하여 “서로 충돌하는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가 서로 연락할 것은 물론,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코민테른집행위원회에서 조선 내지 및 해외의 제단체의 대표로 구성된 대의원회를 소집할 때까지 양당은 서로 연합하여 쌍방 동수로서 임시중앙간부를 조직한다는 결정을 인정하는 것을 照會함으로서 원동(동양)비서부는 이를 준행할 책임을 갖는다”⁸⁾는 결정을 내린다. 또한 1922년 4월 22일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의 브란델·쿠시넨·사파로프는 “조선(고려)공산당 중앙간부는 그 위치는 치타(Chita)로 정함과 동시에 내지에는 조선부(국내부)를 설치할 책임을 진다”⁹⁾는 결정을 내린다.

코민테른집행위원회의 〈1921년 11월 결정〉과 〈1922년 4월 결정〉은 두 개의 고려공산당 통합을 위해 1922년 10월 15일 베르흐네우진스크에서 ‘고려공산당연합대회’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이 대회에서 ‘이르쿠츠크파’가 중도에 회의를 거부함으로써 ‘상해파’만으로 회의가 진행되었다. 베르흐네우진스크 대회에서 두 파의 통합이 실패하자 코민테른은 1922년 11~12월 제4차 대회에서 가따야마 센(片山潛)·陳獨秀·쿠시넨·보이쥔스키(G. N. Voitinsky) 등 8인으로 구성된 ‘조선문제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선문제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7) 전명혁, 앞의 책, 44~51쪽.

8) 〈第三國際共產黨(코민테른) 檢査委員會 決定書(1921년 11월 15일)〉(朝鮮總督府 警務局, 《大正 11年 朝鮮治安狀況》2, 高麗書林, 1989), 450쪽.

9)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조선문제에 대한 코민테른집행위원회의 결정서(1922년 4월 22일)〉(朝鮮總督府 警務局, 위의 책), 441쪽.

내지 못하고 이후 코민테른 확대집행위원회로 위임할 것을 결정하였다. 그리고 1922년 12월 집행위원회는 두개의 고려공산당의 해산명령을 내리고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遠東部 산하에 꼬르뷰로(Корбуро)를 설치하게 되었다.¹⁰⁾

꼬르뷰로는 국내 당건설을 위해 辛鐵과 金在鳳을 파견하였고, 그들은 1923년 4월과 5월에 서울에 들어와서 국내 사회주의 각 분파의 인물들을 접촉하면서 꼬르뷰로의 당건설 방침과 계획을 전달하면서 당건설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북풍파’의 김약수 등, ‘상해파’의 이봉수 등과 1923년 5월 金燦의 집에서 꼬르뷰로 국내부를 조직한다. 당창건준비기관으로서 꼬르뷰로 국내부는 김재봉을 책임비서로, 간부에 신백우·김약수·이봉수·원우관 그리고 공산청년회 책임비서에 신철, 간부에 김찬(김낙준)·安秉珍 등으로 구성되었다.¹¹⁾ 朴憲永과 曹奉岩이 고려공산청년회 준비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은 꼬르뷰로와 국내부의 성립에 대한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베르흐네우진스크 연합대회에 코민테른에서는 상해파·이르쿠츠크파·내지중립파·김약수파를 합하여 고려부(꼬르뷰로)를 조직한 후 이것을 ○○○○○○(블라디보스톡)에 두고 내지에다가는 내지부(국내부)를 조직하였다. 그리하여 코민테른의 결의안과 코민테른대표와 김(국제공청 KИМ)의 대표의 협동적 지령에 의하여 … 중앙지도부(고려공산청년회 중앙총국)는 그의 대표를 내지부에 들여보내고(신용기동무) 이어 내지부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었다.(〈高麗靑靑一般進行情況(1925년 4월 18일)〉, 러시아현대사문서보관 및 연구센터 ф.533 о п.10 д.1908, 8~9쪽).

이 보고는 꼬르뷰로 국내부의 공산청년회 조직이 사실은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총국’¹²⁾의 성원과 동일 인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1923년 4월에 제5차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총국’의 책임자인 신철과 간부 안병진(고

10) 水野直樹, 〈コミンテルンと朝鮮〉(《朝鮮民族運動史研究》No1, 1984; 임영태편, 《식민지시대 한국사회와 운동》, 사계절, 1985), 330쪽.

11) 京城地方法院, 〈金洛俊調書(1931. 5)〉(金俊燁·金昌順 編, 《韓國共產主義運動史(資料篇 I)》, 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1979), 13쪽.

12) 고려공산청년회의 성립과 활동에 대해서는 박철하, 〈고려공산청년회의 조직과 활동(1920~1928)〉(한국역사연구회, 《한국근현대 청년운동사》, 풀빛, 1995)를 참조.

준)이 꼬르뷰로 국내부의 공산청년회의 집행부서를 겸직 활동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꼬르뷰로와 국내부가 여전히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계열의 영향 속에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국제공산청년회(KIM)에서 활동하고 있던 이르쿠츠크파의 趙勳 등은 끊임없이 국내부의 활동에 개입하고 있었다.

이후 국내부는 윤덕병·홍중식·홍덕유 등 30여 명을 조직으로 끌어들이고 각 지역별 야체이카 건설에 착수했다.¹³⁾ 1923년 7월 7일 국내부는 그들의 합법적인 표면단체로서 신사상연구회를 조직하였다. 또한 1924년 2월 11일 이준태·박일병 등은 공산청년회의 합법조직으로 신홍청년동맹을 만들고 잡지사 '신홍청년사'를 발기하여 기관지 《신홍청년》을 발간하려 하였다. 그리고 1924년 11월 19일 신사상연구회의 이름을 화요회로 개칭하였다. 이는 '화요파'의 탄생을 의미한다.

(3) 오르그뷰로와 '13인회'

1923년 1~6월 상해에서 열린 국민대표회에서 개조파와 창조파의 대립과 1923년 8월 보이쉴스키의 〈민족적 당창건 지침〉 등은 상해파와 노선대립을 일으키고 마침내 1923년 12월 상해파의 지도자 이동휘는 꼬르뷰로를 탈퇴하게 되었다.¹⁴⁾

이후 1924년 2월 코민테른집행위원회는 조선문제에 대한 위원회를 소집하는데 여기에서 보이쉴스키와 쿠시넨의 견해 차이가 발생하였다. 보이쉴스키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은 근로대중을 노동조합·농민조합에 끌어들여 자신의 독자성을 유지하면서 민족주의적 단체에서 활동하도록 하고 이를 꼬르뷰로의 강령에 기초하여 통합하도록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쿠시넨은 공산주의자를 민족적 단체에 포함하여 하나의 당에 통합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13) 김찬은 대략 1924년 봄까지 서울에 7개의 야체이카와 주요도시에 야체이카를 조직했다고 진술했다. 각 야체이카는 5~6인 정도로 구성되었다. 시대일보사-洪南杓, 노동총동맹-權五高, 조선일보사-金在鳳, 신사상연구회(화요회)-洪瓊植, 신홍청년동맹-全無, 신의주-獨孤全, 마산-金明奎, 전남 광주-申東浩, 대구-崔元澤, 평양-陳秉基, 인천-安基成(京城地方法院, 〈金洛俊調查〉), 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編, 《韓國共產主義運動史(資料篇 I)》, 1979, 13쪽.

14) 전명혁, 앞의 글, 54~59쪽.

하면서 독자적인 공산당의 존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¹⁵⁾

이와 같이 코민테른집행위원회 내부에서 조선공산당 창건에 대한 입장 차이가 존재하였다. 보이젠스키와 쿠시넨의 견해 차이는 식민지 조선의 혁명운동을 위한 조선공산당과 반제통일전선체의 결성과 두 조직의 관계를 둘러싼 코민테른 내부의 대립이었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단지 조선문제에만 국한되어 있던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중국에서 국공합작을 둘러싼 중국공산당과 코민테른 내부의 대립과 깊은 연관이 있었다.

1922~1923년 무렵 중국에서 國共合作을 둘러싸고 코민테른 내부와 중국공산당 내에서도 이견이 발생하였다. 코민테른의 마링은 국민당은 부르주아 정당이 아니라 모든 계급이 연합한 당으로 프롤레타리아트는 국민당에 들어가 그것을 혁명의 주도세력으로 변모시킬 것을 주장한 반면, 진독수 등은 국민당은 부르주아 정당의 하나일 뿐이며 공산당이 가입하여 부르주아와 뒤섞이면 당의 독립성을 상실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1923년 6월 중국공산당 3차 당대회는 마침내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의 합작과 공산당원이 개인신분으로 국민당에 가입할 것을 결정했다.¹⁶⁾

조선혁명에 대한 보이젠스키와 쿠시넨의 의견 대립은 1924년 2월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산하 원동부가 제안한 〈조선문제에 대한 결정〉(제안)으로 일단락되었다. 1924년 2월 〈조선문제에 대한 결정〉에서는 정치적·조직적으로 독립된 공산당의 창립과 발전을 지시하고 대중조직, 즉 기업과 공장 등 현장에 기반한 당조직의 강화를 강조하였다. 또 당의 중앙집행부 구성에 대한 구체적 방침을 제시하고 이러한 방침에 기초하여 조선의 공산당을 결성하기 위해 1924년 4월 블라디보스톡에서 코민테른집행위원회 대표의 참석하에서 당창립대회(inaugural congress ; konstituierenden Kongress)를 개최할 필요성을 제안했다.¹⁷⁾

15) 강호출, 〈재노령 고려공산당창립대표회준비위원회(오르그뷰로) 연구〉(《역사와 현실》 28, 1998), 130~131쪽.

16) 벤자민 I. 슈워츠, 권영빈 역, 《중국공산주의운동사》(형성사, 1983), 65쪽.

向青, 임상범 역, 《코민테른과 중국혁명관계사》(고려원, 1992), 49~57쪽.

17) 〈Korean Question〉, РЦХИДНИ ф.495 оп.135 д.115, 72~81쪽.

〈조선문제에 대한 결정〉(제안)은 1923년 1~6월 상해에서 열렸던 국민대표회에서 꼬르뷰로가 민족주의 그룹 가운데 한 그룹¹⁸⁾과 관계를 맺었고 이것은 조선공산주의자 사이에 반대를 야기하였다는 사실과 꼬르뷰로가 민족운동의 ‘좌익적’ 요소와 협동을 하려한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공산당 형성의 긴급성을 소홀히 하였음을 지적하고 있다.¹⁹⁾ 또한 상해파의 지도자 이동휘가 코민테른에 보낸 편지를 인용하면서 이동휘의 입장을 올바른 노선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1923년 12월 꼬르뷰로에서 탈퇴한 이동휘는 조선공산당의 존재가 ‘조선의 혁명운동에서 중요한 주체적 요인을 형성할 것’을 강조하였다.²⁰⁾ 또 원동부는 이 ‘결정’에서 블라디보스톡의 꼬르뷰로가 해산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²¹⁾

이후 코민테른집행위원회는 1924년 4월 꼬르뷰로를 해체하고²²⁾ 金哲勳·朴應七·南萬春·田友·張道政·李衡根·이젤손 등은 1924년 4월 15일 블라디보스톡에서 고려공산당 책임자회의를 개최하고 5월 7일 ‘고려공산당창립대표회 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를 개최하였다.²³⁾ ‘준비위’의 창립, 이것이 오르그뷰로의 창립이었다. 그러나 오르그뷰로는 아직 코민테른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못하였고 국내의 대표들도 참석하지 못한 상태에서 설치되었다.

〈鄭在達·李載馥調書〉에서 이재복(李成)은 오르그뷰로의 노령대표로 이형근·남만춘, 지나(중국)대표로 박웅칠·김철훈, 국내 대표로 김철훈·신백우·

〈Koreanische Frage〉, РЦХИДНИ ф.495 оп.135 д.115, 82~93쪽.

18) 민족주의 그룹 가운데 한 그룹은 문창범 등의 노령 대한국민의회로 추정된다.

19) 〈Korean Question〉, РЦХИДНИ ф.495 оп.135 д.115, 72쪽.

20) 〈Korean Question〉, РЦХИДНИ ф.495 оп.135 д.115, 75쪽.

21) 〈Korean Question〉, РЦХИДНИ ф.495 оп.135 д.115, 81쪽.

22) СИНЧЕР и КИМЕНУ, ИСПОЛКОМУ КОМИНТЕРНА, 1923. 2. 11(РЦХИДНИ ф.495 оп.135 д.125), 신철·김영우, 〈코민테른집행위원회에게 : 까.엔.당(북풍회 내부의 비합법적 그루빠 대표의 보고〉, 1926년 2월 11일, 85쪽.

23) 고려공산당 책임자회의에 참석했던 김철훈·박웅칠·남만춘·장도정·이형근 등은 1923년 초 블라디보스톡에 설치되었던 러시아공산당 연해주 위원회 내의 고려부 위원이었다. 이들은 기관지 《선봉》을 발행하며 연해주의 조선인혁명가들을 결집하여 활동하였다. 이젤손(Идельсон ; 그동안 인테르손으로 알려졌다)은 코민테른집행위원회 산하 원동부의 조선문제 책임자였다. 그는 보이쾰스키 후임으로 블라디보스톡의 ‘원동부’에 부임하였다.

이봉수 등이 지명되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들 중 국내 대표 김약수·신백우·이봉수 등 3인은 불참하였다.²⁴⁾

鄭在達(전우)과 이재복은 다시 준비위원회에 참여하여 주로 국내에 여러 차례 파견되어, 국내 사정을 블라디보스톡의 오르그부로에 보고하는 주로 실무적인 사업에 배치되었다. 1924년 6월 6일 ‘준비위’ 10차회의는 정재달이 출발한지 1·2주일 후에 그의 사업에 협조하기 위해 이재복을 재차 국내에 파견할 것을 결정하고 “전우 동무와 같이 각 공산단체를 연합하는데에 노력”하라는 내용의 〈지령서〉와 이재복을 고려공산당 창당준비위원회의 대표로서 국내에 파견하여 국내공산단체를 단합하여 고려공산당 창립대표회를 소집할 것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주었다.²⁵⁾

‘준비위’는 정재달을 파견하기에 앞서 이미 《先鋒》의 주필인 이백초를 파견하여 국내 정세를 파악하였다. 1924년 6월 12일 ‘준비위’ 11차회의록에는 이백초의 보고내용이 수록되어 있다.²⁶⁾ 이에 따르면 이백초는 3월 26일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하여 4월 26일 경성에 도착하여 국내 사회주의자들의 동향을 파악하였다. 그는 1개월 동안 서울에 있으면서 국내 사회주의자들이 ‘13인회’(국내 ‘조직국’)를 조직하여 이미 4차례의 회의를 개최하고 노동총동맹과 청년총동맹 등 대중조직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그러나 ‘13인회’는 공산단체 각파의 연합적 사업에는 아직 착수치 못하였고, 그 이유는 꼬르부로 국내부 지령이 아직 존재하기 때문이었다고 하였다. 또한 국내부 성원들은 “사업진행을 정지하고 그 위원들은 13인 단체에 가입하였다. 13인 단체가 사업에 착수치 아니한 중요(한) … (이유)는 상부기관의 승인을 부득함이라 한다. 동 단체는 계파의 수령들로 조직된 고로 각파에서는 절대 복종한다. 김사국 일파들은 적극적으로 일하지는 않으나 방해할 위험은 결코 없다”²⁷⁾고 보고했다.

24) 〈鄭在達·李載馥調書〉(金俊燁·金昌順 編, 《韓國共產主義運動史(資料篇 I)》, 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1979), 122쪽.

25) 〈지령서〉·〈위임장〉(РЦИХДНИ ф.495 оп.135 д.94, 1924. 6. 6), 126쪽.

26) 위와 같음.

27) 위와 같음.

이백초의 국내에 대한 정세보고를 청취한 뒤, ‘준비위’는 ‘13인회’는 조선노동총동맹과 조선청년총동맹을 실현하였고 각 공산단체와의 연합에도 크게 노력할 것이므로 정재달을 파견하여 ‘13인회’와 연합하여 당창건 준비사업을 진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²⁸⁾

‘준비위’의 결정에 따라 정재달은 1924년 6월 15일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하여 24일 아침 서울에 도착하고, 이재복은 7월 9일 블라디보스톡을 출발하여 23일 경 서울에 도착했다.²⁹⁾ 그들은 각각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 여러 분파의 사회주의자들을 만나 블라디보스톡의 오르그부로의 당창건 계획을 설명하고 특히 김약수·이봉수·신백우 등과 만나 오르그부로의 국내대표로 참석할 것을 권유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1924년 9월 일제 경찰에 검거되고 말았다.

오르그부로는 국내 ‘조직국’(‘13인회’)과 연합을 하여 통일적인 당창건사업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국내 ‘조직국’ 즉 ‘13인회’와 통일적 당창건사업을 협의하지 않았다. ‘13인회’는 서울파 5인(김사국·이영·정백·김유인·이혁로)과 화요파 2인(신백우·김재봉), 북풍파 3인(김약수·김종범·변희용), 상해파 2인(유진희·이봉수), 조선노동당(김연희) 등 5개 분파의 13인의 대표자로 구성되었다.³⁰⁾ ‘13인회’는 이와 같이 국내외에 존재하는 모든 사회주의 분파를 망라하여 단일한 통일적 조선공산당 창립을 목표로 조직되었다.³¹⁾

그런데 이재복과 정재달이 ‘13인회’ 즉 국내 당창건을 위한 조직국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블라디보스톡의 오르그부로의 지시에 기초하여 화요파의 조선공산당 창립 가능성을 약속하고, 또 화요파는 국내 조직국(‘13인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독자적인 당창건 활동을 수행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국

28) 고려공산당창립대회위 준비위원회(РЦХИДНИ ф.495 оп.135 д.94, 1924. 6. 6).

29) <鄭在達·李載馥調書>(金俊燁·金昌順 編, 《韓國共產主義運動史(資料篇 I)》, 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1979), 216쪽.

30) КимЕнман·Цой цаник, Исполкому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го Интернационала, 1926 2 РЦХИДНИ ф.495 оп.135 д.125(김영만·최창익, <코민테른집행위원회에게 : 서울청년회 내부에 현존하는 공산주의조직 ‘고려공산동맹’ 전권대표로부터>, 1926년 2월), 103쪽.

31) КимЕнман·Цой цаник, 위의 글, 104쪽.

내 조직국은 1924년 9월 5개월만에 결렬되고 말았다.³²⁾

(4) 화요파와 민중운동자대회

화요파는 1924년 11월 19일 신사상연구회를 화요회로 개칭하고, 1925년 1월 3일 북풍회 · 조선노동당 · 무산자동맹회 등에게 신년간친회 개최를 제의하여 4단체 연합하에 신년간친회를 개최했다. 150여 명의 사회운동자들이 모여曹奉岩의 개회사와 김찬의 사회로 ‘재경사회운동자신년간친회’를 개최하였다.

화요파가 을축년(1925) 벽두부터 ‘4단체 간친회’를 개최한 이유는 무엇일까. 또한 1924년 4월 꼬르뷰로 국내부에서 제명한 북풍파의 김약수에게 화요파가 다시 간친회를 제안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리고 당시 가장 강력한 대중적 기반을 갖춘 서울파(서울청년회)를 ‘신년간친회’에서 제외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화요파는 이 무렵 블라디보스톡의 오르그뷰로와 관계를 회복하고 이를 통해 국내 당건설에 대한 시기와 지침을 전달받은 것이 분명하다. 또한 1924년 말부터 화요파는 합법 · 비합법적 접촉과 회합을 통해 서울파를 제외한 국내 사회주의조직들과 연합을 시도하였고 ‘재경사회운동자신년간친회’를 통해 화요파와 북풍파 · 조선노동당 일부의 결합이라는 성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화요파는 서울파를 제외하고 북풍회 · 조선노동당의 일부세력을 형식적으로 아울러 당창건을 하려는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이다.

서울파가 조선노동당과 더불어 조선노동교육자대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을 무렵, 화요파는 북풍파의 협조를 얻어 2월 17일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 준비회’를 조직하고 “전조선운동의 조직적 통일과 근본방침을 토의코자 사상 · 농민 · 노동 · 청년 · 형평 · 여성 등 각 운동단체의 대표로서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를 개최”³³⁾한다는 대회 <취지>와 준비위원 72명의 명단을 일간지에 발표하였다.

준비위원은 姜達永 · 金燦 · 曹利煥 · 白光欽 · 金璟載 · 金鴻爵 · 陳秉基 · 全無 ·

32) 김Енман · Цой цаник, 위의 글, 105~106쪽.

33) 《동아일보》, 1925년 2월 19일.

金在鳳・具然欽・朱世竹・洪惠裕・尹德炳・許貞淑・朴憲永・金丹治・林元根・曹奉岩・朴一秉・權五高・崔元澤・李準泰・安基成・林亨寬 등 화요파 인물들과 鄭雲海・李憲・金裕昌・朴炳斗・鄭晉武・金大鳳・崔允鉉 등 북풍파 인물로 구성되어 있었다(《조선일보》, 1925년 2월 19일).

화요파는 각 사회운동단체를 통해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 지지운동을 조직했다. 3월 7일에는 신흥청년동맹과 靑靑團이 총회를 열어 민중운동자대회에 참가할 것을 결의했다. 3월 9일에는 신의주 新灣青年會가 집행위원회를 통해 민중운동자대회를 축성할 것을 결의했다.³⁴⁾ 3월 11일 마산의 사상단체인 曄星社와 전남 광양 勞農聯合會가 민중운동자대회 참가를 결의했다. 3월 12일 경북 예천의 신흥청년회와 마산의 勞農同友會・黃州青年會도 민중운동자대회에 참가할 것을 결의했다. 경상북도 안동의 사상단체 火星會도 월례회를 열고 민중운동자대회에 대표를 파견할 것을 결의하고 진주의 형평사와 형평청년회도 임시총회를 열고 강상호의 사회로 민중운동자대회에 참가할 것을 결의했다.³⁵⁾

화요파는 1925년 3월 15일 경성청년회 등 20여 단체를 모아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 應援會를 조직했다. 서정희가 임시의장을 맡아 경과보고와 집행위원을 선출하고 응원방침에 대한 토의를 했다.³⁶⁾ 이 응원회에서 주목할 것은 북풍회와 조선노동당이 참가했다는 사실이다. 북풍회의 신철・마명・김약수・서정희 등과 조선노동당의 전일・김연희・이극광 등이 집행위원으로 선출되

34) 《조선일보》, 1925년 3월 12일.

35) 《조선일보》, 1925년 3월 15일.

36) 경성급수부조합・서울인쇄직공청년동맹・경성여자청년동맹・여성동우회・경성여자청년동맹・여성동우회・경성양복직공조합・신흥청년동맹・경성양복직공조합・조선형평사총연맹중앙총본부・형평사정위단・혁청단・조선무산자동맹・염군사・시계종업원친목회・프롤레타리아트사・신흥청년사・경성청년운동사・해방운동사・경성청년회・화화사・조선노동당・북풍회 등 23단체가 참가했다. 또한 집행위원으로는 홍순준・김연희・김창준・전일・이은식・이극광・오오택・황성하・한상우・이경춘・최봉・이종성・이민한・정종명・김지호・민창식・송영・박래원・이병립・임성웅・우○운・배일선・구창희・강균환・송봉우・김청형・손영극・이호○・김강현・신철・마명・김약수・서정희 등 33인이 선출되었다(《조선일보》, 1925년 3월 18일).

있던 것이다. ‘13인회’의 결렬 이후 화요파가 오르그뷰로의 당건설방침에 따라 북풍파와 조선노동당과 다시 연대하여 민중운동자대회를 개최하면서 조선공산당을 건설하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었다.

1925년 3월 24일 조선노동총동맹 중앙집행위 제4회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여기에서 ‘화요파’는 윤덕병·최원택·장준·신동호·김유창·정운해·김부곤 등 7명을 상무집행위원으로 선출하고 민중운동자대회를 적극 후원할 것을 결의했다. 또한 청년총동맹 및 재경해방운동단체 연합간담회 결의사항 가운데 민중운동자대회에 반대하는 단체에 ‘노총’을 넣은 조항을 취소하라고 경고했다.³⁷⁾

또 3월 30일 진주 청년회관에서는 경남민중운동자간담회가 26개 단체 출석대표 46명의 참가로 개최되어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는 해방운동선상에 적합함을 인하고 경남 각 단체 참가를 권유할 일” 등을 결의했다.³⁸⁾ 같은 날 함남 흥원군 삼호에 있는 프롤레타리아도 정기총회를 열고 민중운동자대회에 참가할 것을 결의했다.³⁹⁾ 4월 13일 光州 노동공제회관에서 전라노동연맹 제2회 정기총회가 열렸다. 집행위원장 서정희의 개회사가 있고 임시의장으로 이영민과 신명준이 선출되어 노동·소작문제 등에 대한 결의와 함께 민중운동자대회에 참가할 것을 결의했다.⁴⁰⁾

마침내 화요파는 1925년 4월 20일 서울시내 하세가와 조(長谷川町)의 경성 공회당에서 조선민중운동자대회를 개최기로 하였다. 4월 18일까지 민중운동자대회에 참가하기로 한 단체는 노동단체 263, 청년단체 100, 형평단체 18, 사상단체 44 등 425개 단체의 대표자 508인이었다.⁴¹⁾

37) 《동아일보》, 1925년 3월 26·29일.

《조선일보》, 1925년 3월 26일.

상무집행위원 7인 중 장준만 ‘서울파’였고 나머지 위원은 모두 ‘화요파’였다. 노동총동맹 중앙집행위원 간담회의 결의에 대해 서울파는 이 회의가 중앙집행위원 중 임종환 등 몇 사람에게 정식통고가 없었기 때문에 무효라고 하며 다시 정식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할 것과 민중운동자대회의 소집을 방지할 것을 주장했다.

38) 《조선일보》, 1925년 4월 2일.

39) 《조선일보》, 1925년 4월 3일.

40) 《조선일보》, 1925년 4월 16일.

그러나 민중운동자대회 몇 시간을 앞두고 일경의 집회금지로 대회가 무산되자 이에 분개한 대의원 300여 명이 파고다공원에 집합하여 일제의 탄압을 규탄하려 했으나 일경에 의해 공원 밖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그러나 시위대 200여 명이 그날 밤 종로2가 단성사와 우미관 앞에 모여 붉은 기 5개를 들고 “전조선 민중운동자대회 만세”·“무산자 만세”·“무리한 경관의 압박에 반항하자”를 외치며 종로3가로 행진하여 수천 명의 군중이 합세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이 이른바 ‘赤旗事件’이었다. 이 사건으로 대구청년회의 申哲洙와 마산노동동우회의 金尙珠 등 14명이 경찰에 검거되었다.⁴²⁾

화요파가 서울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중운동자대회를 개최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1925년 4월 15~17일 3일간에 걸친 전조선기자대회의 마지막 날인 4월 17일에 일경의 눈을 피해 비밀리에 창립된 화요파 조선공산당의 지도하에 국내의 모든 사회운동단체를 망라하여 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자신의 대중적 세력을 내외에 과시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화요파의 민중운동자대회는 서울과의 대대적인 반대에 부딪혔다. 서울파는 조선노동총동맹·조선청년총동맹 등 대중조직이 발달해가는 과정에 있는 조선의 노동·농민·청년운동을 혼란케 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조선민중운동자대회의 부당성을 지적했다.⁴³⁾ 또 모스크바 동방노력자대학 출신의 李敏用도 화요파의 민중운동자대회를 반대하였다. 그는 “만약 그들이 운동의 유일성을 허락한다면 왜 양총동맹으로써 하지 않았는가”라는 문제제기를 하면서 민중운동자대회를 발기한 조봉암은 조선청년총동맹 상무집행위원이고 김찬은 조선노동총동맹 집행위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민중대회를 소집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였다.⁴⁴⁾

화요파의 趙東祐는 코민테른에 민중운동자대회가 공산당의 영향하에 수행

41) 《조선일보》, 1925년 4월 20일.

42) 《동아일보》, 1925년 4월 22일·5월 3일. 김상주는 4월 17일 조직된 화요파 조선공산당 1차당대회에 참가했었다.

43) 《조선일보》, 1925년 3월 3일.

44) 李敏用, 〈片山 同志에게 보내는 보고〉(1925년 5월 30일), 3쪽.

된 조선혁명운동의 역사에서 최초의 사건이었음과 이 운동은 민중에게 사회주의사상의 세례를 주었고 또한 이 대회는 일제에 저항하는 조선인민을 어떻게 선동하는가 하는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첫번째 시험이었다라고 그 의의에 대해서 보고하였다.⁴⁵⁾

3) 조선공산당의 창건

(1) 조선공산당 1차당대회

1925년 4월 17일 조선공산당 조직을 위한 창당대회는 일경의 눈을 돌리기 위해 표면적으로 전조선기자대회와 전조선민중운동자대회를 준비하면서 ‘비밀리’에 개최되었다. 이것이 1차당대회였다.

황금정(현 을지로)의 중국음식점인 아서원에서 열린 창립대회에는 金在鳳·金洛俊(金燦)·金若水·朱鍾建·尹德炳·陳秉基·趙東祐·曹奉岩·宋奉瑀·金尙珠·俞鎮熙·獨孤侄·鄭雲海·崔元澤·李鳳洙·金基洙·申東浩·朴憲永·洪憲裕 등 총 19인이 참석하였다.⁴⁶⁾

1차당대회 직후 1925년 8월 8일 상해로 파견된 조동호의 코민테른 〈보고〉는 창당대회에 참가한 19명의 대표들의 소속 및 지역분포를 언급하고 있다. 조동호는 대표자의 이름을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1차당 시기 19명의 출석대표 가운데 지방 대표들은 대부분 꼬르뷰로 국내부의 각 지역 야체이카 책임자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⁴⁷⁾ 이를 종합하여 각 대표의 야체이카별 분포를

45) T.H.Cho, Report : Delegate of KCP, Aug.8, 1925, pp.121~122.

РЦХИДНИ ф.495 оп.135 д.110(조동호-조선공산당 파견대표, 〈보고〉, 1925년 8월 8일).

46) 〈金洛俊調書(1931)〉(金俊燁·金昌順 編, 《韓國共產主義運動史(資料篇 I)》, 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1979), 16쪽.

Щаппа Ф. И. ИСТОРИЯ КОРЕЙСКОГО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ГО ДВИЖЕНИЯ (1918-1945 Г.),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 МОСКВА, 1988, p.100.

47) 꼬르뷰로 국내부의 각 야체이카 책임자는 다음과 같다. 시대일보-홍남표, 조선일보-김재봉, 조선노동총동맹-권오설, 신사상연구회(화요회)-홍중식, 신홍청년동맹-전무, 신의주-독고전, 평양-진병기, 재령-미상, 함흥-미상, 인천-안기성, 대구-최원택, 동래-백광흠, 마산-김명규, 진주-강달영, 광주-

재구성해 보면 <표 1>과 같다.

<표 1> 조선공산당 1차당대회 참가자 야체이카별 분포

소속단체 및 지역	참석자(출생지)	소속분과
화요회	박헌영(충남 예산) 조봉암(경기 강화)	화요파 화요파
북풍회	김약수(경남 동래) 송봉우(경남 하동)	북풍파 북풍파
조선노농총동맹	윤덕병(서울)	화요파
조선청년총동맹	김 찬 (함북 명천)	화요파
동아일보	조동호(충북 옥천)	화요파
조선일보	이봉수(강원 춘천)	상해파
신의주	독고전(평북 의주)	화요파
평양	진병기(경북 칠곡)	화요파
인천	홍덕유(경기 수원)	화요파
광주	신동호(전남 광주)	화요파
순천	김기수(전남 순천)	화요파
대구	최원택(경북 대구) 정운해(경북 대구)	화요파 북풍파
안동	김재봉(경북 안동)	화요파
마산	김상주(경남 마산)	화요파
김해	유진희(충남 예산)	상해파
진주	강달영(경남 진주)	화요파(불참)
동래	주종건(함남 함흥)	상해파

* T.H.Cho, Report : Delegate of KCP, Aug.8, 1925, pp. 117~126, РЦХИДНИ ф.495 о п.135 д.110 ; <金洛俊調書(1931)>, 《韓國共產主義運動史(資料編 1)》(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1979) ; 강만길·성대경 엮음, 《한국사회주의운동인명사전》(창작과 비평사, 1996) 참조.

지역대표들은 대체로 그들의 출신지역에 따라 배치되었다. 이들 중 꼬르부르 국내부 때 진주지역 야체이카 대표였던 강달영은 불참한 것으로 보인다.

신동호(<金洛俊調書>(金俊燁·金昌順 編, 《韓國共產主義運動史(資料篇 I)》, 高麗大 亞細亞問題研究所, 1979), 13~14쪽).

또한 인천과 동래 지역은 꼬르뷰로 당시에는 안기성·백광흠으로 되어 있었고 김해지역은 꼬르뷰로 이후에 신설된 야체이카인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지역에 야체이카 근거지를 가지지 않았던 홍덕유와 상해파 출신인 주종건·유진희가 대신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조선노동당 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사실이다.

이들 19명 중 김재봉·김약수·김찬·유진희·조동호·주종건·정운해 등 7인으로 이루어진 중앙집행위원회가 구성되었다. 7인의 중앙위원들은 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각 부서를 조직했다.⁴⁸⁾

① 비서부 ② 감사부 ③ 조직부 ④ 조사부 ⑤ 정치경제부 ⑥ 선전부 ⑦ 노동부

1차당의 책임비서는 김재봉이었다. 조직부는 김찬이 지도했다. 정치경제부는 유진희, 간부국은 김약수, 조사부는 주종건, 선전부는 조동호, 노동부는 정운해가 지도했다. 조선공산당 중앙위 감사위원에는 윤덕병·조봉암·송봉우가 선출되었다. 당대회는 조선공산당의 창건을 알리고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얻기 위해 모스크바로 조동호를 파견할 것을 결정하였다.⁴⁹⁾ 집행위원 가운데 김재봉·김찬·조동호 등 3명은 화요파 성원이며, 김약수·정운해 등 2인은 북풍파, 유진희·주종건 등 2명은 상해파 출신이었다.

1차당 창당 시기에 전체 당원수는 120명이었다. 이를 개별적으로 살펴 보면 국내 그룹 20명, 북성회(일본) 7명, 이르쿠츠크 그룹 5명, 상해그룹 2명, 중립그룹 86명 등이었다.⁵⁰⁾

대회에서는 건설된 당이 진정한 조선공산당으로서 간주될 것과 그 승인을 코민테른에 요청할 것을 결정했다. 이에 조동호와 조봉암이 파견대표로 선출되었다. 또한 당원자격을 위한 후보 심사에 매우 엄격한 요건을 갖는다는 결정을 통과시켰다. 당의 강령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현재의 활동에 조응하여 결정되었고 완성을 차후로 연기하였다. 당의 규약은 통과되었고 실질적

48) T.H.Cho, 앞의 글, 119~120쪽.

49) Шабшина Ф. И., 앞의 책, 100~101쪽.

50) T.H.Cho, 앞의 글, 119쪽.

으로 완성되었다.⁵¹⁾

조선공산당의 당규약은 1926년 6~7월에 걸친 조공의 2차 검거 당시 압수된 증거물에서 보여진다. 당규약인 〈조선공산당당칙〉은 일제 당국에 따르면 1926년 3월부터 5월까지 강달영·홍덕유 등이 작성하여 이를 국제공산당에 보고한 것으로, 그 내용은 총칙·당원·기관·기본기관·군(부)기관·도기관·중앙기관·재정기관·프랙션·벌칙·고려공산청년회와의 관계 및 부칙의 12장 95개조로 이루어져 있었다.⁵²⁾ 이 규약은 1차당대회의 규약과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1차당 시기 규약은 러시아공산당 규약을 조선의 조건에 맞추어 고친 것이었다.⁵³⁾

조동호의 〈보고〉 가운데 〈정치적·경제적 상황에 따른 당의 계획〉은 당시 조선의 정세를 분석한 것으로 강령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우선 조선의 경제적 상황의 악화로 모든 화폐유통이 일본인 자본의 수중으로 장악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리하여 조선인 빈농들은 생활을 위하여 일본인 이주자들의 토지를 경작할 수밖에 없고 동양척식주식회사는 조선인의 재정적 이익을 강탈하고 일본인 이민을 고무하면서 전조선의 농업력을 통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조선공산당은 독립운동이 조선인 전체의 이익을 목적으로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하는 운동이라고 바라보았고 또한 그것이 조선프롤레타리아가 일본자본주의에 대해 서 있는 동일한 전선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지적했다.⁵⁴⁾

이러한 정세인식하에서 조선공산당은 첫째, 공산당은 일본제국주의에 대항하여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을 포함하는 조선인민의 일반적 운동을 지원해야 하고, 둘째 조선인민 일반이 다음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지라도 공산당은 조선의 자본가뿐만 아니라 일본의 자본가에 대항하여 투쟁해야 한다는 결정

51) 위와 같음.

52) 朝鮮總督部 警務局, 〈朝鮮共產黨事件ノ檢舉顛末(1926년 8월)〉(《朝鮮共產黨關係雜件》1, 高麗書林, 1990), 564~565쪽.

梶村秀樹·姜德相 編, (《現代史資料》29, みすず書房, 1972), 37쪽.

53)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동양부앞, 〈조선공산당대표 조동호(장국보)의 보고(1925. 12. 25)〉(러시아현대사문서보관연구센터, 495-135-110), 9쪽.

54) T.H.Cho, 앞의 글, 125~126쪽.

을 채택했다.⁵⁵⁾

조선공산당은 이 결정 외에 “① 일본자본주의에 대항하여 투쟁하자, ② 코민테른의 깃발 아래로 오라, ③ 독립운동을 지속하자, ④ 노동자·농민의 조직을 위해 성실히 활동하자, ⑤ ‘동양척식회사’를 박살내자, ⑥ 기독교를 타도하자”⁵⁶⁾는 투쟁슬로건을 통과시켰다. 또한 당은 조직활동에 더욱 주의를 기울일 것이고 그로부터 모든 다른 브랜치 활동을 발전시킬 것과 월간지·팸플릿·비밀 출판소 설치 등 출판활동과 노동자와 농민을 위한 연구소 설치계획과 교육활동 등 일상적 활동 프로그램을 결정하였다.⁵⁷⁾

1차당 대회에서는 조선혁명의 과제가 심의되었으며, 그것을 당면 단계에서는 민족해방혁명·반제국주의 혁명으로 규정하였다. 대회는 국내의 모든 애국적 세력과의 동맹에서 공산주의자들이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이 투쟁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전위적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⁵⁸⁾

대회에서는 당의 사회적 구성에 대해, 공산주의조직 가운데에서 노동자·농민은 극소수인데 반해 소부르주아지·인텔리겐차 및 학생들이 압도적인 점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점을 고려하여 대회는 노동자·농민 계층의 확대를 위해서 노농국을 창설할 것을 결정했다. 대회와 이후 공산주의자들의 활동에서 본질적인 난관으로 부딪친 것은 민주집중제의 원칙을 최소한의 정도에서나마 실현하고 지방 당조직·위원회·야체이카를 창설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⁵⁹⁾

창건된 당은 강령을 채택하지 않고 이를 중앙집행위원회에 위임했다. 그뒤 1928년 조공이 해체될 때까지 세 차례의 당대회를 통해 강령에 대한 공식적 논의와 채택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상해에서 발행된 조선공산당의 기관지 《불꽃》에 수록된 〈조선공산당선언〉은 1926년 7월 조선공산당 중

55) T.H.Cho, 위의 글, 126쪽.

56) 위와 같음.

57) 위와 같음.

58) Шабшина Ф. И., 앞의 책, 100쪽.

59) Искрин, Зарождение и развитие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го движения в Корее, 1929. 5. 6(Ф.495 Оп.135 д.168а, 146~186·248쪽). Шабшина Ф. И., 위의 책, 100쪽에서 재인용.

양집행위원회의 이름으로 강령적 문헌이 제시되어 있다.⁶⁰⁾

이것은 1차 조선공산당사건 당시 검거를 피해 상해로 망명하여 활동하다가 1930년 체포된 화요파의 具然欽이 밝힌 내용과 완전히 일치한다. 구연홍은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는 과연 어떠한 사명을 띤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1926년 6월 7일에 발표된 〈조선공산당선언서〉를 빌려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구연홍은 “조선공산당은 어떤 강령을 세웠는가”라고 말하면서 먼저 “당면한 투쟁의 목적은 일본제국주의의 압박으로부터 조선을 절대 해방하는 데 있다”고 말한 후 당면한 정치적 요구에 대해서 《불꽃》의 강령과 동일한 내용의 강령을 제시하고 있다.⁶¹⁾

〈조선공산당선언〉에는 민주공화국을 건설하되 국가의 최고 및 일체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조직한 직접·비밀(무기명투표)·보통 및 평등의 선거로 성립한 입법부에 있을 일, 주 8시간노동제 실시, 직업조합의 조직 및 동맹파업의 자유, 야간노동금지, 아동노동금지, 산모의 산전 2주·산후 4주간 노동금지, 대토지소유자·회사 및 은행이 점유한 토지를 몰수하여 국가의 토지와 함께 농민에게 교부할 일, 소작료를 3할 이내로 할 일, 농민조합을 법률로 승인할 일 등 40개 항에 이르는 강령적 내용이 담겨져 있었다.⁶²⁾ 그 내용은 대체로 일반 민주주의적 과제, 즉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의 과제를 내용으로 하는 최소강령적 성격을 띠고 있다.

〈조선공산당선언〉에는 1910년 이래 일본제국주의의 조선 침략의 본질과 3·1운동, 6·10만세운동 등 조선민중의 투쟁에 대해서 약술하면서 조선공산주의자들은 조선의 완전한 해방의 과제를 실행하기 위하여 일본제국주의에 대립한 조선의 모든 역량을 집합하여 민족혁명유일전선을 작성하고 적의營業을 향하여 정확한 공격을 준비 또한 개시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민족혁명유일전선’을 위해 전민족의 87%를 구성하는 노동자·농민계급과 도시소부

60) 〈朝鮮共產黨宣言〉(《불꽃》 제7호, 1926년 9월 1일).

61) 具然欽, 〈朝鮮共產黨과 高麗共產青年會大獄記〉(在上海重光總領事, 《공산당간부 구연홍의 취조에 관한 보고(1930년 10월 4일)》, 姜德相·梶村秀樹 편, 《現代史資料》 29, みすず書房, 1972), 419~420쪽.

62) 〈朝鮮共產黨宣言〉(《불꽃》 제7호, 1926년 9월 10일).

르주아·지식인 및 부르주아와의 연합을 제시하고 있다.⁶³⁾

또한 〈조선공산당선언〉은 조선공산당이 세계 사회주의혁명의 대본영(국제공산당)의 一分隊로 압박받는 조선군중을 세계 피압박민족의 해방운동과 세계 무산자혁명, 특히 일본의 사회주의혁명과 또 소비에트사회주의연합공화국과 밀접한 동맹을 지어 그들의 제국주의자에 대한 투쟁을 지도할 것⁶⁴⁾이라고 하여 세계혁명운동과의 국제적 연대를 천명하였다.

1차당대회 다음날인 1925년 4월 18일 조선공산당은 산하에 고려공산청년회(이하 공청)를 조직하였다. 공청은 15세부터 30세까지로 연령을 제한하였다. 고려공산청년회 제1차 창립대표회는 10개도에 산재한 28개 세포회의 대표 19인과 조선공산당대표로 김찬 등 20인이 참석하였다. 박헌영과 조봉암이 1921년부터 1925년 4월까지 고려공산중앙총국의 사업경과를 보고하였다.⁶⁵⁾ 공청은 국제공청 동양부위원회에서 제정한 〈고려공청강령〉을 채용하고 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작성한 규약을 통과시켰다. 또한 공청은 1925년 4월 21일 제 1차 공청중앙간부회를 열어 책임비서로 박헌영을 선출하였다.⁶⁶⁾

(2) 조선공산당의 활동과 코민테른의 〈1925년 9월 15일 결정〉

1925년 4월 17일 1차당대회 이후 조선공산당의 활동에 대해 조동호는 우선 ‘4단체합동’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다.

63) 〈선언〉은 “부르주아는 혁명의 주력대로 될 능력이 없으나 그들도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압박을 받아 불만족의 요소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아직까지 그 자체 내에 혁명적 소질이 없지 아니하므로 혁명의 선봉대와 직접 동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부르주아계급까지를 민족해방투쟁의 동맹세력으로 파악하였다(〈朝鮮共產黨宣言〉, 《불꽃》 제七호, 1926년 9월 1일).

64) 〈조선공산당선언〉(《불꽃》 제7호, 1926년 9월 1일), 353쪽.

65) 〈高麗共靑 一般進行情況〉(РЦХИДНИ ф.533 оп.10 д.1908)과 〈고려공산청년회 제1차 창립대표회 회의록〉(РЦХИДНИ ф.533 оп.10 д.1891). 이 자료에는 고려공산청년회의 조직경과와 국제공청, 조공과의 관계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高麗共靑 一般進行情況〉에서는 1921년 국제공산청년회(КИМ) 제2차 대회 이후인 1921년 8월 국제공청의 지시로 조직된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총국이 조직되었는데 공청은 이를 자신의 조직적 연원으로 파악하고 있다.

66) 〈고려공산청년회 제1차 창립대표회 회의록〉(РЦХИДНИ ф.533 оп.10 д.1891), 7쪽.

당이 실행하려고 했던 첫번째 사업은 화요회·북풍회·노동당·무산자동맹 등의 4단체를 하나의 단일한 거대 당으로 합동하는 것이었다. 이에 관한 통지에 뒤이어 조선 신문들에서 위원회가 많은 축사와 축전들을 받게 되었고 모든 조선 신문들은 자신의 사설들에서 호의를 표명했으며 여론은 이 운동에 매우 호의적이었다. 5월 초(4월 27일)에 예정되었던 전체 대회를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나 일본 당국은 이 단체들의 통합의 결과 무엇인가 심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대회를 금지하였다. 박해와 전체정치에도 불구하고 통합위원회가 조직되었으며 당의 지시에 따라 활동할 것을 결정하였다(Чо-Донго член ЦК и официальный делегат при Коминтерне, Работа со времени 1-й конференции 17 апреля 1925 г., 1925. 8. 22, РЦХИДНИ ф.495 оп.135 д.110, 코민테른 산하 공식 대표, 중앙위원회 성원 조동호, <1925년 4월 17일 1차대회(대표자회의) 현재 활동>, 1925. 8. 22).

화요파는 민중운동자대회를 개최하기에 앞서 1925년 1월 3일 ‘4단체신년간 친회’를 열었다. 이와 같이 합법적 공간 속에서의 ‘4합’은 조선공산당 창립 이전에 이미 이루어졌다. 또한 비합법 공간에서 화요파·북풍파·조선노동당의 ‘3단체 통일협의회’, 즉 ‘3단체합동’이 1925년 4월 6일 성립되었다. ‘화·북·노’의 ‘3단체합동’에 화요파 20인, 북풍파(까엔당) 2인, 조선노동당(스파르타쿠스당) 2인 등 총 24인이 참가하였다.

그러면 조동호가 보고한 ‘4단체합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화요회·북풍회·조선노동당·무산자동맹의 4단체합동위원회의 성립에 대한 내용이었다. 화요파는 조선공산당을 창립한 직후인 1925년 4월 27일 4단체의 합동총회를 개최하려고 했다. 그러나 일제 경찰당국의 집회금지명령으로 무산되고 1925년 7월 조선노동당의 金演義·李忠模, 북풍회의 金若水·李奎松, 화요회의 朴一秉·金璟載·金燦 등 7인으로 합동상무위원을 구성했다.⁶⁷⁾

조동호의 <보고>는 조선공산당 창건 이전에 이루어진 합법 공간에서 ‘4합’과 비합법 공간에서의 ‘3단체합동’을 조선공산당 창건 이후 실질적으로 수행할 활동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비합법 공간에서 ‘3단체합동’이 1925년 10월 26일 해체됨으로써 조선공산당은 화요파만의 당이 되었다.

67) 《동아일보》, 1925년 7월 8일.

그럼에도 조선공산당은 당원 수의 증가에 노력하여 1925년 4월 1차당 대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왔던 약 120명을 당원으로 승인한 이후 6~7월 동안 40명 이상을 추가하여 당원으로 받아들였으며 끊임없이 중앙위원회는 다른 단체들 속에서 공산주의적 인사들을 당으로 받아들이기 위해 노력했다.⁶⁸⁾

조선공산당은 1924년 가뭄에 이은 을축년(1925) 대홍수를 겪으면서 수해이 재민에 대한 원조활동을 벌였다. 조선공산당은 가뭄에 이은 홍수 원조를 위해 위원회를 조직하여 모금과 상황조사를 하는 등 홍수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전국적인 운동에 참여했다.⁶⁹⁾ 조선공산당은 순회강연을 통해 선전사업을 활발히 벌였다. 매년 여름 휴가를 이용하여 그룹별로 전국 각지를 순회하여 농민·노동자 등에게 강연을 해 왔다.

또한 8월 10일에는 나카이시(中西)·오꾸 등 일본인 사회주의자를 강연을 위해 초대하였다.⁷⁰⁾ 8월 15일 《동아일보》는 “화요회·조선노동당·무산자동맹·북평회 등 4개단체연합으로 나카나시 이노스케(中西伊之助)씨와 오쿠무메오(奥ムメオ) 여사를 청하여 사상대강연회를 연다. …”는 기사를 실고 두 사람의 간단한 약력과 사진을 게재하였다.⁷¹⁾

조선공산당은 각 직업별 노동조합의 창설을 지도하여 서울에 있는 인쇄조합·철공조합·구두직공조합·양말직공조합 그리고 물장수조합은 8월 11일 당의 영향 아래 전체대회를 개최했고 연맹을 조직했다. 8월 13일에는 서울에서 학생연맹이 조직되었다.⁷²⁾ 조선공산당은 출판활동을 통해 기관지 《조선지광》과 《신홍청년》을 발행했다. 이것은 합법 출판물로서 사회주의를 선전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⁷³⁾ 《조선지광》이 조선공산당의 합법적 기관지라면 《신홍청년》은 고려공산청년회의 합법적 기관지의 위상을 갖는 것

68) Чо-Донго(조동호), 앞의 글, 127쪽.

69) 위와 같음.

70) Чо-Донго, 위의 글, 128쪽.

71) 《동아일보》, 1925년 8월 15일.

72) Чо-Донго, 앞의 글, 128쪽.

73) Т.Н.Cho, 앞의 글, 120쪽.

이었다. 조선공산당은 주요 일간지에 자신의 프렉션을 조직하고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노력했다. 《조선일보》·《동아일보》·《시대일보》등 일간지에는 각각 4명·1명·3명의 당원이 있었다. 이 가운데 《조선일보》는 조선공산당에 가장 호의적이고 거의 당 기관지로 간주되었다고 하였다.⁷⁴⁾

조동호가 1925년 8월 22일에 상해에 있는 코민테른집행위원회 연락부에 당의 활동에 대한 보고를 마친 후, 1개월 뒤 코민테른집행위원회(ИККИ)서기국은 조선공산당에게 첫 번째 문서인 〈코민테른집행위원회의 1925년 9월 15일 결정〉(이하 〈결정〉)을 보냈다.⁷⁵⁾ 코민테른의 〈결정〉에는 4월에 대규모의 조선공산주의 단체의 대회가 성립되었고 거기에서 중앙위원회의 선출과 이 그룹들의 합동이 일어났고 앞으로 코민테른은 4월 조선공산주의 단체의 대회에서 선출된 이 위원회에 기초하여 조선의 공산주의 운동의 발전과 향후 공산주의 세력의 집결과 단결에 관한 사업을 수행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⁷⁶⁾

조선 운동의 문제에 관하여 ‘망명자 그룹’⁷⁷⁾들은 오직 조선공산당의 총체적 지도하에서만 협조그룹으로서 간주되었다. 〈결정〉은 당 중앙위원회에게 비밀의 비합법적 기구에 기초하여 자신의 사업을 수립할 것을 요구했다. 그 기구는 이후에 야채이카를 통해 모든 지방의 노동자·농민 조직의 기구에 기초하여 전 노동자·농민에 침투하였다. 〈결정〉은 또한 공산주의적 대열의 성장이 대체로 노동자와 농민의 희생으로 발생한다는 것과 조속한 시일내에 첫번째 계획으로, 기본적인 정치적·조직적 당노선이 모든 근로계층과 수공업자·인텔리겐치아·중소부르주아지를 단결시키는 민족해방투쟁의 과제의 선정에 있음을 지적했다.⁷⁸⁾

〈결정〉에는 조선공산당이 대중연합체로 노동자·농민을 인입하고 정치적

74) 위와 같음.

75) 〈The Last Resolution of The Presidium of the ICCI on the Korean Question〉, 1925. 9. 필자는 샤브시나가 인용한 부분을 다시 인용하였다(Шабшина Ф. И., 앞의 책, 107쪽).

76) ЦПА. Цит. по сб. “Из истории корейского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ого движения …” (Шабшина Ф. И., 위의 책, 107쪽에서 재인용).

77) ‘망명자 그룹’이란 상해파와 이르쿠츠크파 고려공산당 조직을 의미한다.

78) Шабшина Ф. И., 앞의 책, 107쪽.

캠페인을 실시하기 위해 모든 합법적 가능성을 이용할 필연성, 또한 공산주의자들을 지지하는 자들로 공산주의자들이 半합법적 집회를 조직하여 열성자 교육에 이 집회를 이용해야 할 필요성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하였다.

〈결정〉은 ‘음모적’인 지도 중핵과 더불어 ‘합법적’⁷⁹⁾이고 공식적인 당기관을 조속히 창립하고, 노동조합과 농민조직의 출판물을 장악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⁸⁰⁾ 이것은 코민테른집행위원회가 1925년 4월 17일에 창건된 조선공산당을 아직 정식으로 코민테른의 지부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조선해방운동의 혁명적 성격을 은폐하고 있지만 노동자·농민대중과 관계를 맺고 있는 종교적, 기타의 단체에 대해서 〈결정〉은 매우 신중할 것을 호소했다. 그리고 그들 속에 침투하여 그들의 혁명적 진출을 지지하고 노동자·농민들에게 타협주의의 근거없음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들을 제국주의에 대한 결정적인 투쟁의 길로 방향을 전환시킬 것을 호소하였다.⁸¹⁾ 이 부분은 화요파의 종교단체 등에 대한 ‘좌익’적 태도에 대한 코민테른의 비판으로 여겨진다.

화요파는 “종교는 유물론의 적이고 제국주의의 주창자이므로 분쇄하여야 한다”⁸²⁾는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서울파의 金榮萬과 崔昌益은 화요파의 이와 같은 태도의 구체적 예로서, 1925년 10월 기독교 주일학교 대표회의에서 화요파는 이러한 견해를 가지고 ‘반종교적’ 활동을 수행했고 그 결과 기독교 회의대표와 심각한 투쟁이 발생해서, 100명의 교인들이 신홍청년회 회관 앞에서 시위를 하는 일이 발생했으며, 1926년 1월 《동아일보》에는 신홍청년회 활동가에 응답하여, 그들은 더욱 열성적으로 반종교적 활동을 할 작정이라는 기사를 게재하였다는 예를 들고 있다.⁸³⁾

서울파는 화요파의 이러한 생각을 ‘좌익소아병’적 태도라고 비판하면서

79) 여기서 ‘합법적’이란 의미는 제도적인 합법성의 의미가 아니라 통일적이고 민주적인 당대회에 기초한 합법성을 뜻하는 것 같다.

80) Шабшина Ф. И., 앞의 책, 108쪽.

81) 위와 같음.

82) КимЕнман · Цой паник, 앞의 글, 110~111쪽.

83) 위와 같음.

“그들은 조선 종교의 외견상 존재하는 대중의 경제적·정치적 지위의 하층고 노예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조선혁명에서 이러한 대중의 역할을 고려하지도 보지도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종교의 가면을 쓴 혁명적 민족주의 분자 내부의 지하에 있는 민족혁명적 활동을 인정하지 않으며 민족혁명적 통일전선도 인정하지 않는다”⁸⁴⁾라고 하면서 화요파가 민족통일전선을 방해하고 파괴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3) ‘1·2차 조선공산당사건’과 조선공산당 2차당대회

1925년 11월 22일 조선공산당은 ‘신의주사건’(‘제1차조선공산당사건’)으로 당 중앙집행위원회의 대부분을 포함하여 약 30여 명의 지도부가 체포되기에 이르렀다. 이는 신의주의 한 식당에서 신만청년회 회원이면서 조선공산당 당원이었던 김경서 등이 친일변호사를 구타한 사건이었다. 그런데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고려공산청년회 대표인 박헌영이 조봉암에게 보내는 비밀문서가 드러나면서 조선공산당과 고려공산청년회의 조직이 드러나게 되었고 일제의 조선공산당에 대한 대대적인 검거선풍이 불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김재봉은 체포되기 직전인 1925년 12월 15일 중앙집행위원 김찬·주종건 등과 강달영을 임시 책임비서로 이준태·김철수·이봉수·홍남표 등을 중앙집행위원으로 하는 당조직의 재편을 단행하였다.⁸⁵⁾

한편 화요파 조선공산당은 1925년 말부터 1926년 5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서울과 고려공산동맹과 당통합 논의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당통합 원칙의 차이와 서울파의 지도자인 김사국의 죽음, 그리고 코민테른이 〈1926년 3월 결정〉을 통해서 화요파 조선공산당을 정식 코민테른의 지부로서 승인하자 화요파 조선공산당은 통합논의를 중단해버렸다. 이에 서울파 등 국내 사회주의 분파들은 결국 통일적 당건설에 대한 견해를 철회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부딪치게 되었다.⁸⁶⁾

84) 위와 같음.

85) 김준엽·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 2 (청계연구소, 1986), 377~385쪽.

86) 전명혁, 앞의 글(1998), 162~168쪽.

1926년 6·10 만세투쟁으로 인한 화요파 조선공산당에 대한 또 한 차례의 검거(2차조선공산당사건)는 화요파에 대한 치명적 타격을 주었다. 조선공산당은 1926년 6월 10일 조선의 마지막 황제 純宗의 장례식을 계기로 민중봉기를 계획하였다. 당시 고려공산청년회의 책임비서인 권오설의 주도하에 조선공산당은 ‘6·10투쟁특별위원회’를 두고 〈檄告文〉⁸⁷⁾·〈服喪 慟哭하는 민중에게 檄함!〉 등의 전단을 배포하여 일제에 대항하는 투쟁을 준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이 사전에 발각되어 조선공산당은 100여 명의 당원이 체포되었다. 1·2차 조선공산당 사건은 사실상 화요파 조선공산당의 와해를 가져왔다.

이 무렵 북경의 혁명사 출신의 梁明 등은 ‘분열된 운동선의 통일’을 위해 레닌주의동맹을 조직하고 서울파의 李廷允·李仁秀·李載夏 등이 참가하고 1926년 8월 동경 一月會 계열의 安光泉·河弼源 등이 가입하면서 ‘ML파’라는 새로운 사회주의 분파가 형성되었다.

1926년 9월 2일 ‘상해파’ 출신 김철수는 오희선·원우관 등과 회합하여 당 집행부서를 재정비하였다. 서울파 고려공산동맹은 조선공산당가입 문제를 둘러싸고 내부에 심각한 대립을 일으키고 마침내 화요파로의 통합을 반대하는 세력과 조선공산당에 가입하는 세력으로 분화되었다. 그러나 조선사회주의운동의 역사는 화요파를 대체하는 세력이 서울파가 아니라 ML파로 대체되는 과정으로 전개되었다.

조선공산당 임시책임비서 김철수는 11월 28일 중앙위원회를 열었다. 중앙

87) 대한독립당의 이름으로 배포된 이 〈격고문〉은 “현재 세계정세는 식민지 민중 대 제국주의 군벌의 투쟁과 무산자계급 대 자본가계급의 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제국주의 군벌에 대한 식민지 민중의 투쟁은 민족적 정치적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자본가계급에 대한 무산자 계급의 투쟁은 계급적 경제적 해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식민지에 있어서는 민족해방이 곧 계급해방이고 정치적 해방이 곧 경제적 해방이라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식민지 민족이 총체적으로 무산자계급이며 제국주의가 곧 자본주의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는 당면한 적인 침략군 일본으로부터 정치적 경제적 모든 권리를 탈환하지 않으면 죽음의 땅을 탈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제2차조선공산당검거보고철〉, 김준엽·김창순 편, 《한국공산주의운동사(자료편II)》,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1979, 58~59쪽).

위원회에는 禹丹宇(吳義善)·安光泉·權泰錫·金俊淵·梁明 등이 참여하였다. 중앙위원회는 1926년 12월 6일 당대회를 소집할 것과 대회에 출석할 대의원을 정하였다. 참여대의원은 당원분포 비례 및 기타 사정에 의하여 경기도 1인, 충청남북도 1인, 전라북도 1인, 전라남도 1인, 경상북도 1인, 경상남도 1인, 황해도 1인, 평안북도 1인, 평안남도 1인, 함경북도 1인, 함경남도 및 강원도 1인, 일본대표 1인, 고려공청 대표 1인 등 총계 13인으로 정하였다.

중앙위원회는 강령 및 규약의 확정 및 당면한 의안은 금번 대회에서 충분히 토의하기 곤란하므로 그것은 다음해(1927) 2월 8일 임시대회를 소집하여 결정하기로 하고 이번 대회에서는 중앙위원회에서 결정해 놓고 모든 운동방침을 승인받기로 하였다.⁸⁸⁾

마침내 1926년 12월 6일 조선공산당 2차당대회가 개최되었다. 2차당대회는 조선공산당 책임비서 김철수의 개회사로 시작하였다. 김철수는 파괴된 조직 및 질서를 근본적으로 정돈하고 확립하기 위하여 11월 16일 고려공산동맹을 가입시켜 당세의 확장이 이루어졌다는 것과 본대회의 대의원수가 너무 소수이지만 이 대의원들은 각 지방의 주요한 당원인 것과 더욱이 지금까지 분립되어 있던 운동이 통일되어 회집된 것으로 보아 조선혁명운동사상 가장 위대한 힘이 뭉친 모임이라고 말했다.⁸⁹⁾

대회는 대의원심사를 위해 심사위원 3인을 추천하여 鄭學先·하필원·姜錫奉을 선출하였다. 심사위원은 다음의 13인을 대의원으로 선출하였다. 대의원 13인 가운데 강석봉·장준·이인수는 서울과 고려공산동맹의 조직원으로 활동한 바 있었다.

경남 盧百容, 전남 姜錫奉, 경북 鄭學先, 전북 林赫根, 충남북 張堧, 경기 河弼源 황해 李仁秀, 평남 安昌壽, 평북 朴殷嫻, 함북 金永燮, 강원 徐載國, 동경 朴洛鍾, 高共靑 대표 金剛(〈朝鮮共產黨第二會定期大會 會議錄(1926년 12월 6

88) 〈朝鮮共產黨第二會定期大會 會議錄(1926년 12월 6일)〉(러시아현대사문서보관 연구센터, Ф.495 Оп.135 д.123), 72쪽.

89) 〈朝鮮共產黨第二會定期大會 會議錄(1926년 12월 6일)〉(러시아현대사문서보관 연구센터, Ф.495 Оп.135 д.123), 50쪽.

일)》, 러시아현대사문서보관연구센터, Ф.495 Оп.135 д.123, 51쪽).

대회는 먼저 〈민족운동에 관한 방침〉을 통해 ‘민족주의자의 정당을 형성’할 것을 결정하고 다음과 같은 방침을 정하였다.

㉓ 모든 정치적 운동을 단일기관으로 결과시킬 일. ㉔ 정당조직을 개인단위로 하고 지부제를 채용할 일. ㉕ 만일 兩翼으로 분리하고 말거든 양편에 각각 프락치를 두되 그 중에 가장 우세이고 또 활동이 가능한 자에 주력을 쓸 일. ㉖ 타락적 민족주의자(일본정부의 주구 및 그것에 유사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심사와 술책을 민중 앞에 폭로하여 구축을 기할 일(〈朝鮮共產黨第二會定期大會 會議錄(1926년 12월 6일)〉, 러시아현대사문서보관연구센터, Ф.495 Оп.135 д.123, 57쪽).

2차당대회에서 채택한 “민족주의자의 정당을 형성”한다는 결정은 1927년 2월 신간회의 결성으로 구체화된다. 대회는 또한 노동총동맹을 노동총동맹과 농민총동맹으로 분맹할 것과 노동쟁의 및 소작쟁의에 대한 구체적 전술을 세울 것을 결정하였다. 대회는 서울과의 조선사회단체중앙협의회를 “일시적 회합에 그치게 할 일”과 “정치운동 시인의 선언을 발표케 할 일”, “지방노동협의기관을 발달시킬 일”, “각 운동에 대한 논쟁을 제정케 할 일” 등을 결정하였다.

또한 대회는 “정우회와 전진회를 위시하여 재래의 모든 사상단체를 해체할 일, 그리하여 전위분자로 하여금 전국적 단일 표면적 정당에 가입케 하여 당의 직접 지도하에서 활동케 할 일”과 서울과의 “사회주의동맹에서 소집하게 된 사상(총)동맹은 성립치 못하게 할 일” 등을 결정했다.⁹⁰⁾

대회는 정학선·강석봉·하필원 3인을 중앙집행위원 및 중앙검사위원 전형을 위한 선거위원회로 하여 안광천·韓偉建·金俊淵·정학선·權泰錫·金南洙·하필원 등 7인을 중앙집행위원으로 선출하고 후보위원에 金泳植·安相吉·金世淵·양명·강석봉·張赤波(張日煥)·李丙儀 7인을 선출하였다. 또

90) 〈朝鮮共產黨第二會定期大會 會議錄(1926년 12월 6일)〉(러시아현대사문서보관연구센터, Ф.495 Оп.135 д.123), 58~61쪽.

중앙감사위원회에는 金炳璿·盧百容·林宗桓(林豹) 3인과 후보위원으로 朴泰善·朴洛鍾 2인을 선출했다.⁹¹⁾

한편 대회 하루 전인 12월 5일 조선공산당 산하 고려공산청년회 책임비서 양명은 중앙집행위원회를 소집하여 새로운 중앙집행위원을 선출하였다.⁹²⁾

正委員：河弼源·宋彦弼·高準·林炯日·金哲·趙杞勝·溫樂中
候補委員：金伊龍·金在明·都寬浩·李基錫·姜宇·金鎬般·韓林

김철수 책임비서 시기 共靑책임비서인 양명은 안광천 책임비서 시기를 맞아 일월회 출신의 하필원을 책임비서로 하는 고려공산청년회 중앙집행부서를 조직하였다. 이로써 1926년 12월 6일 조선공산당 2차당대회는 일월회 출신의 당책임비서인 안광천과 고려공산청년회 책임비서 하필원으로 진용을 갖추었다. 그러나 1926년 12월 6일 조선공산당 2차당 대회는 사실상 서울과의 전위조직인 고려공산동맹의 해체를 의미하였다.

(4) 조선공산당 3차당대회와 정치노선

1928년 2월 2일 ‘제3차 조선공산당사건’에서 검거를 피한 당원들이 중심이 되어 1928년 2월 27~28일 조선공산당의 마지막 당대회였던 3차당대회를 열었다. 당대회에는 전형위원으로 이경호·정백·이정윤을 선정했다. 이들은 노동자출신 車今奉을 책임비서·안광천·양명·한명찬·김재명·윤일·김한경·윤일·이성태 등으로 중앙집행위원을 구성했다. 그리고 안광천을 정치부장, 김한경을 조직부장으로 선출했다. 차금봉은 노동자 출신으로 1920년 조선노동공제회 창립 때부터 노동운동의 지도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었다.

대회는 규약을 개정하고 <코민테른 결정서>를 토의했다. <코민테른 결정서>는 1928년 1월 상해국제위원회으로부터 이정윤이 받은 것으로 파벌청산, 당을

91) <朝鮮共產黨第二會定期大會 會議錄(1926년 12월 6일)>(러시아현대사문서보관 연구센터, Ф.495 Оп.135 д.123), 79쪽.

92) <朝鮮共產黨第二會定期大會 會議錄(1926년 12월 6일)>(러시아현대사문서보관 연구센터, Ф.495 Оп.135 д.123), 64쪽.

노동자 출신으로 강화할 것, 공장·광산·철도 등에 당세포를 조직할 것, 산별 노조의 조직, 신간회를 프롤레타리아트의 요소로서 형성할 것 등을 지시했다. 조선공산당은 <결정서> 가운데 ‘파벌청산문제’에 대해서는 코민테른의 지시를 거부하고 “조선에서의 파쟁은 1927년 상반기 이후는 완전히 소멸되어 현재의 소당파는 전혀 비공산주의단체이므로 평화수단에 의한 해결의 필요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수정하여 가결했다.

대회는 코민테른에 보내는 보고서인 <국내정세에 관한 보고서>(〈논강〉)를 토의하고 승인했다. <보고서>는 29개항으로 구성되어 당시 조선의 정세분석과 혁명의 성격, 투쟁슬로건 등을 담고 있는 강령적 성격을 띠고 있다. <보고서> 7항의 “조선의 노동계급은 기억해야 한다. … 중국혁명은 위대한 교훈이고, 국민당은 그 좋은 예이다. 곧 부르주아지와 부르주아 인텔리겐치아는 매우 신뢰하기 어려운 동맹자이며 그들은 혁명운동의 결정적 순간에 이르러 이를 배반하는 자이다. 그러나 그것은 대중의 광범한 집단이 이 운동에 참가하고 사실상 혁명적 전술이 성립한 그때의 일이다”라는 부분은 1927년 장개석의 4·12 쿠데타로 인한 코민테른의 민족부르주아지, 즉 국민당에 대한 입장의 변화를 당시 조선공산당도 그대로 수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1928년 3월 조선공산당은 중앙집행위원회에서 <조선민족해방운동에 관한 테제>(〈정치논강〉)를 채택하였다. 이 테제는 안광천이 기초한 것으로 당시 조선의 혁명의 성격을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한 통일 전선의 위상에 대한 당시 서울파의 이항발의 견해를 ‘좌익소아병적 견해’로 권태석과 장일성(신일용)의 견해를 ‘청산주의적 견해’로 비판하고 있다. 이 테제에서는 “조선의 장래 권력형태는 조선사회의 정세에 기초한 혁명적 인민공화국이어야 한다. 조선에 소비에트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은 좌익소아병적 견해이고 부르주아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은 우경적 견해”라고 하면서 “조선의 장래 권력조직은 조선사회의 실정에 기초한 혁명적 인민공화국에 있어야 한다”고 ‘인민공화국’을 권력형태로 상정하고 있다. 이는 2월의 당대회에서 채택한 <보고서>의 9항에서 “현재 광범한 프롤레타리아계급의 앞에 소비에트 공화국을 건설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시민적 공화국을 건설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투쟁은 노동대중의 민주주의적 집권자를 갖는 인민공화국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혁명적)인민공화국’이란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치적 내용을 갖는 것일까. 조선공산당의 <보고서> 10항에는 “조직적 국민 회의는 보통선거권 위에 소집되어야 한다. 각도에서도 각각의 방법으로 도인 민회의가 선출되어야 한다. 각 촌에서는 농민 및 소작인으로 이루어진 농민 소비에트가 선출되어야 한다”는 부분이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은 연구자마다 상이한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동수는 이 내용을 “보통선거에 기초한 대표기관과 생산지역을 중심으로 조직되는 소비에트를 기반으로 성립하는 국가”인 혁명적 인민공화국으로 파악한다. 그는 “이것은 부르주아지의 정치참여를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 농촌소비에트를 통해 그들을 견제하고자 한 것으로, 이 방침은 부르주아지·소부르주아지 상층을 민족해방운동 속으로 적극적으로 포섭하기 위한 고려에서 나온 것”이었고 “결국 조선공산당이 상정한 혁명적 인민공화국은 노동소비에트국가를 현단계에서 건설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는 인식하에서 노동소비에트국가의 전단계로 설정된 과도적 중간정부”였다고 해석한다.⁹³⁾

임경석은 우동수의 견해는 1935년 코민테른 7차대회 이후 제기된 ‘인민공화국’ 슬로건에 대한 설명으로는 타당하지만 당시 정황으로는 설득력이 없다고 하면서 당시 조공은 “민주주의 혁명강령에 입각해 있었고 4대계급의 동맹에 기초한 통일전선전술을 취하고 있었으며, 나아가 통일전선에서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의 직접적 전취를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혁명적 인민공화국이란 “노동민주독재의 국가형태로서 제시된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그는 조공의 이와 같은 ‘통일전선정권론’이 1928년 <12월테제> 이후 3계급동맹에 기초한 ‘소비에트슬로건’으로 변화했고 이것은 “종전의 민족통일전선 정책을 사실상 폐기하고 민족주의 고립화론을 채택케하는 역할을 했다”고 한다.⁹⁴⁾

93) 우동수, <1920년대말~30년대 한국사회주의자들의 신국가건설론> (《한국사연구》 72, 1991), 106쪽.

94) 임경석, <일제하 공산주의자들의 국가건설론> (《大東文化研究》 27, 1992), 217~219쪽.

김승은 <정치논쟁>을 기초한 안광천은 코민테른 제8차 확대집행위의 <중국문제에 관한 결의>(1927년 5월 30일)에 의거하여 ‘혁명적인인민공화국’을 중국의 무한정부와 같은 권력형태로 상정했다고 한다. 그는 <중국문제에 관한 결의>에서 “무한정부를 소비에트로 이행해 가는 과정에서 일반민주주의 개혁을 단행하는 과도단계의 권력형태로 파악”하였고, 따라서 “‘혁명적인인민공화국’ 역시 노동소비에트로 이행하기 위한 전단계의 전술적 권력형태였다”고 파악하고 있다.⁹⁵⁾

또한 서중석은 인민공화국의 성격을 “보통선거에 의해 국민회의—도인민회의—노동소비에트의 실현을 주장한 것으로 보아 중앙정부형태는 부르주아 민주공화국에 가깝고, 지방정권은 인민위원회 또는 소비에트에 가까운 것”으로 파악한다.⁹⁶⁾

이와 같이 인민공화국의 정치적 내용에 대한 여러 연구자들의 분석은 상이하지만 각각의 연구는 ‘사실’에 대한 일단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는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질 수가 있다.

먼저 우동수와 김승이 노동소비에트의 과도단계로서 상정하고 있는 ‘중간정부’와 ‘전술적 권력형태’는 부르주아혁명에서 사회주의혁명으로 성장, 전화한다는 2단계혁명론에서 말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의 과정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소비에트정부의 수립과 시민적 부르주아정부의 수립을 각각 좌·우편향으로 비판하면서 조공이 권력형태로 제기한 인민공화국은 아마도 프롤레타리아독재와 부르주아권력의 중간적 형태로서 ‘노농의 혁명적 민주주의적 독재’를 상정하는 것 같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혁명의 과정은 중간적 과정, 즉 제3의 길을 허용하지 않았다. 부르주아독재인가, 프롤레타리아독재인가 하는 두 가지 길만이 있을 뿐이다. 따라서 ‘노농의 혁명적 민주주의적 독재’라는 슬로건은 화합될 수 없는 두 가지 길을 절충하려고 했던 시도였다. 당시 <정

95) 김 승, <신간회 위상을 둘러싼 ‘양당론’·‘청산론’ 논쟁연구>(《釜大史學》 17, 1993), 558쪽.

96) 서중석, <해방후 주요정치세력의 국가건설방안>(《大東文化研究》 27, 1992), 234~235쪽.

치논강)의 내용을 볼 때 조공은 결국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1단계)의 과정을 거친 후에 사회주의혁명(2단계)으로 순차적으로 발전한다는 단계적 과정으로 인식하였다. 이러한 2단계혁명론은 당시 코민테른과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에게는 ‘철의 원칙’이었다.

그러나 부르주아민주주의혁명의 기본적인 과제, 조공의 슬로건에서도 제기되어 있는 토지혁명을 비롯한 노동자와 농민의 기본적 권리보장 등의 해결은 그것의 완수와 동시에 연속적인 혁명의 과정을 수반하게 된다. 또한 부르주아민주주의적 과제의 완성은 사회주의혁명의 과정 속에서 완수될 수 있는 것이었다.

노동계급이 농민의 지지를 받아 권력을 장악하면 그 권력은 부르주아혁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수립하는 사회주의혁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 프롤레타리아독재와 대립되는 민주주의독재의 이론은 결국 정치에 환상과 허구를 끌어들이고 동양의 프롤레타리아의 권력장악투쟁을 마비시키며 식민지 혁명의 승리를 속박하게 되는 것이다. 1925~1927년 중국혁명의 과정은 이러한 과정을 비극적으로 증명하였다.

4) 조선공산당의 해체와 당재건운동

(1) 조선공산당의 해체와 〈12월테제〉·〈9월테제〉

조선공산당은 1928년 7월부터 10월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인 일제의 검거로 책임비서 차금봉이 구속되는 등 조직이 와해되었고 코민테른의 〈12월테제〉의 지침에 따라 노동자와 빈농에 기초한 당 재건운동으로 나아가게 된다.

미즈노 나오키(水野直樹)는 코민테른의 제1~7차 대회에 참가한 조선인 사회주의자와 그들의 조직을 분석하고, 각 시기 조선의 혁명노선과 코민테른의 관련을 분석하면서 〈12월테제〉 채택 이전인 1928년 11월 경 코민테른 집행위원회의 〈조선공산당조직문제에 대한결정〉(이하 〈결정〉으로 줄임)에서 이미 6차대회의 코민테른 지부승인을 취소하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언급한다.⁹⁷⁾

97) 水野直樹, 〈코민테른과 조선-각 대회의 조선대표의 검토를 중심으로〉(《조선

코민테른의 〈결정〉에 대해 무라다(村田)는 “이 결정은 때때로 코민테른이 조선공산당의 승인을 취소한 문서처럼 해석되어 왔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제6회 대회가 명시적으로 조선공산당을 지부로서 승인하고 있는 것으로도 명확하다. 서로 싸우는 분파의 누구도 당의 대표로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서술하여 당의 통일의 조급한 실현을 요구한 것에 다르아니다”⁹⁸⁾라고 코민테른의 입장을 변호론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인덕은 〈결정〉에서 “조선의 어느 공산주의자 그룹도 국제당 지부로 승인 할 수 없다”는 내용은 분명히 “조공을 해산시킨 지부승인 취소의 내용이 었다”라고 평가한다. 그는 이어서 코민테른의 〈12월테제〉는 조선공산주의운동에서 과별적 요소의 잔존, 조직구성에서 지식계급·학생중심의 편향, 주역자의 조직활동의 불철저성을 지적한 점에서 올바르지만 당시 조선의 정세에 부합하지 않는 편향을 범했다고 평가하고 있다.⁹⁹⁾

이균영은 〈코민테른 강령〉과 코민테른 6차대회에서 쿠시넨이 기초한 〈식민지·반식민지국가의 혁명운동에 관한 테제〉·〈12월테제〉·〈9월테제〉 등을 분석하면서 “1926년 4월 코민테른 간부회의에서 점정적으로 가입을 승인받았던 조공은 제6회 대회에서 정식 코민테른 지부로 승인되었”고, 〈결정〉 역시 조공의 승인취소를 결정한 문서는 아니었다고 해석한다. 또한 그는 〈12월테제〉는 “조공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해체를 지시한 것이 아니라 … (이를) 전제로 한 조공의 재건지침이었다”고 말한다.¹⁰⁰⁾

1928년 12월 10일 코민테른 집행위원회 정치서기국에서 결의한 〈조선의 농민 및 노동자의 임무에 관한 결의〉(〈12월테제〉)는 코민테른 6차대회의 〈식민지 반식민지 국가들에서의 혁명운동에 대하여〉(〈쿠시넨테제〉)가 그대로 반

민족운동사연구》1, 1984).

임영태 편, 《식민지시대 한국사회와 운동》(사계절, 1985), 338쪽.

98) 村田陽一 편, 《코민테른자료집》4(대월서점, 1981), 608쪽.

99) 김인덕, 〈조선공산당의 투쟁과 해산〉(《일제하사회주의운동사》, 한길사, 1991), 79~81쪽.

100) 이균영, 〈코민테른 제6회대회와 식민지 조선의 민족문제〉(《역사와 현실》7, 1992), 312~314쪽.

영되어 있었다.

그 내용은 첫째 조선혁명은 “종래의 자본주의적 존속을 파괴하고 토지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조하고 자본주의적 압박으로부터 토지를 해방하는”, 즉 제국주의의 타도와 토지문제의 혁명적 해결을 주내용으로 하는 ‘부르주아 민주주의혁명’이라고 규정했다. 둘째 혁명의 동력은 선도적 역할을 증대시킬 노동자계급, 특히 공장노동자·곤궁한 농민(농업노동자)·도시 소부르주아지이고 부르주아지는 기껏해야 민족개량주의적 반대운동을 일으키고 있으며 대지주들은 일제와 완전히 결합하기에 이르렀다. 셋째 조선의 민족해방운동은 프롤레타리아트의 헤게모니하에서 제국주의의 탄압을 이겨냄으로써 토지문제의 혁명적 해결, 농민주독재의 수립(소비에트의 형식), 나아가 부르주아지 혁명은 프롤레타리아트 헤게모니하에서 사회주의 혁명으로 전화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2단계 혁명론이라고 밝히고 있다. 넷째 조선 공산주의 운동의 주요방침은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운동을 강화하여 부르주아지의 민족혁명운동에 대해서는 그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는 한편, 민족혁명운동에 계급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타협적인 민족개량주의로부터 분리시킴으로써 민족혁명운동을 강화해야 하는, 즉 부르주아지 민주주의 운동으로부터 이러한 운동의 필요를 지속적으로 그리고 무자비하게 폭로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코민테른의 <12월테제>는 결국 파벌싸움을 이유로 조선공산당에 대한 승인을 취소하고 노동자·농민에 기초한 당의 재건을 지령하였다. 이러한 새로운 요구는 프로핀테른(Profintern)의 <9월테제>(〈조선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의 임무에 관한 테제〉) 프로핀테른 산하 범태평양노동조합의 <10월서신>(〈조선의 범태평양 노동조합 비서부 지지자에 대한 동비서부의 서신〉) 등 국제 혁명지도기관에 의해 노선적으로 뒷받침되고 고무되었다.

1930년 9월 18일 프로핀테른(적색노조인터) 집행사무국에서 채택한 <9월테제>는 원산총파업 이래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투쟁이 격화되고 있지만 조선노동총동맹은 노동자들의 자연발생적 투쟁을 목적의식적으로 올바르게 지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그 주요 이유는 조선노동총동맹이 개량적 지도부에 의해서 지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프롤레타리아트가 자신의

독자적인 혁명적 노동조합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 등이었다. 그러므로 프로핀테른 지지자들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공고한 혁명적 당이 부재하고 그에 준하는 ‘좌익조직’이 전혀 없는 조건에서 기존의 노동조합 내부에 좌익을 집결시켜 그 주도권을 장악하여 산업별 혁명적 노동조합으로 개편하고, 노동조합이 없는 곳에서는 새로운 혁명적 노동조합을 산업별 조직 원칙에 입각하여 건설해야 한다는 것 등을 지적했다.

〈9월테제〉의 주요내용은 첫째 “조선에서의 혁명적 노동운동을 강화할 것과 그것을 위해서는 민족개량주의와의 투쟁이 불가피하다”라는 것을 채택하여 조선의 공산주의자에게 제시했다. 둘째 〈12월테제〉의 기본방침(조공제건)을 기본적으로 따르면서 1929년 세계대공황이 일본의 경제에 미친 영향과 그에 따라 새롭게 변화된 조선의 노동자·농민과의 관계를 고려한 위에서 조선 노동운동의 당면 임무를 제시했다. 셋째 일제와의 민족해방투쟁을 통해 혁명적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이를 기반으로 조공을 새롭게 건설할 것을 강조했다고 할 수 있다. 총 8개조 17개 항목 가운데 특히 주목할 것은 신간회를 ‘민족개량주의 조직’으로 간주한 부분이었다. 코민테른은 신간회에 대해 언급하면서 당시 조선의 민족개량주의적 부르주아지는 일제의 자치제 약속에 매수되어 “조선혁명의 방과제 역할을 하며 《동아일보》·《조선일보》와 천도교 및 신간회는 학생들의 동맹휴학 및 노동자의 시위운동에 사보타지 정책을 펴는” ‘민족개량주의 단체’라고 규정하였다.

〈12월테제〉는 명시적으로 조공의 해체를 지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코민테른이 제시한 노동자·농민에 기초한 당제건의 과제는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에게는 과도한 요구였다. 따라서 많은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에게 이것은 실질적인 조공의 해체지침으로 받아들여졌다. 이후 코민테른의 일국일당주의에 따라 1930년 3월에 조공의 만주총국이, 31년 10월에 일본총국이 각각 해체되었다.

〈12월테제〉의 내용해석은 코민테른 6차대회의 전체적 기초, 즉 자본주의의 전반적 위기테제라는 낙관적 정세론과 사민주의를 사회파시스트로 규정하는 당시 스탈린주의화된 코민테른에 대한 정확한 이해 속에서 가능할 것

이다. 코민테른은 1928년 <12월테제>에서 조선공산당의 파벌문제와 소부르주아 지식인 중심의 당 등의 이유로 실질적인 해체지시와 다름없는 노동자·농민에 기초한 새로운 당건설 방침을 지시하였다.

당시 조공사건으로 체포된 당원들의 직업별 구성을 보면 소부르주아(지식인·학생·상인 등)의 비율이 42.4%, 농민이 13%, 노동자 11.6%, 무직 29% 기타 4% 등으로 노동자계급의 비율이 매우 열악함을 알 수 있다. 혁명정당은 노동자계급의 당이므로 구성원 대다수가 노동자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아직은 계급에 뿌리내리는 걸음을 시작한 조선공산당에게 이러한 요구는 과도했다.

또한 당내의 파벌문제는 불가피한 것이었다. 노동자계급의 의식이 불균등하게 발전하는 현실 속에서 획일적인 당을 기대하는 것은 변화하는 현실을 기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이었다. 1928년 12월 코민테른의 <12월테제>가 발표된 이후 조선공산당은 해체되고 ‘대중 속으로’·‘인민 속으로’라는 슬로건 속에서 당재건운동에 주력하게 되었다.

(2) 1920년대 말 당재건운동

1929년 세계자본주의체제는 대공황을 맞게 되면서 위기적 상황에 처하였다. 일본제국주의는 자국의 공황을 타개하기 위해 파쇼군벌체제를 강화하여 국내의 혁명운동에 대한 탄압을 더욱 강화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1929년 원산총파업을 계기로 전국 각지에서 노동자·농민들의 대중적인 투쟁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부산방직공장의 파업, 함남 신흥군의 장풍탄광노동자의 파업, 평양고무노동자 총파업, 평북 용천군 불이흥업주식회사 서선농장 2,000여 농민들의 소작투쟁, 함남 단천군 농민폭동 등 대규모 투쟁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정세 속에서 조선공산주의 각 분파는 코민테른의 <12월테제>에 의거 사실상 조선공산당이 해체된 이후, 노동자·농민에 입각한 대중적 당재건을 위한 모색을 시작하였다.

가. ‘서상파’의 당재건운동

김규열·이동휘는 블라디보스톡에서 김철수·윤자영·김일수·김영만·김영식·안상훈 등과 만나 당재건방침을 협의하고 1929년 3월 만주 吉林省을 중심으로 조선공산당재건설준비위원회 발기회를 조직하였다. 이들은 1929년 6월 20일 길림에서 재건준비회 발기회를 재건준비회로 개조하고 당재건에 박차를 가했다.

이들은 전국열성자대회를 소집하여 열성자대회에서 재건설과정에 있는 정치적·조직적 전국적 중앙을 산출할 것 등을 결의하고 기관지로서 《볼세비키》를 대중기관지로서 《노력자신문》을 발행하고 조선공산당 재조직문제, 전략과 전술문제, 토지혁명 등에 관한 기사를 싣고 당재건방침을 밝혔다. 1929년 8월에 김영만을 태평양노동조합대회에 파견하고 1929년 12월 말 김철수를 준비위원회 대표로 국내에 파견했다. 김철수가 국내에 파견됨으로써 준비위원회 대표는 윤자영으로 교체했다. 1929년 12월 말에는 코민테른에 김규열을 파견했다.¹⁰¹⁾

서울 상해파(서상파)의 조선공산당재건설준비위원회는 1930년 6월에 김일수를 조선에 파견하고 평양·경성·함흥·청진 등 주요 도시 및 산업지대의 공장과 농촌 각 지역에 지역책임자를 파견하여 당과 공산청년회 그리고 적색노동조합의 세포를 조직하려는 활동을 하였다. 그러나 코민테른이 1930년 6월 12일 “조선공산당재건설준비회를 해체할 것, 소속 야체이카를 국제당 대표에게 넘길 것, 중국 지방에 있는 단체 및 시설은 전부 중국 당간부에게 넘길 것” 등을 지시한 사실을 알고 1931년 3월 21일 김일수·윤자영·오성세 등은 준비위원회를 해산할 것을 결정하고 조직을 조선좌익노동조합전국평의회준비회로 하여 사실상 당재건운동을 계속할 것을 결의했다.

나. ‘ML파’의 당재건운동

1929년 5월 31일 구‘ML파’ 멤버들인 한해·이경호·한빈·양명·고광수·한위건 등은 길림에서 ‘조선공산당재조직중앙간부회’를 결성하고 조선공산당

101) 최규진, 《코민테른 6차대회와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정치사상연구》(성균관대 박사학위논문, 1997), 155~159쪽.

을 재건하려는 활동을 시작했다.

이들 그룹은 1929년 모스크바 공산대학을 졸업한 화요파 출신인 박용선을 국내에 파견한다. 박용선은 부산에 도착하여 부산방직공장·부산瓦電주식회사·竹梁철도공장·부산철공조합 등에 프락션을 두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들은 부산 시내에 비밀연구반을 두고 일본 좌익잡지 《인터내셔널》·《戰旗》·《산업노동시보》 등을 탐독하며 다른 지방의 파업투쟁 등이 일어났을 때 물질적·정신적 원조를 하였다.¹⁰²⁾

이들의 활동은 한해·한빈·고광수 등의 체포로 중단되고 말았지만 양명·한위건 등이 중심이 되어 상해에서 기관지 《계급투쟁》을 발행하고 동경에서 상해로 합류한 고경흠 등과 당재건 방향을 협의하여 1931년 2월 무렵 ‘조선공산당재건설동맹’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재건설동맹도 〈12월테제〉의 해석을 둘러싼 당재건방침의 차이로 1931년 4월 해산하고 1931년 7월에 조선공산주의자재건협의회를 만들었다. ‘협의회’는 중앙집권주의를 강조하고 전국 각지에 적색노조·농조·독서회·사회과학연구회·반제동맹 등 조직체를 만들고 활동하다가 1932년 3월 권대형 등 18명이 구속되면서 와해되었다.

다. 화요파의 당재건운동

모스크바 공산대학출신이며 과거 화요파 출신인 김단야·김정하·권오직 등은 귀국하여 1929년 11월 6일 서울에서 채규항·박민영 등과 ‘조선공산당 재조직준비위원회’를 결성한다. 이들은 조직부—김단야, 조사부—채규항, 선전부—권오직·김정하, 연락부—박민영 등으로 하는 조직체계를 갖추고 경성·원산·부산·평양·목포·함흥·마산·청진·웅기·신의주 등지에 기본당원을 배치하고 새로 입국할 공산대학 졸업생을 파견하여 지방 당기관을 설치하기로 했다.¹⁰³⁾

1930년 1월 권오직·채규항·박민 등은 부산방직회사 동맹파업을 선동하

102) 최규진, 위의 책, 174쪽.

103) 堀内稔, 〈조선공산당재건운동〉(並木眞人 외 《1930년대 민족해방운동》, 거름, 1984), 302쪽.

고 인천 加藤정미소의 파업투쟁을 적극 원조할 것을 협의하여 조직원을 현장에 보내고 전국 노동단체에 격문을 보내어 파업기금을 모으는 등 활동을 했다. 그러나 1930년 3·1운동 11주년 기념 격문이 단서가 되어 이들은 대부분 체포되어 활동이 중단되고 말았다.

이후 블라디보스톡 등지에서 활동하던 김단야 등은 1931년 3월 박헌영과 《콤무니스트》 창간호를 발간하여 ‘코민테른을 지지하고 분파주의에 맞서는 무기’로서의 역할과 ‘부분적 요구를 전체 요구에 종속시키며 다수의 투쟁을 상호연결시켜 공동투쟁으로 전개하고 국내운동을 국제적 투쟁과 연결시킬 볼셰비키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1931년 3월부터 1932년 7월 무렵까지 《콤무니스트》 7호를 발간한 ‘콤무니스트그룹’은 조선공산당조직준비위원회 시기의 당재건 노선인 공장세포(공산주의자 소그룹·독서회) → 시위원회 → 지역위원회(지역당조직, 지역별 공산주의자단위) → 전국협의회 → 조선공산당재건 이라는 방침을 그대로 고수하였다.¹⁰⁴⁾

이와 같이 1925년 4월 창건되어 1928년 12월 해체된 조선공산당의 재건을 위한 각 분파들의 당재건운동은 1945년 해방이 되기까지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를 거듭했지만 1920년대 말부터 1930년대 말에 이르는 당재건 운동의 결과는 1945년 8월 해방 직후 박헌영 등 과거 화요파가 중심이 된 ‘조선공산당재건준비위원회’를 통한 조선공산당의 재건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全明赫〉

104) 최규진, 앞의 책, 211쪽.